

제1회 IPUS 평화캠프

‘한반도에서 평화만들기’

일시 2013.2.14(목)~16(토)

장소 경기도 가평 ‘바람과 물 연구소’



IPUS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HK 평화인문학연구단



일정표



첫째날, 2.14(목)

- 12:00 서울대 정문 앞 집결 및 출발 (버스로 단체 이동, 점심 준비)
- 15:00~15:20 일정소개

<평화인문학과의 만남>

- 15:20~18:30 평화인문학의 주제들: 국가폭력과 화해, 종교와 문화 이찬수, 김성철, 이문영 (IPUS)
- 18:30~20:00 저녁식사 및 휴식
- 20:00~21:00 환영연 및 자기소개

둘째날, 2.15(금)

<평화현장과의 만남>

- 09:30~10:20 유네스코와 평화 임현묵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평화발전연구소)
- 10:30~11:20 인권 현장에서 본 평화 오창익 (인권연대)
- 11:40~12:30 국경에서 평화만들기 정지석 (평화의 씨앗, 국경선평화학교)
- 12:30~15:00 점심식사 및 산책

<평화학워크숍>

- 15:00~16:30 평화이론들: 민주주의, 폭력, 문명화와 평화 이동기, 송영훈 (IPUS)
- 16:50~18:30 그룹별 진행 (참가자 주제발표 및 토론) *주제에 따라 두 개의 그룹으로 분반 토론
- 18:30~20:00 저녁식사 및 휴식
- 20:00~21:30 평화의 순간들 *참가자들 각자 10분 동안 평화와 관련된 다양한 생애사적 계기나 권장 작품들 (체험, 사건, 도서, 인물, 영상, 음악, 사진 등) 소개 시간

셋째날, 2.16(토)

<평화 100분 토론과 평가>

- 09:20~11:00 <100분 토론> 한반도에서 평화만들기의 현황과 평화인문학을 위한 제언
*50분 패널 토론 후 50분 전체 토론
- 11:20~12:30 평가 및 수료식
- 12:30~13:30 점심식사 및 서울로 출발 (버스로 단체 이동)



목 차



HK평화인문학연구단 아젠다 06

평화인문학과의 만남

평화학과 종교가 만나는 지점 11
이찬수 (IPUS)

국가폭력과 화해 25
김성철 (IPUS)

평화 연구와 문화 연구 75
이문영 (IPUS)

평화현장과의 만남

동북아 평화를 위한 유네스코의 기여: 역사대화를 중심으로 89
임현묵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평화발전연구소)

인권 현장에서 본 평화 99
오창익 (인권연대)

철원 비전과 남북한 평화 통일 운동 105
정지석 (평화의 씨앗, 국경선평화학교)

평화학워크숍

디터 쟁하스의 평화론: 복합구성과 문명화 113
이동기 (IPUS)

민주평화론에 대한 이해 121
송영훈 (IPUS)

HK평화인문학연구단 아젠다

본 연구 사업은 한국사회에 필요한 미래비전으로서의 평화(peace)를 종합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다학제적, 융합적 연구 프로젝트이다. '21세기 녹색한반도를 위한 평화인문학'을 주제로 하는 이 연구는 한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생태론적 문제의식까지 포괄하는 문명론적 평화연구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이에 필요한 담론과 제도, 가치와 문화의 창출을 지향하고자 한다.

우선, 본 연구사업이 지향하는 평화인문학은 20세기까지의 역사적 경험에 대한 분석에 바탕하되 21세기 미래를 바라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려는 가치지향적 전망을 포괄하는 융합적 연구가 될 것이다. 전쟁방지와 분쟁해결에 주목했던 초기 평화학이 현실과 학적 분석과 예측에 주력했던 것과는 달리 본 연구는 인간의 심성, 가치와 정서, 담론과 습관의 차원까지 포괄하는 인간활동의 전영역에서 평화를 탐구하는 평화인문학을 지향한다. 평화를 주로 전쟁억지의 관점에서 바라보던 전통적 시각이 국가 간 관계에 주목한데 비해 이 사업이 지향하는 평화학은 평화를 모든 형태의 폭력과 위협과 연관시켜 광범위하게 검토하고자 하며, 국가 이외의 개인과 공동체, 문명과 담론질서까지를 연구의 대상에 포괄하고자 한다. 당연히 평화를 구체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못지 않게 그것을 가능케 할 철학적 사유, 예술적 상상력, 종교적 가치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사업은 전세계에서 진행되는 평화 연구의 흐름과 한반도의 특수한 조건을 연결해 '21세기 한반도발 평화론'을 구성하고자 한다. 평화는 기본적으로 지구보편적 가치이고 이미 유럽을 비롯한 전세계에서 많은 연구와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는 주제이지만 그 논의 속에 현재 한반도가 겪고 있는 조건들이 충분히 녹아있지는 못하다.

따라서 그러한 논의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되 이를 한반도 상황에 적용하기 위한 창조적 변형작업이 불가피하다. 한반도에 필요한 평화는 남북 분단의 구조와 이와 연관된 한반도 주민들의 삶의 조건과 결합되어야만 비로소 구체성을 획득할 수 있다. 나아가 한반도의 특수한 조건을 통해 강대국 중심이 아닌 중간규모 국가의 차원에서 논의되는 새로운 평화론의 세계화를 추구할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남북한의 지배 이데올로기, 대결구조, 평화체제 논의 등을 이해함과 동시에 우리 사회의 문화, 가치, 생활양식, 담론, 습관과 사유의 틀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수행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사업이 평화인문학은 현실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학적 함의와 중장기적인 가치형성, 문화 창조, 비전구축의 상호연관성에 주목함으로써 사회과학적 분석과 인문학적 상상력의 창조적 결합을 이루고자 한다. 한반도 현실에서 평화론은 불가피하게 통일, 안보, 군축, 비핵화 등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차원과 떨어질 수 없으며 따라서 현실과학적 성격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 차원에만 머물러서는 평화학의 발전에도 한계가 있을뿐더러 실천적 차원에서도 단기적인 대응론에 한정될 우려가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평화학은 보다 장기적인 전망, 종합적 구상, 문명론적 실천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역사적 비전이며 이는 인간의 제조건을 고려하는 인문학적 상상력에 바탕을 두어야만 얻어지는 큰 그림이다.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 종교 간의 공존, 다른 정체성에 대한 관용, 생태적인 평화 형성, 성별 평화 등은 물론이고 기후변화나 광우병, 테러리즘과 정체성위기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문명적 대안형성도 연구의 내용에 포괄될 것이다. 이런 종합적 평화연구를 통해 테러리즘의 위협과 생태환경의 위기, 기술합리성의 부작용 등이 커지고 있는 시대적 조건 속에서 한반도에 새로이 요청되는 21세기형 인문학의 창출에 기여하고자 한다.



평화인문학과의 만남

- 평화학과 종교가 만나는 지점
이찬수 (IPUS)
 - 국가폭력과 화해
김성철 (IPUS)
 - 평화 연구와 문화 연구
이문영 (IPUS)
-

평화학과 종교가 만나는 지점

이 찬 수 (IPUS)

1. 들어가는 말

평화학(Peace Studies)의 주제는 평화이다. 종교학(Religious Studies)의 대상은 종교이다. ‘종교’에 해당하는 라틴어 religio의 어의 가운데 하나가 “(신과의) 재(re)결합(ligāre)”이고, 한자 宗教는 “최상의(宗) 가르침(教)”이다. religio와 宗教의 공통점을 간추려 재정의하면, 종교는 “신을 만난 혹은 진리를 깨달은 최고의 상태” 또는 그 상태에 대한 가르침[教]이 된다. 신을 만난 또는 진리를 깨달은 상태가 언어화되고 그에 동의하며 모인 이들을 중심으로 조직과 제도가 형성된다. 그에 따라 ‘초월적 실재를 신앙하는 이들의 조직이나 제도’라는 일반적인 종교 관도 형성된 것이다.

이 때 제도나 조직으로서의 종교를 일차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인간의 깊은 경험에 대한 언어적 표현, 그런 의미의 ‘최상의 가르침’이다. 그리고 그 최상의 가르침의 실질적인 내용이 개인적 차원의 평화와 관련되어 있고, 보편적 내지 우주적 차원의 평화를 상상하고 지향한다는 데에 별다른 이견은 없다. 이 글에서 말하는 평화는, 평화학자들이 흔히 말하듯이, 직접적이고 구조적인 폭력 내지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폭력이 없이, 개인과 사회 안에 조화적 정의가 이루어진 상태를 의미한다.

평화학에서는 이러한 평화를 대체로 사회 정치적인 차원에서 상상하고 분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비해, 종교에서의 평화는 개인적이거나 사회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주적이기도 할 정도로 광범위하다. 이 ‘평화’를 제도화된 종교에서는 저마다의 교학(敎學)에 근거해 정당화하고 지향하고 구현해내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종교에서 말하는 평화가 평화학의 주제인 평화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가능한

종교철학적, 제종교의 교학적 시각을 견지하며 두루 정리하고자 한다. 종교에서의 평화의 범주가 워낙 넓은 탓에, 가능한대로 평화학과 종교 모두에 공통되는 평화 개념을 중심으로 하되, 평화학과 종교가 어떻게 평화를 지향하고 구현하려 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구조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말해보고자 한다.

2. 근대적 종교관과 종교 갈등의 원인

1) 종교의 두 측면

종교학적으로 보건대 종교에는 내적인 측면과 외적인 측면이 있다. 흔히 종교라는 말로 교회나 절과 같은 건물, 신부나 스님 같은 신분의 사람들, 경전이나 교리 같은 언어 체계들, 기도하고 찬송하는 의례나 선교 행위와 같이 가시적인 어떤 모습을 연상하는 경향이 있다. 가시적인 이 부분들이 종교의 외적 측면이다.

하지만, 종교학자 윌프레드 캔트웰 스미스(Wilfred Cantwell Smith)가 강조했듯이, 간과해서는 안 될 종교의 핵심은 그 가시적 측면의 원천, 즉 내적 신앙(faith)이다. 스미스는 종교의 역사적이고 가시적 측면을 ‘축적적 전통’(cumulative tradition)이라 부르면서, ‘초월의 세계와 교감할 수 있는 인간의 내적이고 보편적 자질’로서의 ‘신앙’(faith)과 구분한다. 그러면서 그 내적 신앙을 종교의 핵심으로 중시한다. 역사적으로 전승되어 온 외적 전통은 종교의 가시적 측면이기는 하되, 종교 자체이거나 종교의 전부는 아니기 때문이다.

‘사랑한다’며 입에서 나온 말이 그저 말뿐일 수도 있듯이, 언어화한 교리나 제도화한 집단 자체를 종교의 본질 혹은 전체와 단순 동일시할 수는 없다. 외적 전통과 내적 신앙이 종교의 두 측면이되, 핵심이자 근원은 역시 내적 신앙에 있다고 스미스는 말한다. 신앙을 보지 못하면 종교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 스미스 종교론의 골자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강의에서 중시하는 종교관이기도 하다.

2) 종교 갈등의 원인

실제로 조직이나 제도, 언어화된 교리적 표현 자체를 종교의 핵심 또는 진리 전체로 간주하다 보면, 표현상의 차이를 진리의 차이와 동일시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표현상의 차이를 진리의 우열로 둔갑시키고, 자기 우월성의 근거로 삼다가, 갈등을 조장하고 발생시키기도 한다. 급기야 분쟁의 원인으로까지 작용하기도 한다. 종교로 인한 갈등이나 분쟁의 주요 원인은 외적

표현을 진리의 일부로서가 아닌, 진리 자체 혹은 전체로 오해하는 데서 비롯될 때가 많다.

제도화된 종교들의 외적 양상들은 필연적으로 역사 내 종속적일 수밖에 없으며, 표현 양식은 그 자체로 다원적일 수 밖에 없지만, 기성 종교인들 중에는 외적 표현과 내적 신앙을 구분하지 못한 채, 외적 표현을 우주적 진리 자체 혹은 전체로 간주하는 이들도 많다. 이들은 초월에 대한 관심이 사라진 세속화와 다양한 표현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다원화를 일종의 타락으로 간주하고, 과거의 통일적 혹은 일원적 세계관을 지속하고 지향하려는 경향을 지닌다. 자신들의 가르침 자체가 유일하거나 최상이라는 진리 독점주의적 의식과 자세를 지닌다. ‘초월적 실재’라는 말에서의 ‘초월’을 주로 공간적 차원에서 상상하면서, 하늘 높은 곳에 있는 초자연적 신이 자신들에게만 전파 같은 계시를 내려준다는 식으로 상상하곤 한다. 신을 인간의 확대판 비슷하게 여기는 신인동형론(anthropomorphism)적 사유도 횡행한다. 자신들이 신을 직접 접하는 냥 착각하다보니, 다양성을 거부하게 되고, 배타적 자세를 당연시한다. 진리의 불변성을 강조하면서, 변화를 타락으로, 차이를 진리로부터의 이탈로 간주한다. 상당수의 종교 갈등은 물론 종교 전쟁은 그 근원으로 가서 보면 이런 자세와 연결되어 있다.

특히 근본주의적 개신교, 이른바 ‘원리주의적’ 이슬람 등이 이런 자세를 보여주는 경향이 있다. 이들에게는 인류의 평화보다는 자기중심적 동일화가 우선이다. 평화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중심적 평화를 추구하다가 갈등을 야기시킨다. 그리고 그 갈등은 자기식 평화를 구현하기 위한 피치 못할 과정이라며 임의로 해석하곤 한다. 평화의 이름으로 반평화적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다.

하지만 전술했듯이 종교의 외적이고 가시적 표현들이 아무리 우주적 진리나 인간 내면의 깊은 진리를 가리킨다 해도, 그 표현 자체는 현실적으로 역사적 변화에 종속되는 것일 수밖에 없다. 이것을 보지 못할 때 종교가 갈등의 요인이 되고, 볼 줄 알 때 종교가 평화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3. 평화와 종교적 세계관

1) 문화적 폭력과 적극적 평화

두 차례의 세계 대전 이후 평화를 ‘전쟁이 없는 상태’ 정도로만 규정하던 시절, 인도의 평화학자 다스굽타(Sugata Dasgupta)는 전쟁과 같은 직접적 폭력이 없는데도 평화롭지 못한 상태를 peacelessness라는 신조어로 표현해냈다. 흔히 ‘비평화’라고 번역되는 이 말을 요한 갈통

(Johan Galtung)은 ‘소극적 평화’ (negative peace)라는 말로 재구성했다. 소극적 평화는 직접적 또는 물리적 폭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물론 평화를 소극적으로만 규정할 수는 없다. 한반도에 직접적인 전쟁이 없는데도 긴장 상태에 있듯이, 개인에게 가해지는 물리적 직접 폭력은 없어도 개인은 심각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보이지 않는 더 큰 힘으로부터 억압을 받을 수도 있다. 일종의 ‘구조적 폭력’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갈등의 표현에 따르면, ‘문화적 폭력’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문화적 폭력은 구조적 폭력을 사회적 차원에서 정당화시켜주는 더 근원적인 폭력이다.

문화가 다양한 인식과 생활 방식의 보이지 않는 근간이듯이, 문화적 폭력은 한 사회의 구조적 폭력은 물론 심지어 직접적 폭력까지 정당화시켜주는 근간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성차별적 문화가 실제로 성차별을 조장하고 정당화시키듯이, 문화적 폭력이 다양한 폭력의 보이지 않는 진원지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폭력에 대비하는 개념 혹은 상태가 평화이다. 갈등은 간접적 또는 구조적 폭력, 나아가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문화적 폭력까지 없는 상태를 ‘적극적 평화’라는 말로 나타냈다. 단순히 직접적 폭력이 없는 상태가 소극적 평화라면, 문화적 폭력도 없는 상태가 적극적 평화이다. 가치중심적 언어를 쓰자면, 적극적 평화는 평화적 방법으로 인간의 삶 전반에 정의가 구현된 상태라고도 하겠다. 가톨릭의 『제2차바티칸공의회문헌』에서 정리하고 있는 평화관도 사실상 적극적 평화의 개념과 상통한다.

평화는 전쟁 없는 상태만도 아니요, 적대세력간의 균형 유지만도 아니며, 전제적 지배의 결과도 아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평화는 정의의 실현인 것이다. 인간 사회의 창설자이신 하느님께서 인간 사회에 부여하신 질서, 또 항상 보다 완전한 정의를 갈망하는 인간들이 실현해야 할 그 질서의 현실화가 바로 평화인 것이다.

2) 소강(小康)과 대동(大同)

전쟁 없는 상태, 즉 소극적 평화와 신적 질서의 현실화, 즉 적극적 평화의 관계는 유학에서 말하는 소강(小康)과 대동(大同)의 관계와 비슷하다. 공자의 『예기』(禮記) 「예운」(禮運)편 9장에서는 백성이 예(禮)와 법(法)으로 다스려져서 적어도 겉으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상태를 ‘소강’ (小康)이라 한다. 신약성서에서 “힘센 사람이 무장하고 자기 궁전을 지키는 동안 그의 소유는 평화롭습니다”(누가복음 11,21)라고 할 때의 평화와도 통한다.

하지만 소강 사회에서는 이기적 혹은 가족 중심적 사유와 행위가 지속되거나 사회적 문제의

가능성은 늘 잠복해있다. 크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자신을 앞세우고 타자를 누르기 위한 잔꾀도 성행한다. 그나마 이만도 못해 전쟁이나 난리로 흉흉한 사회를 난세(亂世)라 한다.

이에 비해 대동(大同)은 남과 나를 같이 보는 경지인 인(仁)이 구현되어, 가족 중심주의를 넘어서 “세상이 공적인 것이 되는”(天下爲公) 사회이다. 누구나 일할 수 있고 생산물을 개인이 소유하지 않을 정도로 공공성이 확보된 사회이다, 한 마디로 정의가 구현된 사회 또는 위에서의 표현대로 ‘인간 안보’가 보장된 사회라고도 할 수 있다. 모사가 없고 난리가 없으니, “바깥문을 닫아두지 않아도 되는 상태를 대동이라 한다”(外戶而不閉是謂大同)고 『예기』에서는 규정한다.

이처럼 적어도 전쟁까지는 일어나지 않는 ‘소강’이 ‘소극적 평화’에 해당한다면, 세상 전반이 공적 영역으로 작용하는 ‘대동’은 ‘적극적 평화’의 상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소강은 대동의 전 단계이다. 다만 ‘소강’이 통치자의 주도로 ‘예’와 ‘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현실적인 평화의 상태라면, ‘대동’은 구조적, 나아가 문화적 차원에서까지 평화가 이루어진 이상적인 상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근대 서구의 평화관과 상통하는 ‘평화학’이 이미 2500여년 전 동아시아에서도 제시되고 있었던 셈이다. 그 대동의 ‘컨텐츠’는 우리의 주제로 바꾸면 평화, 그것도 적극적 평화라 할 수 있다.¹⁾

3) 내적 평화의 사회화

문제는 이런 적극적 평화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평화는 목적이지만, 그 목적에 이르는 수단도 평화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평화의 현실화는 평화적 수단과 방법에 의해 이루어진다. 수단과 방법 자체가 목적이 현실화되는 과정이다. 과정 없는 현실화란 없다. 갈등의 책 제목에서처럼, 적극적 평화는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일 수밖에 없다. “평화라는 말 자체에는 옳은 방법에 의한 옳은 평화여야 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정의로운 과정과 정의로운 결과, 즉 정의가 달성되는 그런 평화”인 것이다: “정의가 당신 앞을 걸어 나가고 평화가 그 발자취를 따라가리라.”(시편 85:13)

평화를 실천하는 수단도 평화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단순히 직접적 폭력을 구사하지 않는다는 정도가 아니다. 갈등이 말한 ‘적극적 평화’의 상태를 내면에서부터 경험하고 있는, 그런 평화적 행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갈등도 말한다: “자신과의 내적 및 외적인 대화”를 통해 “몸과 마음과 정신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1) 한자문화권에서 ‘平和’라는 말이 사용된 것은 일본 평화운동의 선구자 기타무라 토오코쿠(北村透谷)가 1889년 ‘일본평화회(日本平和會)’를 창설하고 1892년 기관지 『平和』를 창간한 이후라 한다.

대부분의 종교 연구자, 특히 불교적 세계관에 친숙한 이는 평화 연구자 혹은 활동가의 내적 상태에 관심을 기울인다. 내면적으로 평화롭지 못한 이는 사회적 평화를 이루기 힘들다고 보기 때문이다. 종교다원주의적 시각에서 명상 수행을 하며 억압과 불의로부터의 해방과 평화를 신학의 핵심으로 간주하는 폴 니터(Paul F. Knitter)는 틱 낫한에게 배우며 이렇게 말한다: “마음챙김을 통해 평화로울 때 우리는 경험하는 사건, 사람, 감정에 평화롭게 반응할 수 있다.”

“평화롭기는 단지 목표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이미 목표이다. 우리가 평화로워지는 것이 바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평화를 원한다면 정의를 위해 일하라”는 말도 맞지만, “정의를 원한다면 평화를 위해 일하라”는 요청이 더 근본적이다: “평화를 만드는 이들은 평화를 심어 정의의 열매를 거둔다.”(야고보서 3,18) 정의가 자칫 외적 조율과 분배에만 초점을 두고서 내적 갈등을 외면하는 일로 나타날 수 있거나, 직접적 폭력에는 관여해도 문화적 폭력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는 취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평화롭지 못하면 평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말의 의미도 그것이다.

내적 평화와 그 사회화를 유학의 경전인 『대학』(大學)의 언어로 번역하면 “명명덕”(明明德), “신민”(新民), “지어지선”(至於至善)이라고 할 수 있다.²⁾ 인간 내면의 밝은 덕성을 밝혀(明明德), 백성을 새롭게 함으로써(新民) 지극한 선에 이르는 것(至於至善)이 ‘큰 배움’[大學]의 길이라는 것이다. 명명덕, 신민, 지어지선은 평화적 상태에 이르기 위한 세 강령이다. 역으로 지극한 선은 백성을 새롭게 하는 방식으로 내면의 덕을 구체화하는 데서만 붙일 수 있는 이름이기도 하다. 평화는 내면의 밝은 덕성을 갖추고 드러내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다. 비록 민중의 언어가 아닌 통치자의 언어이기는 하지만, 수신(修身) 이후에야 평천하(平天下), 즉 “인간의 보편적 덕성에 근거한 도덕적 세계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유교적 평화구현의 순서이다.

이상의 것들은 평화라는 과정을 통해 평화의 이상이 구현된다는 근대 평화학의 기본 구상과 다르지 않다. “원한은 원한에 의해서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원한을 버릴 때만 사라진다, 이것은 변치 않을 영원한 진리다”라는 『법구경』(法句經, 쌍요품 5)의 말도 평화는 평화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과 잘 어울린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신다”(갈라디아서 5,20)는 고백이 참으로 그리스도적인 자세이자 상태라면, 니터가 말하듯이, “그리스도인에게는 ‘평화롭기’가 ‘그리스도 되기’이다.” 이상적인 평화의 세계를 이루고자 한다면, 사람이 먼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평화에 관한 종교적 이해는, 갈등이 평화에 대한

2) 大學之道在明明德在親民在止於至善(『大學』1章)

세 가지 구분법³⁾ 중에서, 가치를 경험적 데이터보다 우위에 두는 비판주의적 접근법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4) 평화의 목적론적 구조, 종교평화학

평화는 목적이면서 동시에 목적의 실현을 위한 과정이기도 하다. 평화로운 수단 없는 평화는 있을 수 없다. 한 마디로 평화가 평화를 만든다는 것이다. 목적과 수단에 관한 평화학의 이런 입장은 다른 한편에서 보면 그리스도교 신학의 구조와 상통한다.

특히 그리스도교의 이상인 하느님 나라가 구현되는 방식과 구조는 평화 구현의 모습과 통한다. 이상적 질서로서의 하느님 나라는 이상이자 목적이라는 점에서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이다. 그렇지만 하느님 나라는 그 미래를 꿈꾸는 이에게 그 꿈을 통해서 그리고 그 꿈에 어울리는 수단을 통해서 지금 오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다. 하느님 나라가 ‘아직 아닌’(not yet) 이상이면서 동시에 ‘지금 이미 와 있는’(already now) 현실이기도 한 것이다. 그것이 하느님 나라를 핵심으로 하는 그리스도교의 ‘종말론적’ 구조이다.

평화로운 과정은 평화를 지향하는 이에게서 그 지향에 어울리게 구체화된다. 평화가 평화를 구체화시키면서도 그 과정으로서의 평화 역시 평화라는 목적에서 온다는 것이다. 목적이 과정을 이끌고 이상이 현실 안에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이다. 평화의 이상이 평화적 수단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평화학의 기본 구상은 이처럼 그리스도교의 신학적 구조와 상응한다.

적극적 평화의 이념과 방법을 제시하고 구현을 추구하는 평화학은 하느님 나라를 추구하는 신학적 세계관과 다르지 않다. 더욱이 평화가 신적 질서의 현실화라는 점에서(제2차바티칸공의회문헌), 신학의 언어를 세속화 시대에 어울리도록 변형시키면 평화학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학자의 눈에 “평화학은 세속화 시대의 신학”으로 보인다. “평화학은 신학의 세속적 변용”이라 함직 하다.

그뿐 아니라 이런 목적론적 구조는 이슬람 같은 유일신 종교는 물론 동양 종교적 세계 전반에 상응한다. 가령 동양종교, 특히 한국 신종교들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개벽’(開闢) 사상이 이와 비슷한 구조를 한다. 수운 최제우(水雲 崔濟愚) 이래 근대 한국 신종교에서 두루 쓰이게

3) 갈등은 평화 연구를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첫째, 경험주의에 기초한 경험적(empirical) 평화 연구, 둘째, 비판주의에 기초한 비판적(critical) 평화 연구, 셋째, 구조주의(constructivism)에 기초한 구조적 평화 연구. 첫째 경험적 평화연구는 경험적 사실을 가진 이론들의 체계적 비교로서, 이론들이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는다면(즉 데이터가 이론보다 강할 경우) 이론들을 수정한다. 둘째 비판적 평화연구는 경험적 사실(데이터)과 가치의 체계적 비교 연구로서, 말과 행동에서 사실이 가치와 일치하지 않는다면(즉 가치가 데이터보다 강할 경우) 사실의 변경을 시도한다. 셋째 구조적 평화연구는 가치와 이론의 체계적 비교로서, 새로운 상상력을 도출하는 가치에 이론들을 맞추어 조정되도록 시도한다(Galtung,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37-38). 물론 갈등은 이 가운데 어느 하나만을 우위에 두지 않는다. 이들 세 부분(데이터, 이론, 가치)은 삼각형처럼 서로 내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에게 의존한다(Galtung, 앞의 책, 41-42). 평화 연구가 모든 변수를 고려하는 세계 연구에 가깝다는 앞에서의 말은 이와 통한다.

‘개벽’은 한 마디로 ‘새롭게 열린 세상’이다. ‘하느님 나라’가 하느님의 전적인 주도권에 근거하면서도 한편에서는 인간의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구체화되듯이, ‘개벽’도 이미 짜여진 우주적 법칙이면서도 한편에서 보면 그에 어울리는 인간의 정신 개벽과 사회 개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끝없는 작용이기도 하다. 이것은 새로운 세상, 즉 개벽도 사람과 사물의 건강한 질서를 통해 열린다는 뜻이다. 하늘이라는 이상과 사람 나아가 만물이라는 현실이 하나가 되는 곳에서 개벽은 구체화된다.

하느님 나라나 개벽은 우리의 주제로 하면 ‘적극적 평화’에 대한 종교적인 표현들이다. 하느님 나라와 개벽의 구체적 내용이 ‘평화’라 해도 된다는 뜻이다. 그런 점에서 종교 연구는 평화 연구와 다르지 않으며, 평화학에서의 평화 연구는 신학의 근본 내용 내지는 신학적 구조와 상통한다. 평화는 종교의 수단이라기보다는, 종교의 본질이고 이상이다. 평화가 구체화되는 곳에서 종교의 구체성과 진정성이 확보되며, 따라서 평화 없는 곳에는 종교도 없다. 진리를 깨달은 혹은 신을 만난 상태이자, 그와 관련한 최상의(宗) 가르침(敎)은 평화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래서 “평화가 종교이다.” 평화학과 종교는 동일한 목적을 지니며, 평화학과 평화를 근본에 둔 종교적 메시지는 같은 내용의 다른 이름이 된다. “종교평화학”은 이런 맥락에서 조합 가능한 언어가 되는 것이다.

4. 평화의 사회성과 종교적 저항성

1) 위험사회에서의 평화

간혹 개인적 편안함을 평화와 혼동하는 경우가 있지만, 편안함이 평화 전체는 아니다. 개인적으로 편안해도, 사회·문화적으로 평화스럽지 못하다면, 그것을 온전한 평화라고 할 수는 없다. 직접적 살상이 없어 외형적으로는 비폭력적으로 비취도, 의료와 복지 같은 구조적 편향으로 인해 누군가 간접적이고 장기적인 피해에 노출되어 있다면, 그것은 적극적 평화와 거리가 멀다. 기독교윤리학자 니버(Reinhold Niebuhr)가 지적한 바 있듯이, 개인적으로 도덕적이라고 해서 바로 사회의 비도덕적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도덕의 사회적 감성이 확보될 때 사회도 도덕적으로 변모해갈 수 있다.

문화적 박탈이나 억압 같은 소외 현상도 마찬가지이다. 종교나 이념, 언어와 예술 등도 문화적 폭력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평화는 구조적 혹은 입체적이다. 문화를 공유하는 집단을 ‘사회’라고 한다면, 평화는 명백히 사회적 현상이기도 하다. 구약성서학자 폰 라트(Gerhard

von Rad)는 성서의 평화(shalom)도 개인의 내적 심리상태가 아닌, 집단 혹은 공동체에 적용되고 사용되는, 사회적인 개념이라고 설명한다. 평화는 건강함, 온전함, 튼튼함, 완전함 등 대단히 통전적인 개념이자 상태라는 것이다.

주변의 갈등 상황에 무관심한 채 누리는 개인적 편안함은 부메랑이 되어 그 갈등에 의해 다시 위협받게 된다. 환경 파괴가 당장 직접적 폭력을 가져오지는 않아도 결국은 인간의 근원적 생명을 위협하는 것과 같다. 의료사회학자 윌킨슨(Richard G. Wilkinson)이 “불평등한 사회가 폭력성이 높고 건강 수준도 낮다”는 가설을 전 세계 각종 지표들을 활용해 입증해가고 있듯이, 사회적으로 평화롭지 못하면 결국 개인적으로도 평화로울 수 없다.

이렇게 평화의 영역은 개인적이기보다는 구조적이다. 지역적이기도 하지만 세계적이기도 하다. 시리아에서 폭탄이 터지고 방글라데시에서 유혈충돌이 있는데 한국이 평화로울 수는 없다. 일본의 원전 사고가 태평양 전역에 영향을 주는데 미국이 안전할 리 없다.

올리히 벡이 『위험사회』에서 적절히 분석하고 있듯이, 근대는 산업사회를 거치며 ‘위험사회’가 되었다. 인류가 경험한 초유의 풍요가 도리어 인간의 일상적 인식 능력과 통제 수준을 넘어버릴 정도의 재앙의 근원으로 작용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위험(risk)의 보편성이 있다. 생태계의 위기가 그렇듯이, 위험(risk)은 단순한 물리적 위험이 가해지고 있는, 그래서 피할 수 있는 위난(danger) 보다 더 광범위한 상태이다. “위험은 지구화 경향을 내장하고 있다.” 전 지구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위험이 세계화되고 있는 상황에 평화 역시 사회적이고 세계적이며 구조적이고 문화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어딘가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다면 여전히 진정한 평화라고 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중생이 아프니 내가 아프다”(『維摩經』 文殊師利問疾品)는 유마힐의 답변은 평화의 본질적 관계성을 온 몸으로 깨달은 이의 일성이 아닐 수 없다. 갈등을 평화로 역전시키는 작업은 평화 운동의 기본이고, 평화 연구의 목표이다. 그리고 대단히 종교적인 작업이기도 하다. 그만큼 평화 연구는 단선적이지 않고 복합적, 중층적이다. 갈등은 이러한 문제 의식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평화 연구는 국가 내부나 국가간의 평화 연구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조직 속에서 평화를 찾으려는 시도라는 측면에서 볼 때, 세계 연구에 접근한 것이다. 그러므로 단지 군사력 또는 정치·경제적 상황, 문화적 변수들만을 고려하여 연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중요한 것은 모든 변수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학문 분야와 관계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신성한 정신적인 면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는 전체 속에서 거미줄같이 짜여진 모순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⁴⁾

평화는 개체적이지 않고 구조적 혹은 시스템적이며, 그런 점에서 “평화학은 새로운 ‘평화시스템’으로서의 세계를 구축하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다.”⁵⁾

갈등은 당연히 극복의 대상이다. 물론 갈등이 극복되는 과정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평화적 수단’으로 극복하고자 할 때 갈등은 평화로 변형(transformation)될 수 있다는 것이 갈등 이론의 골자이기도 하다. 갈등에도 ‘파괴적 갈등’과 평화로 변형될 수 있는 ‘창조적 갈등’이 있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악도 결국은 그 악마저 포섭하는 더 큰 선으로서의 신 안에 포섭되리라 기대하는 신학적 희망과 다르지 않다.

2) 저항으로서의 평화와 종교

이 때 놓쳐서는 안 될 것은 이상적 상태로서의 적극적 평화는 저절로 얻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평화는 다양한 실천 안에 수많은 갈등을 녹여내며 성립되어 왔다. 적극적 평화가 보편적인 이상인 것은 분명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실천할 때 그것은 현실화한다. 평화학자 디터 쟁하스(Dieter Senghaas)가 ‘적극적 평화’는 의지에 거슬러 이루어지는 문명적 발전이라고 보았듯이, 구조적 평화는 평화를 이루려는 이들의 희생을 딛고 이루어진 부단한 실천의 결과이기도 하다. 평화가 정의 구현의 상태라고 한다면, 그 때의 정의도 무언가 견디기 힘든 어떤 느낌, 어떤 종류의 침해에 대한 분개심(resentment)으로부터 비롯된다. 물론 분개심만으로 끝난다면, 도리어 정의는 파괴되고 말 것이다. 김우창이 말하듯이, 분개심이 “모든 존재로 하여금 스스로의 넘침 속에 존재하게 하는 질서의 일부가 될 수 있을 때, 참으로 인간적 삶을 위한 수단”, 즉 정의로 전환한다. 정의도 분노하게 만드는 흐름에 대한 저항에서 비롯되고 구현된다는 말이다. 평화도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 현상을 유지하려는 세력과의 지속적인 갈등 속에서 달성된다.” 다음의 성서 구절은 그리스도교의 구성 원리가 원수지간의 경계를 저항을 통해 허물으로써 성립되었음을 잘 보여준다.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몸을 바쳐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원수가 되어 갈리게 했던 담을 헐어버리시고 그들을 화해시켜 하나로 만드셨습니다.(에베소서 2:14-15)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그들이 화해와 일치를 꿈꿀 수 있게 된 것은 몸을 바친 그리스도의 저항과 희생의 결과라는 것이다. 성서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에이레노포이오스)은 행복하다”(마태복음 5,9)고 선언할 때의 “평화는 문제를 회피함으로써가 아니라, 문제를 직면하여 비록 그것이 적지 않은 대결과 투쟁을 포함한다 해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감으로써 이루어지는 평화이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평화가 있게 하는 일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다. 공동묘지의 정적 평화가 아니라, 저항하며 만들어가는 동적 평화이다. 그렇게 평화를 만드는 이가 ‘하느님의 아들’로 불리게 된다는(마태복음 5,9), 즉 하느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다. 야스퍼스(Karl Jaspers)도 칸트(Immanuel Kant)의 ‘영구평화’를 해설하면서, 평화를 자유의지에 의해 쟁취된 상태로 규정한다.

평화란 법률적으로-국제법에 의해-질서 잡힌 공동 생활의 모든 도덕적, 정치적 전체를 충족시키며 그럼으로써 비로소 평화를 누릴만한 자격을 갖게 되는 사람들, 평화를 바르게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것이다. 평화는 결코 맹목적인 행복의 증진을 위해서 증여된 상태가 아니라 인간의 자유 의지(도덕 의지)에 의해 쟁취된 상태를 뜻한다.⁶⁾

저항의 산물은 평화뿐이 아니다. 인간의 천부적 존엄성의 구체적 표현인 “인권도 인간 억압에 대한 자구책으로서 발생한 특수한 형태의 저항담론”이다. 근대적 의미의 인권 확립사도 저항의 역사인 것이다. 칸트가 말했듯이, “평화 상태는 자연 상태가 아니다... 평화 상태는 수립되어야만 한다.”⁷⁾ ‘소극적 평화’에 머물지 말고, ‘적극적 평화’를 지향해야 한다는 뜻이다. 희망과 이상이 저절로 현실화되는 법은 없다는 뜻이다.

물론 저항한다지만 그 저항이 폭력적이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저항이어서도 안 된다. 드러나야 할 것은 평화이지, 평화 활동 자체나 평화 활동가가 아니다.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순서를 바꾸어놓는 방식이 아닌, “모든 사람을 위한 정의를 세우고자 투쟁하는 것이 참된 평화 만들기이다.” “자신의 몸을 바쳐” 원수가 되어 갈리게 했던 담을 헐어버린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이다.

4) Galtung, 앞의 책, 65.

5) 岡本三夫, 『平和學を創る: 構想, 歴史, 課題』(廣島: 廣島平和文化センター, 平成 5年), 26.

6) Jaspers, Karl, 정진 옮김, 『칸트의 영구평화를 위하여』(서울: 정음사, 1981), 127.

7) Kant, Immanuel, Zum ewigen Frieden, Ein philosophischer Entwurf, 오진석 옮김,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서울: 도서출판b, 2011), 23.

5. 평화적 공동(共働)과 종교

1) 종교간 대화와 평화

이미 보았지만, 종교인에 의한 평화 운동은 그 과정 자체가 종교적일 필요가 있다. 평화의 구현이 평화적 수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면, 그 평화적 수단이 종교적이기도 하고 지향점으로서의 평화도 종교적이다. 종교라는 말이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현실을 건강하게 이끌어가는 과정 및 목표와 관련되어 있다면, 평화가 구현되어가는 과정 역시 마찬가지이다. 평화는 일방적이거나 억압적인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과정 속에서 물리적 혹은 구조적 폭력이 힘을 잃어간다. 평화라는 것이 일부에 의한 수직적 억압을 거절하는 곳에서 이루어진다면, 그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평화를 창조하는 활동들은 갈등에 대해서 창의적이고 동시에 받아들일 만 하고 지속될 수 있는 결과를 찾는 것과 동일시될 수 있다. 여기에 더 이상 용서될 수 없는 한 가지 잘못이 있는데, 이는 한 번으로 끝나는 최고위 협상 또는 통치자들을 위한 고위 회담이다. 차라리 사회 어느 곳으로부터도 평화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가지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현대의 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천 번의 회담이 열리게 하는 것이 좋다. 제안들은 서로 모순될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곳에서 평화가 똑같이 보일 필요가 있겠는가? 아무도 소외시키지 말고 평화를 창조하는 것 자체를 구조적 평화의 모델로 삼으면서 모든 곳으로부터 통찰력을 타진해보자.⁸⁾

직접적, 구조적, 문화적 평화는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 모든 이들이 평화롭지 못하다면 온전한 평화라고 할 수 없다. 모든 이들이 협력하는 가운데 평화를 이루어가고, 그런 식으로 모든 이들을 주체로 세우는 모습이야말로 온생명을 살리려는 종교적 자세이다.

이처럼 “평화적 수단”이라는 말 속에는 화해와 협력이 내포되어 있으며, 화해와 협력의 과정은 그 자체로 종교적이다. 평화 운동 속에는 그런 식의 종교적 정신이 녹아들어야 하고, 논의 과정에도 화해와 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평화를 위한 교단 간의 연합적 시도도 확산되어야 하는 것이다. 종교인의 운동도 개인이나 개별 종단의 행사로서보다는, 여러 종단의 공감대 속에서 어울려 함께 할 필요가 있다.

8) Galtung, 앞의 책, 573.

일본의 정치사상가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가 바람직한 학문 체계 혹은 문화 유형은 문어들이 고립되어 한 마리씩 들어앉아 있는 “문어항아리 유형”이 아닌, 여러 갈래의 부챗살이 아래에서는 하나로 모이는 “부챗살 유형”이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듯이, 다양한 종교들이 독자적으로 움직이다가 자칫 사회 분열과 고립을 초래하는 방식은 지양되거나 극복되어야 한다. 다양성 속에서 근원적 일치를 공유하는 협력 체계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

평화를 위한 여러 종단 혹은 종파간 협력 운동은 중요하다. 평화를 위한 협력은 그 자체로 썩 훌륭한 종교 간 대화이다. 화해, 일치와 같은 가치를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여러 종단 간 동의와 합의 속에서 이루어져나갈 때, 종교적 행위가 구체화되고 그 행위가 평화적 사건이 되는 것이다. 종교계 평화 운동을 선도하는 한스 쿡(Hans Küng)의 간결한 선언문, 즉 “종교 대화 없이 종교 평화 없고”, “종교 평화 없이 세계 평화 없다”는 말은 그런 점에서 정당하고 당연하다.

2) 평화적 공동(共働)과 종교적 실천

재일철학자 김태창이 21세기적 “공공철학”의 가치와 의미를 “활사개공(活私開公)”, 즉 “개인을 살리면서 공공성을 열어가는” 자세로 집약한 적 있는데, 그것 역시 평화라는 사회적 영역을 열어감으로써 개인의 종교적 존재 의의도 확보해가는 자세와 어울린다. 사적 영역을 살리면서 공적 영역을 열어간다고 할 때의 그 ‘살림’ (活)과 ‘열’ (開)의 내용도 구체적으로는 평화와 통한다. 평화적 수단에 의해 평화가 된다고 할 때, 평화의 내용은 인간의 ‘살림’ 이고 새 세상의 ‘열림’ 이다. 그 새 세상은 적극적 평화이자 ‘후천개벽’ 이기도 하다. 아래로부터 협력하여 그런 평화를 구체화하는 것이 이 시대 종교적 실천이다.

물론 평화는 획일적 일치가 아니다. 종교들이 협력하며 평화를 이루어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은 ‘같음’ [同] 혹은 ‘하나’ [一]가 되기 위한 협동(協同)이 아니다. 김태창이 강조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함께 하나가 되기 위한 협동(協同)이나 공동(共同) 작업은 도리어 평화를 획일화시키면서 해칠 수 있다. 같이 일할 뿐, 즉 공동(共働)할 뿐이다. 사람이 움직이고 일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일본식 한자 ‘働’은 ‘動’ 보다는 주체적, 능동적이고, ‘同’ 보다는 다양성을 잘 담아낸다. 평화는 함께 하는, 즉 공동(共働)하는 끝없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꽃핀다. 그러면서 개벽도 현실화되어 간다.

오늘날 종교는 종교 시설에서 특정한 종교 의례를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삶의 현장에서 대화와 협력을 통해 적극적 평화를 공동(共働)해가는 과정 자체가 종교적이다. 개인을 살리면서 공적 영역을 열어가는, 즉 활사개공(活私開公)의 공공철학적 자세와 공공성(公共性)의 구조는 종교적 이상과 실천의 또 다른 내용이 되는 것이다. 일상적 언어로 번역해내면 곧

평화의 구현이 된다. 이런 식으로 평화학은 종교적 구조를 지니며, '사'와 '공'을 모두 살리고
열어가는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평화학이 그대로 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되지 않는다.

국가폭력과 화해

김성철 (IPUS)

1. 문제의 제기

해방 후 한국 사회는 국가건설과정에서 그리고 권위주의하에서의 국가(군, 경찰 등 국가의 폭력기구)에 의한 수많은 폭력을 경험하였다. 국가건설과정과 비민주적 체제하에서의 폭력은 우리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며, 이웃 동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폭력이 발생했다. 국가폭력은 생존권과 인권의 유린인 동시에 국가 또는 체제의 정당성에 관한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국가폭력 특히 대량학살은 왜 발생하는가? 가해자가 단순히 비민주적이기 때문인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을까? 국가폭력을 경험한 사회에서 화해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떤 방식의 화해가 실제로 가능하며 개인의 인권회복과 사회의 융합에 기여할 수 있을까?

2. 여덟 개의 사례(사례 비교는 도표 참고)

- 일본군의 오키나와 주민 살해, 1945년
- 인도네시아의 반공학살, 1965년-1968년
- 태일랜드의 파탈룽 붉은 드럼 살상, 1972년
- 캄보디아 크메르 루즈에 의한 학살(일명 킬링필드), 1975년-1978년
- 광주사건, 1980년
- 필리핀 멘디올라교 사건, 1987년
- 미얀마 민주화운동 압살, 1988년

• 중국 천안문사건, 1989년

※ 오키나와 주민 살해는 태평양전쟁 중에 발생한 사건이지만 이에 대한 실상이 냉전으로 인해 오랫동안 드러나지 않았다.)

3. 관심받지 못한 동아시아에서의 국가폭력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관심은 주로 비민주적 체제하의 대중적 저항, 저항과 민주화와의 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이들 나라에서 국가가 언제 그리고 왜 폭력을 사용하는가, 그리고 많은 경우 왜 해결(사법처리든 화해이든지)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가 등에 관심은 저조한 편이었다. 그 중요한 이유로 냉전 상황에서 국가안보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었으며 이를 옹호하는 반공 권위주의가 존속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예외적으로 크메르 루즈 학살과 천안문 사건이 냉전 중에도 세계의 이목을 받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국가폭력 문제는 국가안보와 반공주의의 사슬에 묶여 있었다.

냉전의 종식과 함께 인간안보에 대한 관심 높아지고, 1990년대 르완다와 코소보에서의 인종 학살과 그 해결과정을 지켜보면서, 아시아에서의 “과거”의 국가 폭력기구에 의한 조직적 폭력 또는 대량학살에 학문적 및 정치적 관심이 서서히 나타나게 되었다.

4. 학살의 원인

대량학살과 같은 특수한 형태의 국가폭력이 비민주적 체제라고 해서 무조건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지배계층 안에서의 일종의 위협 인식이 있을 때 가해자는 이런 대량학살을 저지르게 된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국가(state)안보와 체제(regime)안정이 접합되어 있다고 판단할 때 특히 그렇다. 분명히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커다란 인식차가 있음을 의미한다. 아시아에서의 많은 국가 폭력은 반공산주의 작전에서 발생했으며, 가해자는 피해자 집단이 국가전복을 의도한다고 믿고 그렇게 선전하면서 폭력을 가했다. 이는 피해자의 의도와 전혀 다르다.

학살 수준의 국가 폭력은 국가의 형성과정 또는 체제의 건설기 또는 변화기(안정기 보다는)에 발생한다.(한국 4.3사건과 여순사건, 인도네시아 수하르토 중심의 반공산주의 토벌작전). 또 지도부가 자신의 제도구축이나 관리 능력의 무능을 인식한 경우 폭력은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이게 된다.(크메르 루즈)

5. 폭력의 유형

폭력은 가해자의 폭력사용의 동기 또는 목적에 따라 유형도 달라지게 된다. 우선 개념적으로 말한다면, 국가형성(state building) 과정 및 국가권위의 침투, 확장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가해자가 자신의 권력의 영역을 확장하고 국방, 치안, 행정 등 여러 기구의 구축을 위한 목적을 지녀, 특정 피해자 집단에 대해 차별적인 도구적 폭력(instrumental violence)의 형태를 띤다. 즉 영역 안에서 발생하는 도전 세력을 도려내려는 학살형태의 폭력이다. 이와 달리, 체제의 공고화(regime consolidation)을 위하거나 새로운 체제를 구축(regime construction)하려 하거나 또는 체제를 변혁(regime change)하려는 경우, 가해자는 일정 집단을 도려내는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세운(또는 세우려는) 규칙과 질서에 따르게 하려는 본보기 형식의 예시적 폭력(exemplary violence)을 가하게 된다.

물론 경험적인 사례들에서 이같은 구분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국가형성과정이 일이년이 아니고 수년 동안 정세 불안과 집단간 경쟁이 지속되면서 이루어지기 마련이고(한국의 경우, 해방후 한국전쟁 이전) 또 국가형성 과정이 일정 체제의 구축과 연계되어 발생할 수 있다(동남아 국가들의 사례, 특히 인도네시아). 이런 경우 폭력의 양상이 도구적인 동시에 예시적이기도 할 것이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국가형성이 끝난 후 체제 변화는 여러 차례 발생할 수 있지만 여기서 폭력은 대체로 예시적 폭력의 형태를 띠게 된다는 점이다.

6. 폭력 후 현상: 정당화, 위협, 망각

폭력이 발생한 후, 피해자는 이중의 피해자(폭력과정에서의 물리적 피해자, 폭력후의 심리적 피해자)로 남아있게 된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다루는 수단은 위협만이 아니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질서의 적이었다는 명을 씌우면서 폭력을 정당화하기도 한다. 폭력 당시와 마찬가지로 폭력 후에도 가해자는 국가안보와 체제안정(질서)를 동일시하면서 피해자를 사회의 적으로 따돌림 시킨다.

피해자를 잊고 과거의 폭력을 망각하게 만드는 통제된 영역(regulated space)이 새롭게 형성될 수도 있다. 통제된 영역은 가해자가 의도한 결과이기도 하고 체제의 정책 결과이기도 하다. 전후 일본은 원호법을 도입하여 빈궁한 오키나와의 피해자들이 “정당한 전쟁”이었다고 수긍하고 수혜받게 한 사례, 미얀마의 군부가 불교사원에 대해 기부함으로써 피해자 승려들의

이해를 구하는 사례, 중국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과거의 폭력이 잊혀지는 사례 등이다.

7. 폭력의 해결

일반적으로 정치폭력 그리고 여기에서의 국가폭력의 해결과정과 관련하여, 이행 정의(transitional justice)에 관한 논의들이 있다. 징벌 정의(punitive justice 혹은 retributive justice)와 회복 정의(retributive justice)가 주로 사용되는 개념들이다. 흔히 화해(reconciliation)라고 하는 것은 후자를 두고 하는 말이다. 징벌 정의는 피해자 개개인의 인권과 명예를 증시여기면서 가해자의 사법적 처리에 관심을 두는 반면, 회복 정의 또는 화해는 사법적 처리의 유무와 상관없이 변혁 효과(transformative effect)에 더 관심을 둔다. 특히 가해자와 사회의 관계의 회복, 즉 가해자에 대한 용서와 이를 통한 사회의 안정 및 단합을 추구하고자 한다. 과거의 적 사이의 관계, 즉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관계를 상호 존중 그리고 상대방의 도덕적 가치와 존귀함을 인정하는 관계로 회복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두 가지 중 어느 한 쪽이 더 낫거나 또는 효과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경험적으로 징벌 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흔하지 않으며, 회복 정의 또는 화해의 방식을 띠는 경우가 많다. 과거 라틴 아메리카와 동유럽에서도 그러했다. 그 이유는 폭력의 해결 과정 자체가 가끔 정치 변화, 특히 비민주적 권위주의적 체제에서 민주주의로의 이행과 연동되기 때문이다. 즉 이행과정은 흔히 새로운 제도를 구축하는 과정이며 타협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구 지배 세력이 가해자였을 것이며, 새로운 참여세력은 과거 피해자였거나 피해자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우일 것이다. 또는 새로운 세력이 피해자와는 상관이 없는 다른 세력일 수도 있다. 이행의 제도화에는 과거 폭력에 관한 사항이 하나의 정치의제로 포함될 수 있으며 양보와 수용을 필요로 하는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엄격한 사법적 처리와 진실규명을 강조한 징벌 정의보다는 화해의 방도를 선택하게 된다.

그러나 회복 정의가 경험적으로 더 흔하다는 사실이 자칫 과거 폭력에 대한 면죄부를 주거나 또는 가해자에 대한 관용이 당연하다는 식으로 보여져서는 안된다. 이럴 가능성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관찰해야할 필요가 있다.

8. 민주화와와의 관계

민주화와 국가폭력의 해결(특히 화해)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어느 한 쪽이 다른 것의 원인이 되는가 혹은 양쪽이 병행하는가? 국가폭력이 흔히 비민주적 체제하에서(권위주의 체제의 구축과정에서, 또는 별종의 권위주의체제로의 이행과정에서)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민주화가 진행되면 화해도 일어날 것으로 가정할 수 있으나, 실제로 그렇지만은 않다. 민주화가 진행되어도 국가폭력이 해결되지 않은채 넘어가거나 해결이 저항에 부딪히는 경우도 있다.(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민주화와 국가폭력 해결, 양자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중요한 관건은 폭력의 피해자와 민주화의 주체가 각각 어떤 세력인가를 밝히는데 있다. 폭력의 피해자와 민주화 주체가 동일한 경우는 흔하지는 않다. 폭력의 피해자가 농민 또는 도시빈민(또는 특정 인종집단, 종교집단에 대해 도구적 폭력이 사용된 경우)이지만 민주화의 주체가 중산층 지식인 계층이라면, 폭력의 해결을 위한 의견이 민주화의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거나 제일 중요한 의제로 다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인도네시아).

피해자-민주화주체 사이의 관계 이외에도 비민주적 체제가 도전받게 되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수 있다. 금융경제의 위기, 국제정치의 변화 등 과거 폭력(과거사)과 무관한 사항이 기존 권위주의체제의 정당성을 크게 훼손시키는 경우에도 민주화 이행에도 불구하고 폭력의 해결이 중요한 의제에서 빠지기도 한다.

9. 모델 사례로서의 광주사건의 화해

이런 점에서 한국의 사례는 모델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째, 해결과정이 사법적 처리를 통한 응징 정의와 정치적 합의에 기초한 회복적 정의가 합쳐진 사례이다.(하이브리드형 이행 정의) 둘째, 해결과정의 주체가 피해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집단을 포함함으로써 민주화 과정에서 광주문제가 핵심의제의 하나가 되었다. 따라서 민주화와 과거 폭력 해결이 병행되었다.(해결 주체와 민주화 주체의 동일성). 셋째, 특별법 제정에 의한 해결의 제도화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 점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이 아니다.

〈표 1〉 평화캠프 사례비교

	Korea	China	Japan
Perpetrator and victim	Military; region-specific (Kwangju) demonstrators	Military under party leadership; cross-class demonstrators	Imperial army; locality-specific Okinawans
Threat in both perception and reality (State sovereignty, Regime)	Subversives of state, namely impure elements' instigation (hope of democratization)	"counterrevolutionary riots"; Victim-side anger over insecurity in the reform era (democracy as well)	Perception of disloyalty
Timing of violence (state-building, regime crisis, regime change, regime defense, law and order)	Power transition within the regime (regime defense)	Law and order	Wartime; defense of state
Form of violence (instrumental, exemplary)	Exemplary (instrumental against Kim DJ)	exemplary	instrumental
Post-violence situation	Partial compensation, justification	Regulated space in economic affluence and youth culture; Internet, underground online activity	Justification (War dead relief-honored death for the country); revisionist history textbook
Initiator of resolution in state-side (regime in power, transitional regime, new regime)	Regime in power in 1988, and transitional regime under Kim YS	Not yet; By the regime at the time of confidence of regime security	Controversy remains
Path of resolution (organized opposition, international justice, legal procedure, negotiation)	Opposition plus acts for resolution (combination of retributive justice and restorative justice)	Allowing civic organizations, but state's continued justification	Okinawans' unanimous demand for recognition of the forced suicide
Resolution-democratization relationship	a central topic of democratization	Probable expansion of civil society will bring attention to the incident	Democratized Japan; the Okinawa incident within the context of how to interpret overall wartime acts

	Cambodia	North Korea	Thailand
Perpetrator and victim	Khmer Rouge; Khmer, and minorities, religious groups	Security agencies; Order-breaking people	Military; Average citizens named communists
Threat in both perception and reality (State sovereignty, Regime)	Personal and regime insecurity (weakness, vulnerability in ruling)	State and regime	Insurgency, Personal antagonism between people and local authorities
Timing of violence (state-building, regime crisis, regime change, regime defense, law and order)	Dismantlement of existing institutions (state and regime)	Regime defense	Regime defense
Form of violence (instrumental, exemplary)	Instrumental, exemplary	exemplary	Exemplary, instrumental
Post-violence situation	Feared	"Everyday violence"	Fear, induced-testimony; Controversy over number
Initiator of resolution in state-side (regime in power, transitional regime, new regime)	New state/new regime (UN and Hun Sen government)	None	Student organizations; interior minister; military
Path of resolution (organized opposition, international justice, legal procedure, negotiation)	ECC's retributive justice, but limitations	Everyday resistance	Admission, but neither accountability nor reconciliation ("inevitability")
Resolution-democratization relationship	UN intervention (peace and electoral democracy); and then ECC	Neither solution nor democratization	Democratization but no solution; no correlation

	The Philippines	Indonesia	Myanmar
Perpetrator and victim	Police and marine; peasants	Army and its civilian allies; communists and sympathizers	Military; students and their supporters
Threat in both perception and reality (State sovereignty, Regime)	Each stake holder's conflicting interest (balance of power) at the juncture of regime transition	Perception of threat over communist expansion	Threatened order of the regime; Protesters' overconfidence on democratization (hope of regime change)
Timing of violence (state-building, regime crisis, regime change, regime defense, law and order)	Regime transition (much-trumpeted hope of faster democratization)	Deepening of state authority (state-building); Regime transition	Regime crisis (Ne Win's stepping down)
Form of violence (instrumental, exemplary)	Victim of power balancing (exemplary)	Instrumental; exemplary	Exemplary
Post-violence situation	President Aquino's condolence but conclusive fact-finding	Feared (longevity of Suharto regime)	Military regime's refusal and continuous repression; some tolerance
Initiator of resolution in state-side (regime in power, transitional regime, new regime)	Government's fact-finding commission; still unsatisfactory to victims	NGO's lobby; transitional regime's acceptance	Military regime's initiative toward multiparty
Path of resolution (organized opposition, international justice, legal procedure, negotiation)	Continued violence over agrarian reform demand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ttee; but limitations because of discrepancy between victims and reform advocates	Tension between alliance of oppositions and the military regime
Resolution-democratization relationship	Probable resolution within the context of future agrarian reform	Democratization but stagnating resolution	Gradual emergence of a pact between the military regime and Aung San Suu Kyi

Introduction

Conceiving State Violence, Justice, and Transition in East Asia

Sung Chull Kim and N. Ganesan

The collaborative research presented in this volume is about the dark side of political history in East Asian countries. It deals with the worst cases of state violence in East Asia, most of which were underresearched for different reasons. The eight cases examined in this comparative study include the Japanese military's killing of Okinawans (1945), the Indonesian counterrevolutionary massacre (1965–1968), the Phatthalung Red Drum incident in Thailand (1972–1975), the Khmer Rouge's mass killings in Cambodia (1975–1978), the Kwangju incident in Korea (1980), the Mendiola Bridge incident in the Philippines (1987), the suppression of the democratic movement in Myanmar (1988), and the Tiananmen incident in China (1989). The cases chosen here are representative in illustrating victimization of the people by military or authoritarian regimes during the Cold War. (The Okinawan case occurred during the wartime period, but narratives about it were long suppressed because of the Cold War divide.) The cases show that state violence derived from a sense of threat among the ruling elite, who believed that there was a strong conflation between state and regime security. In all cases, the modality of violence was basically exemplary and demonstrative as lessons to challengers, even if combined with an instrumental element in varying degrees. This volume does not include cases of violence targeting specific ethnic

minorities. Although such ethnic violence might be another important research topic, particularly in the multiethnic Southeast Asian context, the state violence examined in this volume targeted regime challengers in general rather than specific ethnic groups.

Since the Cold War period, most countries dealt with in this volume have not been considered globally significant in the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realms. For this reason, most cases of state violence in these countries, unlike in Eastern European and Latin American countries, have not received proper public and international attention.¹ Calling attention to a situation that has been ignored for decades, this volume intends to investigate these cases with a measure of empirical rigor. It aims to not only identify the nature of state violence but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state violence and the legitimacy of the existent regime and those coming afterward. It is also interested in detailing how individual countries have dealt with past state violence in different ways in order to arrive at a typology of sorts.

It is necessary, above all, to clarify where this study is situated in relation to the study of violence in general. First, this research focuses on *state violence* rather than on political violence in general, which has been a frequently studied subject in the social sciences. *Political violence* is a more inclusive term than *state violence*. The former encompasses all kinds of politically related violence: the political opposition's violent actions, ethnic electoral violence, violent secessionist movements, as well as state-led mass killings. State violence, as a form of political violence, refers to the more narrowly defined aggression that is led by the state in an abstract sense and actually performed by its apparatuses, such as the military, the police, and other security agencies.

The state violence discussed here involved mass killing, the magnitude of which ranged from tens of people (the Mendiola killings in the post-Marcos Philippines) to millions (the mass killings in Cambodia under the Khmer Rouge). The individual cases detail how each state possessed a monopoly on the use of force and exercised it brutally. There was no real competing political entity in relation to the use of force, even if there were different perceptions of threat or crisis, case by case, between challengers and detractors. A state, in an ideal situation, has a legitimate monopoly of the use of violence, to use Max Weber's term.² But the states and their apparatuses under discussion here, whether they had an authoritarian or military regime or some combination thereof, never

legitimately used violence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rights or international law or even the official legal standards of the perpetrators themselves. The state violence here differs from the violence that originates from civil war and revolution, in which Charles Tilly's notion of multiple sovereigns contending with each other may be relevant.³ In other words, the state violence examined in this volume refers to the state's utilization of its apparatus—the military, the police, and security agencies—in order to maintain the unilaterally defined order of the society in question.

Second, inasmuch as this volume is concerned with the violence perpetrated on the people the state was formed to protect, there have to be sustained efforts to observe the ramifications of past violence and ways of settling related issues. These analyses are indispensably related to the examination of political transition: that is, how the legitimacy of regimes changes over time; how resolution of violence takes place today; and, if there has been no ostensible change of regime or of the viewpoint of the past, why such a situation has persisted.

Here transitional justice seems a useful tool to examine postviolence resolution. The notion of transitional justice is widely accepted in examining approaches to applying justice to past evils. There are two different approaches to the issue of transitional justice: one focuses on *punitive* legal means of dealing with offenders, and the other stresses *reconciliatory* means of including past wrongdoers in the new society in order to obtain broader peace and stability. Transitional justice is useful in examining cases in which new rules prevail over old regimes and in which an existing regime at least intends to make a compromise in relation to its own past violence. An important question that arises here is what motivates justice, either punitive or reconciliatory, to prevail. There are also related questions. What prevents the process of settlement from beginning? What are the necessary structural requirements for the process to commence?

One may reasonably generalize that the resolution of past violence is closely intertwined with democratization and that resolution and democratization mutually reinforce each other rather than one being a precondition for the other. The Kwangju case in Korea is a model case of the mutually reinforcing relationship between democratization and the resolution of state violence. And little progress in the resolution of state violence, particularly in Myanmar and China, is related to the continued authoritarian nature of the political process in these countries. Con-

versely, however, Thailand is an example of a state where democratization has not addressed past examples of state violence. Similarly, Cambodia presents another counterintuitive example: the Hun Sen government, whose leaders are accused of having been involved in past state violence, has agreed to prosecute those responsible for past crimes.

Given their different backgrounds, the individual cases may follow different paths of settlement, whereby the state makes amends to the victims of violence. Resolution can begin with something as simple as an apology or ritualistic practices, even without truth-telling exercises and legal verdicts. It can develop into a much more targeted approach, such as reparation to the victims of violence and, where possible, either including them in mainstream society or building a monument in their honor. Or resolution can take place after truth commissions have been held or the legal accountability of those responsible for state violence has been assessed, as in the UN-sponsored tribunal in Cambodia now taking place. What should be noted is that regimes in democratic transition are more likely to admit to state-led violence and to make amends afterward. In instances where efforts toward resolution of violence have not been addressed,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major reasons why even a minimal level of state effort to obtain some recognition of past misdeeds and compromise has not been forthcoming.

In connection with the points mentioned above, this volume addresses four overarching questions.

- First, why did the state use violence against a particular group of people?
- Second, how has the violence been treated afterward by the society?
- Third, what has been the path of resolution? Or alternatively, why has the violence not yet become an item on the public agenda?
- Fourth,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al transition and the resolution of violence?

BRINGING THE STUDY OF STATE VIOLENCE BACK IN

Despite the brutality of the violence and the illegitimacy of the relevant nondemocratic regimes, most cases in this volume have not been seriously investigated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There are a couple of reasons for this seeming neglect. First, the Cold War situation, which sig-

nificantly reified state and national security, impeded the mood of the study of state-led violence. A few scholars, such as Barry Buzan, tried to inspire a new conceptualization of security, differentiating security along a range of various referent objects, from individual to national and international ones.⁴ These scholars have also made efforts to redress this imbalance over the past two decades. But the state has long been considered the most important referent object for security in the academic community.

The Khmer Rouge massacre and the Tiananmen incident did draw exceptional international attention. The dreadful mass executions conducted by the Khmer Rouge came to special attention in the wake of the Vietnamese invasion of Cambodia in 1978 and the Sino-Vietnamese War in 1979, in which the Soviet Union and China competed for respective spheres of influence over Indochina. The Tiananmen incident captured international attention owing in part to the mass media's widespread coverage and to the euphoria associated with the erosion of communism in Eastern Europe. Even such international attention to developments in Cambodia and China, however, was unable to induce systematic research on the ways and means of state involvement in violence and on its aftermath. That is, the dominance of state security, or national security, in the Cold War situation impeded international attention to atrocious violence led by the state.

Second, the lasting underinvestigation of state violence has been associated with the Cold War divide itself. Most cases show that the Cold War situation *justified* state violence for decades. Ideological persuasion, particularly anticommunist sentiment, rendered state violence legitimate in the name of order, at least in the eyes of perpetrators. The Indonesian army's counterrevolutionary operations, which occurred alongside the escalating Vietnam War in the mid-1960s, ruthlessly targeted so-called communists regardless of the reality of their affiliation and sympathies. The Red Drum massacre in Phatthalung in the 1970s was closely related to anticommunist operations in Thailand, while the 1980 Kwangju uprising in Korea, at its initial stage, was depicted in the state-controlled media as a riot instigated by impure elements, meaning procommunists or subversives. In these cases, the regimes were basically authoritarian, but they had external political legitimacy that derived from the Cold War divide. For ideological reasons, the prevailing us-them dichotomy tarred the victims as deserving of their miserable fate after the violence.

The Okinawan case also is true in this respect, no exception to the impact of the Cold War divide on the delay of thorough and objective research. The Japanese army's mass killing of Okinawans occurred at the final stage of the Pacific War, and the postwar democratic regime in Japan might have had a chance to conduct truth-finding work about the incident. The Okinawa incident, however, could not become a public agenda item for a long time during the Cold War. The US military administration in Japan between 1945 and 1972 and the continued US presence afterward delayed the emergence of an Okinawan identity, as Hirofumi Hayashi notes in his contribution to this volume. The security of Japan and the importance of the US-Japan alliance were also main issues for both policymakers and academics. To make matters worse, the government's revisionist interpretation of the incident came in 1983, when the Ministry of Education requested that the Okinawa incident be termed a mass suicide.⁵

However, the end of the Cold War divide two decades ago reversed this situation. The notion of security received new attention from the academic community and became omnipresent in the social sciences. Human security in particular, where the referent objects are individuals and groups of people, became an indispensable part of the research agenda. In the 1990s, civilian vulnerability—mass casualties in the Rwandan civil war and the Kosovo conflict—called special attention to human security needs. The frame of reference effectively shifted from the state to its inhabitants, who were now treated as intrinsically deserving of protection by the state and its agencies. Consequently, the state and its agencies could also be held to account if such security was not provided.

Now it is time to shed light on such state violence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The examination of the cases focused on in this volume may benefit from the changed international environment and the gradual political transitions in the countries under investigation. Stabilized security in Cambodia and democratization in Indonesia, the Philippines, and Thailand are encouraging signs in the movement to uncover the dark history of these countries. The resolution to the Kwangju incident, which coincided with democratic consolidation in Korea, provides a model for comparison. The significance of the Tiananmen incident in China lies elsewhere: that is, we need to analyze why Tiananmen has not become a public agenda item notwithstanding the rapidly changing nature of Chinese society.

IDENTIFYING VICTIMS AND PERPETRATORS

The initial question arising from an examination of state violence is: who were the victims, and who were the perpetrators? This question is not simple enough to be answered straightforwardly. It is no overstatement that all inquiries about past violence start with this question and end with it as well. The most debatable question that should be addressed in this regard is *why the state targeted the specific groups* under investigation. There might be variations among cases: some accounts, for example, stress the power-competition explanation, emphasizing the military's perception of the threat posed by students' challenge amid a power vacuum, as in the Kwangju case in Korea; some stress the cultural explanation, emphasizing the elite's anger over a shaming challenge to patrimonial governance, as in the Chinese tradition.⁶ But these accounts still do not address a key question regarding victims and perpetrators: who stood behind the weapons, and, more important, why did they use a specific form of violence against their particular victims? The latter question considers the issue of threat perception, as well as the recourses and resources available to those in power.

Violence, to use Hannah Arendt's term, is a means to multiply natural strength and to keep the power structure intact.⁷ Accordingly, there should be a certain relationship between how rulers perceive challengers and how they use violence in a given situation. If the rulers view a certain peripheral group's actions, whether demonstrations or clandestine organization-building activities, as an existential threat to state sovereignty per se, it is highly probable that they will exercise instrumental violence, as Vincent Boudreau notes in this volume. On the other hand, if the rulers regard the crisis situation as a challenge to the rules of the regime, they may either use exemplary violence or loosen the tightened control. A delicate point here is that rulers as offenders often view the challengers' situation differently from what the challengers originally intended. For instance, the Cold War divide rendered the military leaders in Korea suspicious that the demonstration in Kwangju was instigated by procommunist elements; the anticommunist ideology prevalent in the 1960s drove Indonesian military officers to undertake cruel counterinsurgency measures and to unfairly persecute several hundreds of thousands of men and women, most of whom were innocent of any crime except being members of the Indonesian Communist Party (Partai Komunis Indonesia,

PKI) or its sympathizers. It is fair to say that most cases of state violence involve a serious *perceptual gap* between the perpetrators of violence and those subjected to it, in relation to threat, order, loyalty, and governance.

The question of who were the victims of violence and who were the perpetrators becomes a very hard-pressing one, as any attempt toward resolution invariably enters into a stage of either assessing victims' and perpetrators' versions of the truth or prosecuting perpetrators. In naming victims and perpetrators, there are a number of stumbling blocks. Since the violence in these cases is state led, to name both victims and perpetrators is a "fundamentally political task."⁸ Without the approval and assistance of rulers, whether initiated by the new regime or with the cooperation of the old regime, naming victims and offenders is almost impossible. In particular, naming specific people—who ordered or endorsed violence—is a prohibitively difficult task. Even with their identification, assigning all responsibility for the calamity to a single individual is not enough.⁹ This is because institutional arrangements must have facilitated such a situation. To make the question more complicated, if the resolution adopts a moderate approach toward the perpetrators, then how a given society deals with those who may say "we were all victims"—that is, that the victims of violence include those who were forced to become evildoers at a particular juncture—is an unavoidable issue.¹⁰ The Khmer Rouge massacre in Cambodia is a good example: layers of orders and hierarchy were involved in executing the mass killing, as well as in causing deaths through starvation and disease, blurring the blade-cut line of responsibility; this was particularly true for the rank-and-file officials who were involved in the massacre but did not know about or predict the chains of atrocity and their consequences.

Counting the number of victims is also related to the settlement of past violence. This issue is problematic both in the process of calling for any form of perpetrator responsibility and in the process of applying criminal justice to perpetrators. It is probable that contentious numbers may haunt perpetrators and that discourses within a society may fall into a numbers game.¹¹ When the state considers reparation to victims, the numbers issue again becomes contentious, because of the significance of who will be entitled to reparations and who will be excluded. Unlike the issue of identifying victims and perpetrators, however, the numbers question is not a politically divisive, polarizing issue in a society in transition.

THE AFTERMATH OF VIOLENCE: THE JUSTIFIED, FEARED, AND FORGOTTEN PAST

Continued repression is a typical means of quelling any possible disturbance after the outbreak of state violence, but it is not the only means of doing so. First, the perpetrators in some cases examined here refuse to admit culpability, justifying the violence in the name of protecting integral state sovereignty. Consequently, the victims become double victims: once because of the physical and psychological wounds inflicted by the violence and again because of society's—not to mention the perpetrators'—treatment of the victims as an “enemy outside” and “enemy of the order.”¹² Those who risk association with the victims of violence are labeled subversives, raising suspicion that their behavior is also detrimental to the integrity of the state. The Thai military's repression has been described as a counterinsurgency measure, the Myanmar oppression has been justified for maintaining order within the state, and the demonstration at Tiananmen Square in China is still described as a disturbance of state order.

Because of the state's monopoly on the means of violence and its ability to determine the tone and temper of state-society relations afterward, the victims of violence do not have recourse to shelter within broader society. This dynamic alerts us to another important aspect of states that use violence against their own citizens. Such states invariably conflate state and regime security: threats perceived by the regime in power are automatically assumed to constitute threats to the state as well. This conflation is naturally interactive with strengthening regime legitimacy. More important, and within a broader context, such definitions also heavily influence the structuration of state-society relations. The regime's discourse and location of the context for the perpetration of violence simply collapse different layers and levels of society into regime-defined conceptions of proper and subversive behavior.

Second, fear, for both perpetrators and victims, leaves the postviolence situation unchanged in most instances. One explanation for this may be that just as fear of being ostracized makes victims remain silent, so fear of losing privileges and being subjected to punitive justice renders perpetrators equally resistant to settlement of past violence. Victims who did not lose their lives have often been heavily monitored, their movements restricted accordingly. Many of them have also been subjected to

lengthy periods of detention and even internal political exile, as in the case of Buru Island in Indonesia, the whole of which was designated as a prison colony. For the perpetrators, the fear is political rather than psychological or cultural.¹³ A rereading of the past may well render them liable to criminal prosecution. Consequently, it is not uncommon for perpetrators of state violence to destroy evidence that may implicate them, as shown in the cases of Thailand and Indonesia. In Indonesia, the Suharto-led regime actually imposed a ban on research and study of the period leading up to the violence against the PKI.

Finally, the emergence of regulated space maintained by the regime is another reason why past violence has not become a public agenda item. Within this regulated space, the rulers as offenders provide both victims and related groups with various incentives that may be more rewarding than remembering the violence and advocating some form of settlement. Some cases vividly illustrate the types of incentives involved. The reparation to the Okinawan victims in postwar Japan was intended, even if not successful, to create an official memory of them as loyal citizens who fought for the country, rather than as civilians who were killed by the imperial army. The donation to Buddhist monks and temples in postviolence Myanmar, which exceeded normal practices, was apparently aimed at inducing broader support from one of the country's most influential social and legitimizing groups. The rapid economic growth in reformist China not only benefited all Chinese people but also gradually marginalized critics of the regime. In other words, oppression is not the only means by which an unresolved situation is perpetuated; such regulated space also allows rulers to design many means to legitimate the violence afterward. It is difficult to predict how long such regulated space will survive, but it seems clearly to function to alienate victims from many segments of society, watering down the memories of the incident and invariably delaying its resolution.

DIVERGENT PATHS OF RESOLUTION

Most cases examined in this volume, except Korea and Cambodia, have not reached the point of resolution for the various reasons discussed above. Here it is necessary to start with an examination of the theoretical implications of the two different types of transitional justice if we are to understand the possible paths of resolution that individual postvio-

lence cases are likely to follow.¹⁴ The ongoing UN-sponsored tribunal in Cambodia stands for the initial stages of retributive justice, whereas the step-by-step resolution of the Kwangju incident, running parallel with democratization in the 1980s and the 1990s, represents an admixture of retributive justice and more restorative, reconciliatory justice.

Retributive justice, advocated mostly by legal scholars, maintains that prosecution is a precondition for other elements of resolution, such as repentance, reparation, and reconciliation. The central goals are to punish the perpetrators on the one hand and to reinstate the lost honor and human rights of the victims on the other. Standards of justice are situated within an international framework, that is, the international legal context of human rights.¹⁵ The advocates of retributive justice by and large place less emphasis on the institution as a context for the occurrence of state violence; they are also less concerned about social rehabilitation within a broader context. In the same vein, for these advocates, there is little room for forgiveness and reintegration within a more conciliatory framework.

On the other hand, advocates of restorative justice are mainly concerned with justice's transformative effect in relation to both perpetrators and the society at large. For them, resolution of the violence should be an impetus for the attitudinal and behavioral change of past offenders and for reintegrating them into a new society. Therefore, restorative justice is more closely related to forbearance and social unity than to any other forms of settlement, and for this reason, it is frequently called *reconciliation*. Reconciliation here presupposes "a condition of mutual respect among former enemies" and requires "reciprocal recognition of moral worth and dignity of others," to cite Ernesto Verdeja's normative definition.¹⁶ But reconciliation also has limitations. If the transformative effect of reconciliation is overly emphasized, then resolution of past violence may become a soft option without extensive truth-finding. No doubt, excessive concern about harmony and social consensus invites criticism from advocates of human rights, as well as victims of state violence.

There is quite an interesting parallel between the retributive-restorative dichotomy and the liberal-nonliberal distinction in such matters. The advocacy of retributive justice is akin to the liberal tradition, emphasizing protection of individual human rights and punitive measures over the violation of these rights, whereas advocacy of restorative justice prioritizes restoration of social unity rather than penalizing

measures. The retributive-restorative distinction also parallels, if not in exactly the same way, the private-public distinction. Whereas retributive justice values rights at the individual level, restorative justice essentially concerns the public nature of justice. The logic of the latter is that the wounds were inflicted in the name of public order, so that justice over the past public—meaning the old regime—is a crucial part of justice.¹⁷ In this logic, individual rights are relatively, if not absolutely, given less priority than the question of the legitimacy of the old regime.¹⁸

It is notable that just as the retributive-restorative dichotomy raises an intense theoretical debate, it brings about an equally difficult choice in the real world. In more than half of the cases around the world in the midst of the justice question, particularly in Latin America and Eastern Europe, the path of reconciliation has been taken. Ideally, retributive justice and reconciliatory measures should go hand-in-hand; they should be complementary. Probably the most idealistic approach is to begin with truth-telling and accountability for reinstating victims' political rights and saving them from the stigma of "enemy of the order," then moving to reparation, repentance, conditional amnesty, and forgiveness. In reality, however, the political elite are tempted to take the "second-best choice": social unity and reconciliation. This is so because they want to avoid social polarization in dealing with past violence.¹⁹ Even after regime transition, vestiges of the past are never totally displaced, and members of the previous regime often remain in positions of power and influence. This is especially the case if a military authoritarian regime was previously in power. The military's notion of discipline and solidarity often makes it difficult for perpetrators to be criminally prosecuted. Rank-and-file loyalties and the military's corporate image may also affect the form of resolution that is available. In fact, it is not uncommon for such regimes, or senior individuals within them, to arrange for immunity or impunity prior to regime transition.

Is there any practical need for truth-telling and its instrument, the truth commission, in the process of the resolution of past violence? The truth commission eventually aims at reconciliation even if it pursues strict punitive justice over perpetrators at the initial stage; the establishment of a truth commission presupposes—probably with the exception of the imprisonment of top commanders—such ensuing processes as offenders' repentance, victims' forgiveness, and amnesty from the succeeding regime. The success or failure of a truth commission depends on apprais-

als of its role. For instance, there are diverging views on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ttee (TRC) in South Africa. Advocates of human rights groups particularly have charged that the TRC watered down the legal standards of criminal justice and failed to play its expected role in restoring the victims' rights.²⁰ Furthermore, when the truth commission is considered a state-manipulated ritual and as presenting a spectacular scene of the victims' pain and suffering, it will be subject to severe public criticism. Such ritualistic public testimony may overly individualize political calamity and thus ignore the deeper structure of violence.²¹ Even if such appraisals or criticisms are not within the mainstream, the role of truth commissions, whether for postviolence resolution in a broader sense or for the healing of victims' wounds in a narrower sense, remains controversial.

The truth commission is not the only solution to past violence, but its value in regard to democratic practices should not be ignored. On the one hand, truth-telling, as Leigh Payne aptly notes, might justify violence if the offenders speak only about the crimes they wish to confess. In this case, the victims of past evils are victimized again rather than healed by such perpetrators' self-justification. On the other hand, truth-telling and truth commissions, as Payne argues, may contribute to democratization. Telling the story of the horrible experience of the victims; confessing to crimes, even if the narrative is incomplete; feeling repentance and remorse—all these actions open up some new space where a possible "contentious coexistence" may be created.²² The victims, who have been treated as the enemy outside, and the evildoers, who are now the enemy of justice, may be situated together with a new value: mutual accommodation. In this respect, Kirk Simpson notes the need for "communicative justice," through which public democratic deliberation and communication take place among all people, offenders as well as victims. Borrowing Jürgen Habermas's notion of communicative action in the public sphere, Simpson maintains that communicative justice is the core aspect of transition to peace and reconciliation.²³

In sum, dealing with past violence in East Asia (especially the unsettled cases of the Philippines, Myanmar, Thailand, Okinawa, China, and Indonesia), societies must pass through both contentious debates and hard-pressing political choices regarding the questions of retributive-versus-restorative justice and punitive-versus-reconciliatory resolution. The backdrop of this bifurcation may be relevant to the nature of state-

civil society relations at the particular juncture of the resolution of the past violence—for instance, whether or not state-civil society relations have changed since the occurrence of violence. In other words, understanding why a certain country takes a specific path—in relation to the resolution of past violence—must go hand in hand with understanding changes in state-society relations and democratization. If a country has no other way forward but to accept the international arrangement of resolution, then postviolence settlement is highly likely to begin with retributive justice. The ongoing trials in Cambodia illustrate just such an outcome.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AL TRANSITION AND RESOLUTION

Does the resolution of state violence bring about political transition, or does political transition provide an appropriate environment for resolution? What, if any, is the cause-and-effect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If the relationship is not one of cause and effect, how is one relevant to or interactive with the other?

To postulate: the resolution of past violence, either punitive or reconciliatory, is an inevitable step in creating new social relations, one that may truly take place in the process of transition. The analysis of state violence and its resolution is logically associated with an understanding of political change. On the one hand, reconciliatory resolution, as well as punitive justice in some sense, will likely promote new democratic practices and end the state's illegitimate use of violence and its old practices of transgressing human rights. On the other hand, room for the resolution of past violence is more likely created when the old regime breaks down or when the existing regime concedes to allow truth-telling. In the particular case of the existing regime's concession, such regimes tend to take preemptive moves to prevent harsher retributive justice by later rulers.²⁴ For example, an authoritarian regime may pass laws that admit, even if incompletely, its misdeeds and pardon those associated with state violence prior to a transfer of power, and the succeeding regime may acquiesce to such a request.

An empirical question arises from this ongoing discussion. Why is a new regime—or a newly emerging order—more likely to make the practical choice of restorative, reconciliatory resolution rather than rigid, victim-centered retributive justice in dealing with the past? In the majority of

state-violence cases, as exemplified in Spain, Chile, El Salvador, Brazil, and Poland, restorative reconciliation has been chosen.²⁵ One answer might lie in the presumption that reconciliation will be more viable in the long run.²⁶ It may be more practical and feasible to draw a consensus for social unity holding that perpetrators are fallible human beings who should be given a chance to contribute to reconstruction.²⁷

The more convincing answer, however, lies in the fact that transition in general involves many forms of institutionalization, such as introduction of an electoral system, consolidation of the rule of law, and establishment of power-transition rules; in turn, institutionalization entails various forms of negotiation, and bargaining and compromise are at the heart of the transition.²⁸ In this context, the resolution of the past violence tends to become one of several subjects of negotiation, a situation that both victims of violence and advocates of human rights sometimes do not expect to materialize. Also, resolution tends to become a topic of the *pact* between the opposition and the state in place—whether a rising new regime or the decaying old regime. According to Guillermo O'Donnell and Philippe C. Schmitter, such a pact is desirable for democratic transition, more effective than continuous contention with a divisive agenda.²⁹ The important point is something more than what is desirable; it is an empirical question of under what conditions transition is more likely to be successful, as exemplified by the TRC in South Africa and by the May 18 special laws in Korea. As opposed to the successful cases, the Argentine case is instructive in another sense. The Raul Alfonsin administration's rigid retributive justice for the crimes of the "dirty war," which was led by the military regime of 1976 to 1980 and brought about more than nine thousand deaths, ended in failure in 1989. In this case, overly restrictive, punitive justice arrived at an impasse, ironically polarizing the society because of the vestiges of military power and failing to properly respond to mounting public expectations in a time-constrained situation.³⁰

Particularly in the cases of Indonesia, Thailand, the Philippines, Myanmar, and China, the military has remained a significant feature of the state apparatus, either dominating or sustaining order within society, while showing varying degrees of change in its role since its involvement in state violence; therefore, the form of the military's engagement i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political transition deserves special attention in relation to the resolution of past violence. There should be increasing legitimacy concerns within the military regarding the process of

institutionalization, and such concerns must be closely associated with changes in the apparatus's perception of the threat and of the opposition, as Alfred Stephan notes.³¹ Further, the military's readiness to shift its major focus from the domestic order to its own professionalism is a key indicator of institutionalization, allowing means toward the resolution of past violence to be deliberated.³² In addition, the resolution of state violence depends on the relative empowerment of civil society at the time of transition, either positioning past state violence for punitive justice or arriving at compromise and reconciliation through negotiation and bargaining with the main perpetrator—the military, in most unresolved cases. It seems that the success or failure of resolution depends on the proximity of justice in application to each country's unique mode of transition rather than on the form of justice per se. Consequently, it is difficult to be prescriptive with regard to what models should be adopted in the East Asian cases. The natural fear deriving from any judgment of this sort, especially when longer-term reconciliation between the state and society is desired, is that the perpetrators of violence will be pardoned during the process of resolution on the utilitarian premise of achieving the greatest good for the greatest number.

NOTES

1. For an extensive discussion of the relationship among global significance, public awareness of state violence, and the ensuing alteration of state behavior, see James Ron, "Varying Methods of State Violence," *International Organization* 51, no. 2 (1997): 275–300.

2. H. H. Gerth and C. Wright Mills, eds., *From Max Weber: Essays in Sociolog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58), 78, 124.

3. Charles Tilly, *From Mobilization to Revolution* (Reading, MA: Addison-Wesley, 1978).

4. See Barry Buzan, *People, States, and Fear: The National Security Problems in International Relations* (London: Harvester Wheatsheaf, 1983).

5. For details on the Cold War situation and the Japanese government's ideological disposition, which impeded extensive research on Okinawa and other Japanese war-crime issues, see Yoshiko Nozaki, *War Memory, Nationalism and Education in Postwar Japan, 1945–2007: The Japanese History Textbook Controversy and Ienaga Saburo's Court Challenge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8).

6. Particularly for the Chinese case, see Jeffrey Wasserstrom, *Student Protests in Twentieth-Century Chin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1); L. H. M.

Ling, "Rationalizations for State Violence in Chinese Politics: The Hegemony of Parental Governance," *Journal of Peace Research* 31, no. 4 (1994): 393–405.

7. Hannah Arendt, "From *On Violence*," in *Violence in War and Peace: An Anthology*, ed. Nancy Scheper-Hughes and Philippe Bourgois (Oxford: Blackwell, 2004), 239.

8. Jemma Purdey, "Problematizing the Place of Victims in *Reformasi* Indonesia: A Contested Truth about the May 1998 Violence," *Asian Survey* 42, no. 4 (2002): 621.

9. *Ibid.*, 617.

10. Katherine E. McGregor, "Confronting the Past in Contemporary Indonesia: The Anti-Communist Killings of 1965–66 and the Role of the Nahdlatul Ulama," *Critical Asian Studies* 41, no. 2 (2009): 195–224.

11. One exemplary case of the numbers game concerns the number of casualties of the Nanjing massacre. The notion of the numbers game was inspired by Iris Chang, *Rape of Nanking: The Forgotten Holocaust of World War II* (New York: Basic Books, 1997); for details of the ongoing game, see Peter H. Gries, *China's New Nationalism: Pride, Politics, and Diplomacy* (Berkeley and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4).

12. Daniel Philpott, "Beyond Politics as Usual: Is Reconciliation Compatible with Liberalism?" in *The Politics of Past Evil: Religion, Reconciliation, and the Dilemmas of Transitional Justice*, ed. Daniel Philpott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2006), 17.

13. Brandon Hamber, "Flying Flags of Fear: The Role of Fear in the Process of Political Transition," *Journal of Human Rights* 5 (2006): 127–42.

14. For a comprehensive discussion of the retributive-restorative distinction, see Mark R. Amstutz, "Restorative Justice, Political Forgiveness, and the Possibility of Political Reconciliation," in Philpott, *Politics of Past Evil*, 165–67.

15. Vikki Bell and Kirsten Campbell, "Out of Conflict: Peace, Change and Justice," *Social and Legal Studies* 13, no. 3 (2004): 299–301.

16. Ernesto Verdeja, *Unchopping a Tree: Reconciliation in the Aftermath of Political Violence*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2009), 3.

17. Philpott, "Beyond Politics as Usual," 29.

18. For discussion of the conditions for successful retributive justice in particular, see Ellen L. Lutz and Caitlin Reiger, "Conclusion," in *Prosecuting Heads of State*, ed. Ellen L. Lutz and Caitlin Reiger (Cambridge an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275–93.

19. Philpott, "Beyond Politics as Usual," 17–19, 37.

20. Amstutz, "Restorative Justice," 175.

21. Michael Humphrey, "From Victim to Victimhood: Truth Commissions and Trials as Rituals of Political Transition and Individual Healing," *Australian Journal of Anthropology* 13, no. 2 (2003): 171–87.

22. Leigh A. Payne, *Unsettling Accounts: Neither Truth nor Reconciliation in Confessions of State Violence*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08).

23. Kirk Simpson, "Victims of Political Violence: A Habermasian Model of Truth Recovery," *Journal of Human Rights* 6 (2007): 325–43.

24. For self-punitive, preemptive moves, see Jon Elster, *Closing Books: Transitional Justice in Historical Perspectiv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258.

25. Paloma Aguilar, "Justice, Politics and Memory in the Spanish Transition," in *The Politics of Memory: Transitional Justice in Democratizing Societies*, ed. A. Barahona de Brito, C. Gonzalez Enriquez, and Paloma Aguila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92–118; Lavinia Stan, "Truth Commissions in Post-Communism: The Overlooked Solution?" *Open Political Science Journal* 2 (2009): 1–13.

26. See A. James McAdams, "The Double Demands of Reconciliation: The Case of Unified Germany," in Philpott, *Politics of Past Evil*, 129.

27. *Ibid.*, 149.

28. Helga A. Welsh, "Political Transition Process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Comparative Politics* 26, no. 4 (1994): 391.

29. Guillermo O'Donnell and Philippe C. Schmitter, *Transitions from Authoritarian Rule: Tentative Conclusion about Uncertain Democracies*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4).

30. Amstutz, "Restorative Justice," 169–72.

31. Alfred Stephan, *Rethinking Military Politics: Brazil and the Southern Con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8), 64–66.

32. For the significance of the military's professionalism in transition, see Juan J. Linz and Alfred Stephan, *Problems of Democratic Transition and Consolidation: Southern Europe, South American and Post-Communist Europe* (Baltimore and London: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6), 219–20; Deborah L. Norden, "Democratic Consolidation and Military Professionalism: Argentina in the 1980s," *Journal of Interamerican Studies and World Affairs* 32, no. 3 (1990): 151–76; J. Samuel Fitch, "Military Professionalism, National Security and Democracy: Lessons from the Latin American Experience," *Pacific Focus* 4, no. 2 (1989): 99–147.

Getting Away with Murder in Thailand

State Violence and Impunity in Phatthalung

Tyrell Haberkorn

Every side, every circle, wants one thing only: to conceal the wickedness. This will make it possible to continue to kill, and then deny that it is real.

— Yotthong Thabtiumai, *Thang Daeng, Na Sai, Ko. Oo. Ro. Mo. No., Phraratchabandit To Tan Kommunit*

In February 1975, student activists exposed a series of brutal murders of citizens by the Communist Suppression Operations Command (CSOC) and other state security forces that had taken place two and a half years earlier in Phatthalung province in Thailand.¹ The *thang daeng*, or “red drum,” killings gained their name from the method of killing employed. Accused of engaging in communist activities or tacit support for them, citizens were arrested, or simply taken, in large sweeps across districts throughout the province and brought to detention camps for interrogation. While some detainees were released after being interrogated, others were tortured and then killed. At night, after being beaten until uncon-

scious or with irons around their necks, individual citizens were placed into empty two-hundred-liter oil drums at the edge of the detention camps, doused in oil, and then burned alive. While the bodies were burning, truck engines were revved to partially mask the screams of those who were being murdered. The engines only partially masked the evidence of what was occurring, because those who survived recalled both the screams and the sounds of the engines. Villagers and students estimated that several thousand people in Phatthalung, perhaps as many as three thousand, were killed as alleged communists in this manner.

Between February and March 1975, the killings became open knowledge as details of them, sometimes conflicting, were brought to light in newspapers and at public events. Nearly every day for two months, most major Thai newspapers carried extensive coverage of the exposure of the *thang daeng* killings, including the testimonies of survivors and of the families of those who were killed and the varied state responses to the exposure.² This information then became the foundation for debate as survivors, students, and state officials discussed and disagreed about what should be done in the aftermath of the killings. When the *thang daeng* killings were perpetrated in late 1972, the dictatorial and severely anti-communist regime of Field Marshal Thanom Kittikachorn, Field Marshal Praphat Jarusathien, and Colonel Narong Kittikachorn ensured that there was no public outcry or opposition. In sharp contrast, the public exposure of the killings occurred during the brief period of democratic politics and increased political participation from all sectors of society that began with the end of dictatorship, with the October 14, 1973, movement.³

While the open murder of citizens was possible under a dictatorship, within the context of open politics, survivors and student activists demanded that the state officially investigate the killings, and the state was forced to respond. In mid-February 1975,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tthasit Sitthisunthorn, created a committee to investigate the allegations; Atthasit claimed that if state officials had acted improperly, then they would be punished according to the law.⁴ But a little over a month later, when the committee concluded that state officials had acted improperly, they were not punished. The summary of the investigation released to the press stated that yes, innocent citizens had been killed in *thang daeng*, but only seventy or eighty people were involved, rather than thousands. No one was punished, and the work of the Internal Secu-

rity Operations Command (ISOC), which replaced the CSOC in 1973, continued as usual.⁵ Over thirty years later, the ISOC remains active in protecting the nebulously defined “national security” of Thailand; questions continue to be raised about the precise role of ISOC within the Thai military and security apparatus and where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falls in their policies and actions.

While the exposure by students and villagers was marked, and made possible, by the events of October 14, 1973,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investigation perhaps foreshadowed the return to dictatorship that came a year and a half later in the form of the October 6, 1976, massacre and coup.⁶ Yet for a variety of reasons, and heralding the production of impunity that contributed to making it possible for unarmed students to be killed in broad daylight on October 6, 1976, the calls for state accountability for the thang daeng killings were silenced and then refuted by the 1975 Ministry of the Interior report.

In *Unsettling Accounts: Neither Truth nor Reconciliation in Confessions of State Violence*, Leigh Payne examines state confessions in four nations—Chile, South Africa, Brazil, and Argentina—undergoing both democratization and a range of judicial processes focused on past violence. Payne argues that “confessions do not settle accounts with the past; rather, they unsettle them.”⁷ Public discussion and telling of what happened does not create a single truth about the past but instead facilitates what she calls “contentious coexistence.” This mode of being and relating socially and politically in the aftermath of violence “rejects infeasible official and healing truth in favor of multiple and contending truths that reflect different political viewpoints in society” and “is stimulated by dramatic stories, actors, or images that provoke widespread participation, contestation over prevailing political viewpoints, and competition over ideas. Contentious coexistence, in other words, is democracy in action.”⁸ Payne’s analysis is provocative and hopeful, suggesting that it is precisely at the moment that past state violence becomes public, even when denied by perpetrators, that it becomes challengeable by citizens. It is this sense of possibility that makes contentious coexistence a part of democratization. Yet what happens when exposure of past violence and confessions of state involvement occur not during a period of democratization, but while a nation is precariously perched between democracy and dictatorship and hurtling toward dictatorship? Is it possible that then exposure, discussion, and ultimately a lack of accountability contribute to the pro-

duction of increased impunity, manifested in the failure to stop the violent actions of state officials and hold them accountable?

This question is the point of departure for the remainder of this chapter. Forty years after the killings occurred, what is known about them remains plagued by inconsistencies, lacunae, and a persistent lack of resolution. The duration of the killings is unknown, although survivor and family accounts cite August 7, 1972, as the beginning of the arrests. The number of people who disappeared and were murdered varies widely, with some state officials estimating approximately eighty deaths and student activists instead estimating three thousand deaths. Most troubling, the precise nature of state involvement—including units, motivation, actions, and recordkeeping—remains obscured. The involvement of the Thai monarchy, even at the level of knowledge of the killings, remains obscured and unquestionable given the sanctions raised by the specter of Article 112 of the Thai Criminal Code (the lese majeste law). At a minimum, these questions will require the Thai state to make its documents about the killings available.⁹ State documents related to the killings, including the 1975 report, remain unavailable in the National Archives of Thailand.

In Vince Boudreau’s terms (see chapter 1, this volume), the thang daeng killings and the subsequent failure to secure accountability were examples of both instrumental and exemplary violence. The public production of impunity served as both an event silencing dissent and a pedagogical reminder to dissident (and nondissident) citizens of the lack of paths for redress and justice open to them. My contention in the case of the thang daeng killings in Phatthalung province is not only that the public exposure of the killings, and subsequent failure to hold state actors accountable, led to the further consolidation of impunity, but that an end to impunity can, and perhaps must, begin with understanding this process. This means tracing how the thang daeng killings were exposed, how state officials publicly responded, and how the decision not to take action to hold officials responsible emerged. In so doing, questions of how citizen fear of violence at the hands of state actors is consolidated, how state actors systematically evade responsibility, and ultimately how justice is foreclosed come to the surface.

Perhaps surprisingly, given that a blanket restriction on the release of documents pertinent to “national security” means that state documents related to the thang daeng killings in 1972 will not be publicly available

in the foreseeable future, there *are* documents in the National Archives that can aid in this endeavor. In particular, there is a file of news clippings about the exposure in 1975, comprising three folders containing a total of 149 pages of news coverage about “the work of the Internal Security Operations Command and the case of thang daeng” (kan damnoen ngan khong amnuayekan raksa khwam mankhong phai nai lae karani thang daeng).¹⁰ The presence in the National Archives of the thang daeng file, which is a document of inaction and what was *not* done, provides a sliver of hope. The Thai state records and preserves the public accounting of its inaction, even as its own documents are unavailable for survivors, scholars, and others concerned about the thang daeng killings. Before turning to the exposure, I begin with the stories of Teacher Lim and Teacher Ploy, which I summarized from reports in *Thai Rat*, the largest-circulation daily Thai-language newspaper, contained in one of the folders.

TEACHER LIM

On August 7, 1972, Lim Phaosen, a teacher in Phatthalung province, was taken from his home and never returned. Teacher Lim left the house in the morning to go observe a school in another district as part of his work as the acting head teacher in his village. While he was out, an army soldier came looking for him. His mother-in-law, Kloy Ketsang, said he was not home and told the soldier to come back later. The soldier searched and found Teacher Lim in the other district and forced him to come with him. He took Teacher Lim home and asked him to change his clothes, as he was wearing a sarong, and then took him to a nearby army camp to meet his superiors. Chaweewan, Teacher Lim’s eight-year-old daughter, was home from school while this series of events occurred and pleaded with the soldier not to take her father away. Chaweewan and her grandmother cried and asked the soldier to let them come to the camp too, but he refused. When Khruawan, Teacher Lim’s wife, arrived home in the evening, she became immediately concerned. Teacher Lim suffered from chronic illness and had not taken his medication with him. But the soldier had not given Kloy or Chaweewan information on where precisely he was taking Teacher Lim.

Chom Kaewpong, another man from Teacher Lim’s village, was taken on August 7, 1972, as well, but he was released a few days later. Chom told Khruawan that he had seen Teacher Lim at the camp where he was

held. She quickly prepared a supply of medicine for Teacher Lim and rushed to the stated camp. When she arrived at the army camp where Chom had been held and released, the soldiers told her that they had not arrested Teacher Lim and that he was not there. Khruawan then went from camp to camp in Phatthalung but did not find Teacher Lim or anyone who had information about him. She went to neighboring Songkhla and Pattani provinces but was still unable to find her husband. Finally, she learned from a survivor of Thachiet camp that he had been burned in a thang daeng. The same person told her that Teacher Lim had been killed because he opposed the corrupt dealings of a locally influential person who wanted a contract to build a new school. Teacher Lim had been a civil servant for over ten years, but Khruawan was unable to obtain his death benefit or even his last month’s salary. The reason: there was no body, no death certificate.¹¹

TEACHER PLOY

Ploy Prap-in, age thirty-nine, was a teacher who narrowly escaped the thang daeng in Phatthalung. On August 10, 1972, he was taken and stuffed with others from his village into a GMC truck and transported to Thachiet army camp. In language reminiscent of earlier and later periods of extrajudicial detention, Teacher Ploy was told that he was not being arrested but was “invited” (*choen*) to the camp. Once one is arrested (*chap*), certain procedures and record-keeping mechanisms must be followed under Thai law. “Invitation” is a slippery linguistic trick of obfuscation. If Teacher Ploy was “invited,” it was an invitation without the possibility of refusal.

Upon arrival at Thachiet, officials accused Teacher Ploy of working with his colleague Teacher Lim to foment unrest. They were allegedly going to make Xeroxes of tracts from the Peoples’ Liberation Army of Phatthalung to distribute in the market. Then they were going to burn government buildings, including a health center, and kill army soldiers and Village Defense Volunteers. At the close of this interrogation, Teacher Ploy was told that if he did not confess to these crimes, then he would be killed in a thang daeng. A soldier took Teacher Ploy to a large tent at the edge of the camp. He saw blood staining the ground near the tent. When he entered the tent, he saw over sixty villagers, many of them with obvious marks of torture on their bodies. Teacher Ploy was interrogated every

day while at Thachiet. His fellow villagers told him that if you were called for interrogation at night, then you were going to be killed. The villagers told Teacher Ploy that even though the soldiers guarding the tent told those who left at night that they were being released, this was not true. Instead, people were forced to sign a statement confirming that they were being released, and then they were killed. Every night those inside the tent saw the fires as the oil and bodies in the thang daeng burned.

On his fifth night in the tent, Teacher Ploy was taken to be interrogated. He was forced to sign a paper stating he had been released. Then, a high-ranking officer came into the room and said that he was innocent and to take him back to the tent. Teacher Ploy was held for seven more days. During those days, he underwent “training” (*kan fuek obrom*) in the camp. He was very surprised to see himself in documents distributed by trainers from the CSOC. Apparently he and Teacher Lim had turned themselves into the CSOC and confessed to planning to distribute communist documents and destroy government property. He had neither turned himself in nor confessed. After his release, Teacher Ploy remained afraid but felt lucky to be alive and returned to work.¹²

THE ARBITRARY BOUNDARY BETWEEN VILLAGERS AND COMMUNISTS

The thang daeng killings unfolded in a part of Thailand that is remote, marked by relatively difficult terrain, and with a persistently violent history. Phatthalung is located in southern Thailand, bordered by Trang, Nakhon Sri Thammarat, and Songkhla provinces. The province is contained within the Fourth Army Region, which has a long record of presiding over the violation of the rights of citizens in the service of alleged counterinsurgency during the 1970s and alleged counterterrorism since 2004.¹³

When thinking about the thang daeng killings, whether there was an actual communist insurgency in Phatthalung is not an issue. There *was* an insurgency, and Phatthalung later became a stronghold of the Communist Party of Thailand (CPT). Instead, what is of concern is understanding how violence emerged in response to both actual insurgency and a fear of unbridled possible insurgency. What is of concern is how people were killed as communists even when they were not and understanding how it became possible to blur the line between communist and ordinary

villager. What is of concern is how it became state policy, official or unofficial, to arbitrarily select people to be brutally killed and destroyed.

Although the thang daeng killings took place over a period of months beginning in August 1972, both CPT activity and repression of villagers by state officials began many years earlier in Phatthalung. Many of the inhabitants of Phatthalung are rubber tappers, and John Dennis argues that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of Phatthalung, as well as the rubber tappers' connections with the global market, may have helped the CPT develop there.¹⁴ The CPT became active in Phatthalung province and neighboring Trang province in southern Thailand in 1963.¹⁵ In 1963, several hundred police and army officers conducted mass arrests of over two hundred people, including lawyers and teachers. Within two months, almost all of those arrested were released due to a lack of evidence sufficient to bring official charges of communism against them.¹⁶ Then, in 1964, in a conflict between a policeman and alleged communists, an alleged communist was killed and the policeman injured. Writing about the events in the years leading up to the thang daeng killings, Thanet Aphornsuvan cites this event as the beginning of intensified violence against villagers—communist or not—in Phatthalung.¹⁷ When one reporter asked people in Phatthalung why they had joined the CPT, they responded that “it all began when the people in the province decided they were not receiving proper welfare and just treatment from government servants.” The same reporter estimated that by 1971, six hundred communists were active in Phatthalung.¹⁸

In 1971, Field Marshal Praphat Jarusathien, one of the three ruling dictators in power until the October 14, 1973, movement, claimed that within six months all traces of communists and communism would be eradicated from Thailand.¹⁹ One particularly proactive response to this statement came from a teacher and Village Defense Volunteer from Kha-ochaison district in Phatthalung, Yongyut Dusithamo.²⁰ Teacher Yongyut recruited a group of young men and instructed them to re-create the appearance of having fought with communists. Thirteen young men were given five guns and twenty bullets per night. After 9 P.M. every evening, they shot the guns into the air and ran through the rice fields, trampling the stalks and destroying the rice. Teacher Yongyut also provided chickens for them to kill to create blood-laced messy evidence of their encounters with the communists. This nightly killing of a chicken was necessary since the alleged communists were not real. With the chicken blood as

evidence of their presence, the young men could report that the communists always fled. After using their allotted bullets, the young men ran to tell the nearest village headman in a given area that they had fought the communists, but the communists had escaped.²¹

Teacher Yongyut and his fellow Village Defense Volunteers used similar strategies to produce a logic in which there was both a formidable communist presence in Phatthalung as well as a need for their increased financial support. Through their nightly fights with a chicken, his volunteers produced an idea of communists so fierce that they always escaped, unstoppable even when wounded. If this many communists allegedly existed and needed to be eliminated, but did not really exist, then who would be killed in their place?

One answer is in how the thang daeng killings unfolded. While a range of experiences are described in the various thang daeng accounts, common to all is a high degree of arbitrariness. Villagers were asked to inform state officials about who among their neighbors and colleagues was a communist. In some cases, this was an informal process, and in others, villagers were actually placed on the payroll of the CSOC as spies. One could end up on the communist blacklist due to a dispute over an unrelated issue with a neighbor; the blacklist became a way of eliminating one's enemy.²² *Actually* being a communist was not a requirement for being taken, and reports indicate that the first to be arrested were those who knew about the corrupt, abusive actions of state officials, such as Teacher Lim. Within this context, personal connections could function to lead to either one's death or one's survival, as in the respective cases of Teacher Lim and Teacher Ploy. Aside from the use of blacklists, in many villages there were mass arrests. A large number of people would be arrested in a sweeping operation, and then those deemed to be innocent would be released after being interrogated.²³ Those who witnessed the operations reported that a large number of security officials—fifty to sixty in the middle of the night or one hundred during the day—surrounded the house of the alleged communist.²⁴

Upon arrival at the camp, detainees were accused, similar to Teacher Ploy, of plotting and/or committing crimes against the Thai state. In the days that followed their initial detentions, many detainees were interrogated multiple times and frequently tortured. Villagers who were taken and those close to people who were taken reported that forms of torture used during interrogation included electric shock, withholding food, and being

beaten and kicked in the chest and head until one passed out.²⁵ Throughout the period of detention, any physical torture was accompanied by fear of the possibility of what would happen when the security forces ceased their interrogation. Would one be released, like Chom Kaewpong and Teacher Ploy? Or would one be killed in a thang daeng, like Teacher Lim?

EXPOSING THE THANG DAENG KILLINGS

After the October 14, 1973, movement ousted the ruling dictatorial triumvirate of Field Marshal Thanom Kittikachorn, Field Marshal Praphat Jarusathien, and Colonel Narong Kittikachorn, King Bhumipol Adulyadej appointed Sanya Thammasak, rector of Thammasat University, as the interim prime minister. The first elections during the period of open politics were finally set for January 26, 1975. In the weeks and months preceding the election, many student activists traveled throughout the country spreading information on democracy and talking with people about how to participate in politics. While doing this work in southern Thailand, Phinij Jarusombat, the head of the political wing of the National Student Center of Thailand (NSCT), heard stories of the thang daeng killings from villagers he met. From Chachoengsao province in the central region, Phinij was a fourth-year law student at Ramkhamhaeng University, the open university in Bangkok. After hearing about sweeping arrests, detention, torture, and killings in the thang daeng, Phinij wanted to investigate to have a fuller picture of what had happened in 1972 in Phatthalung province. When he returned to Bangkok, he brought the issue to his colleagues in the NSCT.²⁶

The NSCT and the United Front against Dictatorship (UF), a progressive network of students and nonstudents alike, formed a committee in early February to study and then disseminate information about thang daeng to the public. Their logic was that this was not an isolated case and that the Thai people needed to know what had happened during the time of the previous dictatorship.²⁷ In the month that followed, the NSCT and the UF brought villagers from Phatthalung to Bangkok and then sent a delegation of students, doctors, and journalists from Bangkok to Phatthalung. The intention of bringing villagers from Phatthalung to Bangkok was to create the opportunity for survivors of thang daeng to directly share their experiences with the people and the media. Then, they were going to meet with the newly elected government of Seni Pramoj to decide

How to create justice for the survivors and families of those who had been killed or had disappeared. Finally, while the villagers were in Bangkok, the NSCT and the UF intended for them to meet with General Kris Sivara, the commander of the army, to figure out how to ensure the safety of the villagers, because they remained afraid of state security forces.²⁸ Then the delegation from Bangkok would use its time in Phatthalung to compile as much specific information about the thang daeng case as possible to present to the government.

PUBLIC TESTIMONIES AND NATIONAL DEMANDS

The NSCT planned an event on Sanam Luang, a public grassy space and frequent site of protests across the street from Thammasat University in the heart of Bangkok, as the centerpiece of its exposure of the thang daeng killings. In preparation for the event, Phinij Jarusombat and a group of villagers, including Abdulmanee Abdullah, a former CSOC employee, and Samart Rakradej, a village headman who had helped the NSCT organize the collection of evidence and the names of people killed in thang daeng, met with the prime minister and other state officials to inform them of their plans.²⁹ Together with the Socialist Party of Thailand (Phak Sangkhomniyom Haeng Prathet Thai, or SPT), the NSCT called for the dissolution of the ISOC.³⁰ The SPT viewed the ISOC as “creating great suffering for the people and the most vile criminal.”³¹

Even before the event on Sanam Luang, villagers in Phatthalung who intended to speak out became the targets of criticism and threats. On February 9, a group of NSCT activists went to Phatthalung because the villagers planning to come to Bangkok had been threatened by four unknown figures (*khon luek lap*) who followed and threatened them, telling them “to not bring the issue to the public in Bangkok.”³² On February 10, there were reports of a murky declaration (*talaengkan mued*) saying that the conduct of the students was “a violation of the law and a dishonoring of Thai people” that would create chaos.³³ Yet what law was being violated by the exposure of state violence, and *who* stood to be dishonored by its exposure? While it is tempting to discard this statement solely as an inaccurate attempt by those against the exposure to discredit the individuals involved, taking it seriously reveals the existence of multiple layers of impunity. The *law* that was being violated was not one contained within the criminal or civil code, but rather the unchecked, unquestioned

power of the state. By bringing to light what happened during the thang daeng killings, students made this latent law visible. If anything was being dishonored, it was the image of the ISOC and other state actors as protectors of the citizens.

Despite these threats, the NSCT, the UF, and the SPT continued with plans for the event on Sanam Luang. On February 14, at 4 P.M., there was a (Hyde Park-style) public hearing, entitled “Report of killing the people by throwing them into a red barrel and burning them,” which was attended by over twenty thousand people.³⁴ Approximately thirty villagers from Phatthalung traveled with Samart Rakradej back to Bangkok to attend the event, and nineteen spoke about their own and their families’ experiences of thang daeng.³⁵ One villager who came to Bangkok said that they had called on officials in Phatthalung before, but no action had been taken. This had “caused many people to feel afraid up until today.”³⁶ Although those participating in the event on Sanam Luang were full of fear, this villager, joining with others, suggested that participation was also transformative.

In what might be read as a response to the allegation that students were violating the law, Sutham Saengprathum, a student leader, explained during the event that “the majority of Thai people believe in religion. [We have] laws that people who act wrongly are judged via a judicial process. But when the administrative class makes themselves those who decide (justice), the life of the people has no meaning.”³⁷ Sutham’s idea of law was one with no space for the unchecked power of the state. *Everyone* was subject to the same judicial process. On Sanam Luang, two demands were articulated: to dissolve the ISOC and to compensate those whose family members had been killed. The ISOC was identified as the common thread across the various accounts of terror in Phatthalung. While most of those who came to Sanam Luang supported the exposure of the thang daeng killings, a small number of members of Krathing Daeng, one of the right-wing parastate groups active in Thailand between 1973 and 1976, also attended the event.³⁸

A day later, the two demands were lengthened into six:

1. For the government to protect the people of Phatthalung who have brought the issue out into the open, including both those who have spoken out about the issue and those who have called on the government to accept responsibility.
2. For the government to compensate people whose relatives were killed and people who were tortured by state officials.

3. For the government to remove soldiers and Village Defense Volunteers.
4. For the government to punish officials who acted in excess of the law.
5. For the ISOC to be dissolved.
6. For the Anti-Communist Activities Act to be repealed.³⁹

The new set of demands went beyond identifying the ISOC as the perpetrator of the killings and asking for compensation to addressing the broader context of fear and the dangers of counterinsurgency. With the extended set of demands, the issue of holding the many different actors involved accountable also came to the fore. On February 15, the Phatthalung villagers met Minister of the Interior Atthasit Sitthisunthorn at his home in Bangkok. When presented with the demands, he said that “this is the first time he had received an official complaint about the case” and “that although no official protest had been lodged it is the duty of the provincial authorities to take the ‘serious matter’ up as soon as possible.”⁴⁰ Since almost three years had passed since the killings took place, Atthasit believed that a period of study and research was needed before a response to the six demands could be made.⁴¹ By the end of the month Atthasit had commissioned an official report on thang daeng to be carried out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but his response to the demands led to the proliferation of other responses and rumors. One of these rumors cited an unnamed source within the army who said that an internal report commissioned by General Kris claimed that “government troops were ‘used’ by village headman to kill 16 personal enemies in a rival group,” the parties engaged in rivalry over “mining and sexual relations issues.” Ten additional people had allegedly been arrested in that sweep but then released.⁴² While it is impossible to confirm whether this particular account is true, many within the state itself did confirm that arrests were arbitrary and based on personal conflicts in a given village or district. As students, doctors, and journalists prepared to travel to Phatthalung, rumors proliferated, and tensions in Bangkok and the south increased.

THE DANGERS OF SPEAKING ABOUT VIOLENCE

While a range of state officials reacted negatively to the events exposing the thang daeng killings in both Bangkok and Phatthalung, the lengths

to which they went to attempt to stem the exposure in Phatthalung was dramatic. Abdulmanee Abdullah, a villager from Phatthalung who had worked with the ISOC prior to thang daeng but then resigned and later joined the efforts to expose the killings, commented that those who dared speak about the events lived in a “kingdom of fear” (anachak haeng khwamklua).⁴³ Abdulmanee and others who joined the exposure were threatened and followed by assassins.⁴⁴ Members of the security forces who were perpetrators during the thang daeng killings clearly did not expect that their actions would become the object of public scrutiny and stood to potentially suffer if they did. If the reaction to the exposure and those who spoke out can be read as diagnostic of the dangers of speaking out, the risks increased as the exposure moved from Bangkok back to Phatthalung itself. In other words, it may have been more dangerous to break silence locally, where the killings occurred, than in the national center of Bangkok. As the exposure, and the reaction to it, began in Bangkok and moved south a few weeks later, the right wing inside and outside the Thai state was gathering force. The increasingly violent reaction to the exposure of the thang daeng killings was both caused by and indicative of the disappearing space for dissent in Thailand in mid-1975.

These risks did not stop people from speaking, however, and shortly after the NSCT began its exposure, a group of Phatthalung villagers told the newspaper *Daily Time* of their willingness to be witnesses if the state decided to investigate. They shared their addresses and names with the newspaper, which then published the information. Mr. Somnuksang, a lawyer, told *Daily Time* about his brother, Mr. Chamsangkaew, who had been accused of allegedly supporting the CPT in 1972. He was interrogated and harangued by the village headman in front of his fellow villagers while Chamrat Mahapol, the provincial head of the CSOC, watched from the sidelines. One month later, CSOC officials came to find Mr. Chamsangkaew, but he had already fled to Bangkok. Mr. Banjong Khaekpheng, a teacher, had been taken and investigated by the CSOC for allegedly fomenting bad feelings against officials among villagers and being a communist during the time of thang daeng. Like Teacher Ploy, he was recognized by one of the CSOC officials and released from the tent before he was killed in a thang daeng. Mr. Kawisak Oonruang, a lawyer, had heard a loud noise outside his door while he was sleeping. He thought the noise was a villager with a problem. When he opened the door, he was surprised to see a group of sixty CSOC officials and Village Defense

Volunteers. Mr. Kawisak started to close the door, but one of the CSOC officials accused him of trying to flee as a dirty communist. Mr. Kawisak was not taken to an army camp but interrogated in the field of the local headman. Many people whom he had helped, or sat and chatted with while drinking, were there as Village Defense Volunteers, so one of them told the CSOC to release him. When they came forward with their stories in February 1975, all three were ready to be witnesses.⁴⁵

Immediately after the event on Sanam Luang, the NSCT and the UF formed a committee to organize their trip to Phatthalung to interview people like Mr. Kawisak, Mr. Banjong, and Mr. Somnuksang. They went to speak with General Kris about their planned trip and to ask for cooperation from the army and the ISOC, as one of the other rumors circulating in mid-February was that soldiers were going to shoot at students if they came to the south. General Kris assured the NSCT committee that they would be safe in Phatthalung.⁴⁶ The trip was set for February 17–22; journalists from *Athipat*, *Prachathipatai*, *Prachachaat*, *Daily Time*, *Thai Rat*, *Bangkok Post*, and an international news wire service were also planning to join the expedition.⁴⁷ A total of sixty students, with representatives from Chulalongkorn University, Thammasat University, Mahidol University, and Ramkhamhaeng University, were going to split into six groups to visit different regions of the province. Two members of each group were medical students from Mahidol University, who would provide services for villagers lacking access to public health centers.⁴⁸ The primary purposes of the trip were to support villages who were courageously speaking out, to gather evidence and the names of people who had been killed or disappeared during the thang daeng killings, and to build networks to continue working for justice on the issue.⁴⁹ In a broader sense, the NSCT planned to use the trip as an opportunity to learn about additional problems faced by villagers in Phatthalung and southern Thailand.⁵⁰

Yet from the moment of their arrival in Phatthalung, members of the delegation met with resistance from local officials despite the alleged cooperation that they were to receive.⁵¹ Asa Mongkolsiri, a district officer, was one of the loudest voices interfering with the NSCT delegation. Soon Khamnurak, whose three nephews had died in thang daeng, said that Asa Mongkolsiri had called a district meeting on February 20 and told everyone present not to believe the newspapers. Instead, they should only believe village headmen and other state officials. Soon noted that Asa had “said that the students were going to incite us to go to the jungle. They did

not come to spread democracy. If we didn’t believe him, we would suffer more.”⁵² Another report alleged that Asa had given villagers food, clothing, and other items and told them to keep quiet about thang daeng.⁵³ Asa told *Prachathipatai* newspaper that he had not told people not to talk to the students. During his time as district officer, only two young children had come to see him about relatives who allegedly disappeared during the thang daeng killings. At the same time, however, he said that the news about thang daeng was a strategy of the CPT to convince people to go to the jungle.⁵⁴

When the students arrived in Ban Phut subdistrict, Asa turned his warnings into action. He used a megaphone to attack the students, his verbal intimidation matched by the presence of fifty armed soldiers. Asa and the soldiers finally left at 5 P.M., and students then organized a debate and discussion. Many villagers spoke; the conclusion was that at least two hundred people had been killed in Ban Phut. Saphak Panui, who had worked as a patroller for the army in 1972, said that typically seven or eight people were killed each evening. He said that the soldiers drank while they killed people and as the bodies burned.⁵⁵

Asa Mongkolsiri was not the only person who acted against the NSCT investigation. One deputy district officer, Surinthorn (last name unknown), told villagers that the students had come to agitate and advised against talking to them. In particular, he claimed that if they talked to students, “it will cause [our] homeland to become chaotic and return to dictatorship again.”⁵⁶ Posters were put up saying that students should leave and go back to studying and reading books.⁵⁷ When students went to one village in Khaochaisan district, they saw a poster that stated: “Dear children, commit yourselves to studying. Don’t create divisions. Now they live together peacefully already.”⁵⁸ In another part of Phatthalung, students faced accusations that they had come to burn down the market and incite the people to riot.⁵⁹

Given the intimidation and harassment the NSCT delegation faced, Phinij Jarusombat estimated that it only covered one-tenth of the affected communities. Despite the difficulties, the delegation’s members collected the names of 809 people who had been killed or who had disappeared during the thang daeng killings.⁶⁰ Perhaps unintentionally, the efforts of Asa Mongkolsiri and others to silence villagers and intimidate the NSCT delegation signaled the need for exposure. These efforts can be seen as a form of denial of wrongdoing, in which “perpetrators acknowl-

edge the stories of victims and survivors and challenge the regime's justifications."⁶¹ If the stories of thang daeng did not matter, why would Asa give villagers free goods in an attempt to silence them? Why would soldiers be willing to spend the day watching as Asa yelled at students? Why would posters be made and put up in communities telling students to go back to reading books, rather than seeking knowledge of recent violence? And what forms of violence and intimidation against those who spoke out did not make it into the newspaper and other reports about the exposure?

What was at stake, it seems, was not only the issue of the facts of the thang daeng killings itself, but the capacity of the security forces to control life in a broader sense in Phatthalung. The importance of this was particularly clear in how state officials invested in keeping the killings hidden reacted to state officials who joined the exposure efforts. For example, Chamlong Porndetch, appointed as the governor of Phatthalung province in early 1975, came into constant conflict with the head of ISOC for the province as well as certain district-level officials in Phatthalung. As soon as news of the NSCT/UF's exposure of the thang daeng killings emerged in early February 1975, Chamlong expressed his desire to learn more about the events, which had occurred before he became governor. Upon arrival in Phatthalung, he was made very aware that the people were afraid.⁶² Chamlong told Phinij Jarusombat and the NSCT that "I have heard news about this kind of assassination of the people. But I don't have witnesses or evidence, because the people are terrified. They are afraid to talk openly with civil servants about it."⁶³ While Chamlong supported the exposure, his colleagues fought, openly and secretly, to put a halt both to the exposure and to his involvement in it. In mid-1975, after facing death threats and constant harassment, Chamlong asked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to transfer him from Phatthalung to another province. Rather than being uniform, state responses to the exposure of the thang daeng killings were widely divergent. Some actors, such as Asa Mongkholsiri, were vehemently against the exposure, while others, Chamlong included, risked their position and even personal safety to push for further investigation. In a different political moment, perhaps when Thailand was not hurtling toward a return to dictatorship, Chamlong Porndetch and his allies might have been able to force the emergence of accountability within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or the state security apparatus that it attempted to monitor. Yet in mid-1975, his position within the bureau-

cracy was not even secure enough to keep him safe from threats. If state officials who dissent can be threatened or forced to resign or flee for their lives, what can happen to ordinary citizens?

THE PRODUCTION OF IMPUNITY

From the very beginning of the exposure of the thang daeng killings, citizens and state officials offered a range of often contradictory statements, what Payne calls "unsettling accounts," that created "political competition over how to interpret dramatic political events, how to use them, and what they mean for contemporary political life."⁶⁴ In a time of democracy, competition over interpretation of a violent past may "not end by killing off democracy or saving it. Instead, it puts into practice the art of competition over ideas and the possibility of building consensus around democratic values."⁶⁵ But extrajudicial violence was on the rise in Thailand in mid-1975, and public airing of the debate became an opportunity to demonstrate the sheer vulnerability of those who spoke out.

When he met with villagers who came to Bangkok, Interior Minister Atthasit said that a committee would be formed to investigate the allegations and that if state officials had acted improperly, then they would be held accountable.⁶⁶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could call any former and current employees to Bangkok for questioning, but it had to ask the Ministry of Defense for permission to investigate members of the army.⁶⁷ Viang Sakornsin, inspector general for the southern area, was appointed to head up a two-person committee to investigate all sides of the killings.⁶⁸ Viang and the second committee member, Montri Trangan, were given seven days to carry out their investigation.⁶⁹ In late March, the summary of the investigation released to the press stated that although innocent citizens had been killed in thang daeng, the number was much smaller than that offered by students and villagers. Rather than thousands, only seventy or eighty people had been killed. The report concluded that there should be no punishment of state actors because it would cause them to feel discouraged in their important work of fighting insurgency.⁷⁰ The ISOC could not be dissolved because it was needed to continue fighting insurgency. While the Anti-Communist Activities Act gave state officials license to arbitrarily arrest and detain suspected communists with a minimum of evidence, arbitrary murder was not legal. Shortly after a summary of the report (the report itself remained inside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was released, the NSCT criticized the hidden nature of the report and the apparent protection of wrongdoing by state actors.⁷¹

The assertion that state actors should not be punished for murdering citizens because punishment might make them feel discouraged recalls another contradictory acknowledgment of violence and refusal of accountability by a state actor. Police Major Anan Senakhan, a maverick and often inconsistent figure vis-à-vis progressive politics in the mid-1970s, publicly acknowledged in early February 1975 that the thang daeng killings had occurred. In 1972, he had been responsible for collecting and distributing the police news from the southern region, so he was aware of the sweeping arrests and killings. Anan disputed the number of people killed, arguing that it was not three thousand but approximately three hundred. He personally knew two people who had been killed. Yet despite this knowledge, Anan urged people not to think of soldiers as monsters lacking humanity. Instead, he urged people to see that they were “people who love the homeland too, we should give our sympathy to them too.”⁷² The difficulty with this is that if perpetrators are not held responsible, then they are the *only* ones who receive compassion. Without accountability for perpetrators, compassion for survivors of torture and for those who died in the thang daeng killings lacks meaning. Shortly before the release of the summary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report, a new government headed by Kukrit Pramoj, Seni’s brother, came into power. Kukrit decided not to give compensation to the villagers, likely in order to not displease the counterinsurgency and the broader military apparatus.⁷³ As 1975 wore on, overt intimidation and violence against progressive activists increased; while the NSCT inquired as to how the Kukrit government was going to address the thang daeng killings, it was unable to force Kukrit to take action.

Benedict Anderson argues that what makes the October 6, 1976, massacre, which occurred a year and a half after the thang daeng killings were exposed, different from earlier state violence in Thailand is that it was “the culmination of a two-year-long right-wing campaign of public intimidation, assault and assassination best symbolized by the orchestrated mob violence of October 6 itself.”⁷⁴ For example, rather than being hidden from public view, the assassinations of farmers, workers, and students often took place in broad daylight, as neighbors watched.⁷⁵ The exposure of the thang daeng killings, the calls for state accountability, and ultimately the foreclosure of the possibility of accountability were

part of a resonant and complementary process. Through the exposure of the thang daeng killings, citizens across Thailand learned about the precise extent of what could be done to them by security forces if they became real or perceived enemies of the state. They also learned that even after broad public exposure, including a large demonstration in the center of Bangkok and high-profile meetings among survivors, activists, the commander of the army, and the prime minister, it was possible that no one would be held accountable for the violence. They learned that the committee appointed by the state could acknowledge that there had been wrongdoing by security forces and then decide against punishing those security forces.

What is most troubling about the thang daeng killings is not that they occurred and were never brought to light, but rather that they occurred, were exposed, and were investigated and confirmed by the state—which then chose to do nothing. I noted earlier that at the beginning of exposure of the killings, Sutham Saengprathum stated, “[We have] laws that people who act wrongly are judged via a judicial process. But when the administrative class makes themselves those who decide (justice), the lives of the people have no meaning.”⁷⁶ When the administrative class acknowledges that they have committed crimes but then allows those crimes to go unpunished, the lives of the people who died become *filled* with meaning. Their lives, and their deaths, become a permanent reminder of the ability of the state to kill with impunity citizens seen as dissidents. They become a reminder of how state actors can get away with murder. The stories of Teacher Lim and Teacher Ploy—and the arbitrary way the security forces decided who would survive and who would die in the thang daeng—acquire an additional layer of meaning as part of the file about the ISOC and thang daeng in the National Archives. The file of news clippings documents the *lack* of state action, and the inclusion of the stories of these two teachers critiques this lack of action.

Yet in another, Benjaminian sense, these two stories are marked by “courage, humor, cunning, and fortitude. They have retroactive force and will constantly call into question every victory, past and present, of the rulers. As flowers turn toward the sun, by dint of a secret heliotropism the past strives to turn toward that sun which is rising in the sky of history.”⁷⁷ The archival file documents the fact that no one was held accountable for Teacher Lim’s death or for Teacher Ploy’s suffering. Yet the very presence of the two stories in *Thai Rat* newspaper means that the file

also documents the willingness of Teacher Ploy and Khruawan, Teacher Lim's widow, to speak out during a time of fear and certain violence. *This* remains a challenge to state impunity. The challenge, then, for concerned scholars is to detect these challenges to impunity. One of the additional pieces of information that came out during the exposure of the thang daeng killings in Phatthalung in February 1975 was that this was not an isolated incident.⁷⁸ Multiple reports cited similar mass arrests, disappearances, and killings in Surat Thani and Nakhon Sri Thammarat. In addition to being killed in thang daeng, villagers were reported to have been thrown out of helicopters.⁷⁹ Yet in the aftermath of official state impunity with respect to the thang daeng killings in Phatthalung, and with the filing of a slander and libel case against Phinij Jarusombat, these allegations went uninvestigated. They remain uninvestigated today. Even/especially in the absence of official documents, it is time to restart the investigations into these and many other reports of state violence from the 1950s, the 1960s, the 1970s and beyond.

NOTES

I would like to thank N. Ganesan and Sung Chull Kim of the Hiroshima Peace Institute for their clarion advice during the workshops in which this chapter was developed and the other participants for their astute comparative comments. In addition, Kevin Hewison, Doreen Lee, Samson Lim, and Gayatri Menon provided useful comments for revisions. I would like to thank Thanet Aphornsuvan for sharing his unpublished paper and Prajak Kongkirati and Chaiyan Rajcha-gool for introducing me to Jularat Damrongviteetham. Although I do not discuss it here because my focus is elsewhere, Jularat Damrongviteetham wrote a brilliant master's thesis on thang daeng and memory in present-day Phatthalung. See Jularat Damrongviteetham, "Kansomsang Prawatisat Lae Khwamsongcham-lon: Kansuksa Kitchakam Chan Khwamsongcham Karanee 'Thang Daeng' Nai Chumchon Lamsun Amphur Srinagarinda Changwat Phatthalung" [Historical reconstruction and haunted memories: A study of activities based on memories of the "Red Barrel" incident in Lamsin Community, Srinagarinda District, Phatthalung Province] (MA thesis, Chiang Mai University, 2552 [2009]).

1. Yotthong Thabtiumai, *Thang Daeng, Na Sai, Ko. Oo. Ro. Mo. No., Phr-arathabandit Totan Kommunist: Wannakam Kanmuang Samrap Phu Chai Panya Chut Prawat Chua Khong Chat Thai* [Thang Daeng, Na Sai, ISOC, Anti-Communist Activities Act: Political literature for wise people, terrible history of the Thai nation] (Bangkok, 2518 [1975]). 3. All translations in this chapter are my own. When citing Thai-language sources, I first specify the Buddhist Era publication date and then include the Common Era date in brackets immediately following.

When transliterating Thai into the Roman alphabet in the main text and in the bibliography, I do so following the system of the Royal Institute of Thailand, with three exceptions. I do not change the romanization of the names of individuals who have already transliterated their own names, nor do I alter established spellings of place names or romanization in quoted material.

2. In order to mark the inclusion of the articles in the file at the National Archives (NA), when citing newspaper articles contained in the file, I both note the standard bibliographic information and include the abbreviation "NA."

3. See National Student Center of Thailand, *Khabuankan Prachachon Tulakhom 2516* [Movement of the people, October 2516] (Bangkok: National Student Center of Thailand, 2517 [1974]), for detailed descriptions of the events of Oct. 1973, when thousands of students and citizens took to the streets to demand an end to dictatorship and a new constitution.

4. *Prachachaat*, Feb. 16, 2518 [1975].

5. *Chao Thai*, Mar. 28, 2518 [1975] (NA).

6. See *Bulletin of Concerned Asian Scholars* 9, no. 3 (1977), for a collection of articles about Oct. 6, 1976, when a massacre of unarmed students at Thammasat University in Bangkok by armed right-wing state and parastate actors ended this brief period of open politics.

7. Leigh Payne, *Unsettling Accounts: Neither Truth nor Reconciliation in Confessions of State Violence*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07), 2.

8. *Ibid.*, 281.

9. My point here is not to deny that knowing the number of people who were killed is important, but rather to note that in the absence of a reliable method of doing so, my focus in this chapter is necessarily elsewhere. Please see Robert Cribb, "How Many Deaths? Problems in the Statistics of Massacre in Indonesia (1965–1966) and East Timor (1975–1980)," in *Violence in Indonesia*, ed. Ingrid Wessel and Georgia Wimhöfer (Hamburg: Abera, 2001), 82–98.

10. Articles from the following newspapers are included in the folders: *Thai Rat*, *Sayam Rat*, *Prachathipatai*, *Prachachaat*, *Chaw Thai*, *Daily Time*, and *Daily Niu*. I draw on these articles as well as others from the same group of newspapers, additional newspapers, and other accounts in the remainder of this chapter.

11. *Thai Rat*, Feb. 7, 2518 [1975] (NA).

12. *Thai Rat*, Feb. 8, 2518 [1975] (NA).

13. The Fourth Army Region is headquartered in Nakhon Si Thammarat and covers the entire region of southern Thailand. In addition to Phatthalung, this area also includes Yala, Pattani, and Narathiwat provinces, which have been under martial law since Jan. 2004 and emergency rule since 2005, due to ongoing conflict among the central state, insurgents, and criminal elements inside and outside the state.

14. John Value Dennis, "The Role of the Thai Student Movement in Rural Conflict, 1973–1976" (MS thesis, Cornell University, 1982), 151.

15. Thanet Aphornsuvan, "Chak Thang Daeng Thung Tak Bai: Prasopkan

Nai Kan Kae Panha Khong Rat” [From Thang Daeng to Tak Bai: Experiences of solving the state’s problems] (paper presented at Thammasat University, Jan. 23, 2005), 2.

16. Aroon Larnlue, “Phatthalung Terrorists: Constant Gnawing Sharpens the Teeth,” *Nation*, June 20, 1971.

17. Thanet, “Chak Thang Daeng Thung Tak Bai,” 2.

18. Aroon, “Phatthalung Terrorists.”

19. Thanet, “Chak Thang Daeng Thung Tak Bai,” 4.

20. The Village Defense Volunteers, which remains an organized force, is a village-based defense volunteer unit. Its members are often poorly trained in the use of their issued weapons, poorly and disparately supervised, and unprofessional. During the thang daeng killings in Phatthalung, accounts indicate that they reported directly to the CSOC.

21. Yotthong, *Thang Daeng*, 62–69.

22. *Prachathipatai*, Feb. 16, 2518 [1975].

23. Dennis, “Role of the Thai Student Movement,” 142.

24. Yotthong, *Thang Daeng*, 76–77.

25. *Ibid.*, 72–78; *Sieng Puangchon*, Feb. 8, 2518 [1975].

26. *Prachathipatai*, Feb. 9, 2518 [1975] (NA).

27. *Ibid.*

28. *Ibid.*

29. *Sieng Puangchon*, Feb. 6, 2518 [1975].

30. *Sieng Puangchon*, Feb. 8, 2518 [1975].

31. *Ibid.*

32. *Sieng Puangchon*, Feb. 9, 2518 [1975].

33. *Sieng Puangchon*, Feb. 10, 2518 [1975].

34. *Sieng Puangchon*, Feb. 15, 2518 [1975].

35. *Ibid.*; *Prachachaat*, Feb. 15, 2518 [1975].

36. *Prachachaat*, Feb. 16, 2518 [1975].

37. *Sieng Puangchon*, Feb. 15, 2518 [1975].

38. *Prachachaat*, Feb. 15, 2518 [1975]. Among the right-wing groups active during the 1973–1976 period, Krathing Daeng’s membership was drawn largely from the secondary and tertiary vocational student population.

39. *Sieng Mai*, Feb. 16, 2518 [1975]. Some of the temporary camps used during the thang daeng period remain in use.

40. *Voice of the Nation*, Feb. 16, 1975.

41. *Prachathipatai*, Feb. 16, 2518 [1975].

42. *Voice of the Nation*, Feb. 17, 1975.

43. *Prachathipatai*, Feb. 9, 2518 [1975].

44. *Ibid.*

45. *Daily Time*, Feb. 9, 2518 [1975] (NA).

46. *Prachathipatai*, Feb. 16, 2518 [1975].

47. *Prachathipatai*, Feb. 17, 2518 [1975].

48. *Prachathipatai*, Feb. 21, 2518 [1975].

49. *Sieng Puangchon*, Feb. 17, 2518 [1975].

50. *Sieng Mai*, Feb. 17, 2518 [1975].

51. *Voice of the Nation*, Feb. 24, 1975.

52. *Prachachaat*, Feb. 15, 2518 [1975].

53. *Sieng Puangchon*, Feb. 24, 2518 [1975].

54. *Prachathipatai*, Feb. 17, 2518 [1975].

55. *Prachathipatai*, Feb. 20, 2518 [1975].

56. *Sieng Mai*, Feb. 22, 2518 [1975].

57. *Ibid.*

58. *Prachathipatai*, Feb. 20, 2518 [1975]. The “they” may have been a mistake of either the person who made the poster or the newspaper that reported it. If villagers created the poster themselves, would they not use the pronoun “we”?

59. *Sieng Puangchon*, Feb. 24, 2518 [1975].

60. *Daily Time*, Feb. 24, 2518 [1975] (NA).

61. Payne, *Unsettling Accounts*, 170.

62. *Prachathipatai*, Feb. 4, 2518 [1975].

63. *Prachachaat*, Feb. 4, 2518 [1975].

64. Payne, *Unsettling Accounts*, 285.

65. *Ibid.*

66. *Prachachaat*, Feb. 16, 2518 [1975].

67. *Sieng Mai*, Feb. 25, 2518 [1975].

68. *Voice of the Nation*, February 25, 2518 [1975].

69. *Thai Rat*, Feb. 25, 2518 [1975] (NA).

70. *Chao Thai*, Mar. 28, 2518 [1975] (NA).

71. *Thai Rat*, Mar. 27, 2518 [1975] (NA).

72. *Prachachaat*, Feb. 11, 2518 [1975].

73. Dennis, “Role of the Thai Student Movement,” 133.

74. Benedict Anderson, “Withdrawal Symptoms: Social and Cultural Aspects of the October 6 Coup,” *Bulletin of Concerned Asian Scholars* 9, no. 3 (1977): 13.

75. For an analysis of the series of assassinations of leaders of the Farmers’ Federation of Thailand in mid-1975, please see Tyrell Haberkorn, “An Unfinished Past: The 1974 Land Rent Control Act and Assassination in Northern Thailand,” *Critical Asian Studies* 41, no. 1 (2009): 1–43.

76. *Sieng Puangchon*, Feb. 15, 2518 [1975].

77. Walter Benjamin, “Theses on the Philosophy of History,” in *Illuminations: Essays and Reflections*, ed. Hannah Arendt, trans. Harry Zohn (New York: Schocken Books, 1968), 254–55.

78. This is why I have not capitalized *thang daeng* in this chapter.

79. *Sieng Puangchon*, Feb. 8, 2518 [1975]; *Sieng Mai*, Feb. 4, 2518 [1975]; *Prachathipatai*, Feb. 6, 2518 [1975]; *Prachathipatai*, Feb. 12, 2518 [1975]; *Daily Time*, Feb. 7, 2518 [1975] (NA).

평화 연구와 문화 연구

이 문 영 (IPUS)

1. 평화와 문화

평화와 문화의 관계에 대한 접근을 ‘문화는 평화적인가, 비평화적인가’ 라는 다소 천진한 질문으로부터 시작해보자. 가장 고상하고 세련된 심미적 활동의 정수인 예술작품이 과연 비평화적일 수 있을까라는 반응을 먼저 예상할 수 있다. ‘인류 최초의 반전(反戰)예술’로 불리는 아리스토파네스의 희극 <리시스트라타(Lysistrata, BC. 411)>로부터, ‘인류 최고의 반전예술’로 평가되는 피카소의 <게르니카(Guernica, 1937)>에 이르는 예술작품의 면면과 그 감동을 떠올리면 얼핏 납득이 가기도 한다. 재미있는 것은 전자의 경우,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반대해 2003년 3월 3일 오후 3시 전세계 59개국 1029개 극장에서 일제히 이 작품을 낭송한 <리시스트라타 프로젝트(Lysistrata Project: Say No! to War)>로, 후자의 경우 마찬가지로 2003년, 이라크 공습 개시 선언을 하던 당시 미 국무장관 콜린 파월이 회견장 뒷면에 걸린 이 그림을 UN 로고가 박힌 커튼으로 가려버린 사건으로 인해, ‘평화의 아이콘’으로서의 현대적 의미를 새롭게 인정받기도 했다.¹⁾

하지만 저명한 전쟁학자이자 전통적 평화학의 길을 예비했다고 평가되는 퀴시 라이트(Q. Wright)의 언급처럼 “인간에게 본디 평화는 전쟁보다 덜 재미있는 법”이다. 특히 드라마틱한 갈등과 위기, 감정의 충만한 고양을 예술적으로 재현하는 데 있어 전쟁보다 좋은 소재도 드물다. 물론 전쟁을 다룬다고 해서 비평화적인 것은 아니다. 문제는 전쟁 자체가 지닌 극적 특성

1) 『리시스트라타』는 펠레폰네소스 전쟁 시기 아테네와 스파르타 여자들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 힘을 합쳐 남자들의 동침을 거부하고, 남자들은 갖은 방법으로 이에 저항하지만, 결국 남자들이 항복해 전쟁을 끝낸다는 내용의 코미디다. 리시스트라타는 여자들의 ‘섹스 스트라이크’를 주도한 여주인공의 이름이다.

으로 인하여 그 예술적 재현의 역사가 수천 년을 헤아리는데 비해, 반전예술은 지극히 근대적인 현상이라는 점이다. 이런 의미에서라면 아리스토파네스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미술의 예를 들어본다면, 고대에서 18세기까지 전쟁을 다룬 무수한 작품이 전달한 주된 파토스는 영웅주의다. 물론 이미 17세기 중엽 “전쟁미화의 전통을 깨뜨린 최초의 화가”로 불리는 자크 칼로(J. Callot, 1592-1635)가 등장했고, 루벤스나 푸생 같은 유명화가들도 전쟁의 비극을 전하는 그림을 그리기는 했지만, 현대적 의미의 본격적인 반전화가로서 고야(F. Goya, 1746-1828)가 등장한 것은 19세기에 이르러서다. 고야의 경우도 나폴레옹의 스페인 침략전쟁의 공포와 야만을 다룬 82편의 동판화 연작 <전쟁의 참상(The Disaster of War)>(1810-20)이나, 프랑스 점령군의 스페인 농민 처형을 다룬 <1808년 5월 3일(The 3rd of May 1808)>(1814) 등의 대표작은 그의 생애는 물론, 죽은 후 30년이 넘도록 공개가 금지되었다.

전쟁에 대한 진지한 예술적 성찰이 오랜 시기 결여될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두 차원의 해석이 가능하다. ‘메세나(Maecenas)’, ‘패트론(patron)’이라는 용어로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듯이 왕족이나 부유한 귀족가문의 후원은 고대 로마로부터 근대 초기에 이르기까지 예술가의 안정적 작품 활동을 가능하게 한 거의 유일한 제도적 장치였다. 고리대금업으로 출발해 피렌체와 이태리 전체를 호령하는 부호가 된 메디치 가문이 없었다면,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보티첼리, 다시 말해 르네상스도 없었을 거라는 이야기는 유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후원인이 주체가 된 전쟁을 비판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에 즈음해 봉건적 질서로부터 근대적 국민국가 체제로의 점진적인 전환이 이루어지고, 그 와중에 국민국가의 경계를 다투는 무수한 영토전쟁, 침략전쟁이 일어나면서, 이러한 전쟁들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정당화가 애국주의, 민족주의의 진작과 고무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것 역시 전쟁과 폭력에 대한 근원적 성찰을 방해한 또 하나의 구조적 요인이다.

그럼에도 18세기 말부터 19세기에 즈음하여 전쟁반대의 목소리가 예술가들 사이에 공유되고, 반전예술이 하나의 뚜렷한 예술경향으로 자리매김한 데에는 한편으로는 계몽사상, 또는 진보적 평화이념의 확산이, 다른 한편으로는 전쟁무기의 혁신적 발전, 전쟁규모의 대량화와 전면화를 통해 전쟁이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다수의 시민이 연루되는 일상의 영역으로 확대되고, 그 일상성이 전쟁에 대한 영웅적 극화(劇化)의 기반 자체를 무너뜨린 것과 관련될 터이다. 제1차대전은 이러한 변화의 극점이자, “전쟁에 대한 인간의 인식과 반전예술의 터닝 포인트”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제1차대전은 반전의식과 반전예술이 대중적으로 확산된 시기임과 동시에, 국가에 의해 예술가가 전쟁에 조직적으로 동원된 최초의 전쟁이기도 하다. 2차대전시기

그 규모와 범위는 더 확대된다. 특히 파시즘의 출현은 ‘정의로운 전쟁(just war)’의 유서 깊은 전통과 결합하여 많은 진보적 지식인들로 하여금 기꺼이 스스로를 전사로 호명하게 했다. 같은 시기 나치 독일과 스탈린의 국가사회주의 체제에서 예술은 전시(戰時)와 일상을 가리지 않고 정치와 긴밀히 결합된다. 일찍이 벤야민이 파시즘의 본질로 ‘정치의 심미화’를 통렬히 비판한 바 있듯이, 히틀러의 뛰어난 웅변술, 거대한 매스 게임, 특히 라디오, 사진, 영화 등 당시 최신의 대중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선전전 등 파시즘 고유의 미학은 정치집회를 원초적인 감정과 정서를 파고들어 대중을 열광하게 만드는 ‘작품’으로 만들었다. 한편 스탈린 시기 문화의 유일무이한 방향방법으로 선언된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거리 곳곳에서 휘날리는 포스터와 선전물, 광장과 공원의 거대한 동상들, 관공서는 물론 집집마다 걸린 지도자의 초상, 지하철 벽면을 장식한 사회주의 영웅들의 조각과 부조, 벽화 등을 통해 소련 시민의 일상을 촘촘히 포획해나갔다. 그렇게 훈육된 사회주의적 주체, 즉 호모 소비에티쿠스는 각종 전쟁은 물론, 일상의 투쟁에도 자발적으로 동원되었다. 예술과 정치, 더 정확히는 예술과 국가폭력의 긴밀한 상호작용이라는 점에서 ‘예술의 정치화’로서의 사회주의 리얼리즘과 ‘정치의 예술화’로서의 파시즘 미학은 동전의 양면인 셈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문화가 그 자체로 평화적이지도, 비평화적이지도 않지만, 인류 역사의 상당 기간, 특히 근대 이후 국가/민족/인종/이념 등 배타적 경계짓기가 전면화 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물리적/제도적/구조적 폭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합법화하는 수단이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갈통의 말처럼 “정당화할 수 없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문화는 “폭력에 대한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근본적으로 평화와 문화 사이의 이러한 긴장을 더욱 위태롭게 만드는 것은 평화의 윤리적 성격과 문화(예술)의 미학적 본성 사이의 가능한 충돌이다. 선하며 아름답고, 아름답고 선할 수 있으나, 선하다고 아름다운 것은 아니며, 아름답다고 선한 것도 아니다. 이론적으로나 규범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름다움이다. 특히 예술의 경우, 예술이 예술인 한, 평화예술로서 그 가치를 보장해주는 것은 결국 작품의 예술성과 미학적 완성도이며, 평화와 문화의 관계를 고려할 때 이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예술가의 윤리적 태도나 이념적 원칙이 작품의 예술성을 직접적으로 보장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양자가 절대적으로 무연한 것은 물론 아니다. 저명한 문화철학자 바흐친(M. Bakhtin)이 말했듯이 행위주체로서의 작가는 이미 그 자체 예술형식의 구성적 계기로 존재하며, 따라서 주체의 의도와 지향을 예술적 구성으로부터 엄격히 분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평화예술과 같이 노골적으로 가치지향적인 미적 활동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럼에도 앞서도 밝힌 바와 같이 평화예술이 예술인 한, 평화의 규범성과 예술의

자율적 본성 사이의 긴장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근본적으로 이는 윤리와 미학, 삶의 원칙과 문화의 법칙, 더 나아가 삶과 문화 자체의 경계와 그들 간의 양립가능성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이야말로 20세기 중반 본격화된 문화연구의 중요한 화두 중 하나이기도 했다.

2. 평화연구와 문화연구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류사의 오랜 기간 문화는 물리적/제도적/구조적 폭력을 효과적으로 정당화하는 수단이 되어왔다. 예외적 개성을 제외한다면 대다수의 경우 한 개인의 의지나 의도는 이 폭력의 구조를 넘어서는 힘을 발휘하기 힘들다. 이는 근본적으로 이미 문화 자체가 그 구조와 불가분의 관계로 얽혀있기 때문이다. 갈통의 ‘문화적 폭력’ 개념은 바로 이 지점을 향한다. 그가 정의한 문화적 폭력, 즉 ‘직접적 또는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합법화 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 인간 존재의 상징적 차원’이란 이를 일컬음이다.²⁾ 특히 근대 이후 문화적 폭력을 포함하여 그것이 합법화한 다양한 폭력은, 서론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그 근원에 있어 국가/민족/인종/이념/젠더/계급 등의 경계구획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기실 지난 세기 인류의 평화를 깨뜨린 대참사의 거의 대부분이 ‘동일성/정체성(identification)의 사유’로 무장한 배타적 경계인식과 긴밀히 맞물려 있다.

영국 버밍엄학파나 후기구조주의, 가장 최근의 탈근대 문화이론 등, 현대 문화연구의 다양한 흐름과 갈래가 타겟으로 삼은 지점도 이러한 경계들의 확정, 그 과정에 깊이 연루된 문화와 그들 간의 관계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다. 이런 의미에서라면 평화연구와 문화연구 사이의 연관과 소통가능성을 본격적으로 타진하게 된 것은 갈통에 빛진 바 크지만, 이미 양자 사이에는, 새로운 학문적 시도로 등장한 시기나 학제적 방법론의 채택 같은 유사성을 넘어,³⁾ 좀 더 근원적인 차원의 접점이 공유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일례로 문화연구의 다양한 갈래 속에서 갈통의 문화적 폭력에 상응하는 문제의식을 발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본격적인 의미의 현대적 문화연구의 진원지라 할 수 있는 영국 <버밍엄현대문화연구소(Birmingham Centre for Contemporary Cultural Studies)>를 예로

들어보자. 윌리엄즈, 호가트(R. Hoggart), 홀(S. Hall) 등 문화연구의 대가들을 배출해낸 버밍엄 학파의 등장은 후기자본주의의 비약적 발전 속에 발생한 거대한 사회변동, 즉 소비대중사회의 형성, 언론이나 대중매체의 발전을 통한 공적 영역의 활성화, 대중문화의 확산과 위상 강화 등을 배경으로 한다. 버밍엄 문화연구의 핵심은 이러한 사회변화와 문화 사이의 상호연관성, 즉 “문화 생산의 모든 형식이 다른 문화적 실천이나, 사회적, 역사적 구조와 연관되어 연구되어야 함”을 예민하게 감지하고, 문화를 “한 사회의 예술, 신념, 제도와 의사소통적 실천의 전 영역”으로 확대함으로써, 문화와 고급문화(의 신물)를 정적으로 등치시켜왔던 기존 문화의 경계를 대중의 문화(적 행위)를 포함하는 동적인 과정이자, ‘삶의 한 방식(a way of life)’으로 개방했다는 점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문화이론 전체를 관통한 핵심은 그람시의 정치철학으로부터 기원해 버밍엄 학파에 의해 문화연구 영역으로 전이된 ‘헤게모니’ 개념이다. ‘과정이자 실천으로서의 문화’를 통해 비강제적이고 자발적인 동의의 형식으로 지배를 합법화하는 권력의 기능이 바로 버밍엄 학파에 의해 전유된 헤게모니의 의미이며, 따라서 문화란 “특정한 계급들 간에 실제로 체험된 바의 지배와 종속관계”로도 정의될 수 있다.⁴⁾ 물론 이때의 문화는 지배 헤게모니가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장이라기보다, 지배 헤게모니와 이에 대항하는 힘이 때로는 타협하고 때로는 투쟁하며 치열하게 경합하는 공간이고, 버밍엄 학파는 후자를 통한 대안적 헤게모니 창출에서 문화적 민주화의 가능성을 보았다. 그럼에도 후자는 아직 가능성으로, 잠재태로 존재하는 것이기에 결국 “문화연구의 역할은 바로 이러한(지배-필자) 헤게모니의 억압신화들을 표출시키는 데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⁵⁾ 억압신화의 폭로, 즉 예술, 신념, 제도 등 상징적 영역을 통한 지배의 비물질적 정당화에 대한 버밍엄 학파의 문제제기와 대항 헤게모니에 대한 기획은 문화적 폭력과 그 기원, 그 해소가능성에 대한 물음의 다른 방식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버밍엄 학파를 제외하고도 문화연구사에서 이러한 사례는 무수히 많다. 보다 직접적으로는 부르디외의 주요 개념들, 즉 문화적 취향이나 습관, 성향 등으로 내면화된 사회적 배치를 의미하는 ‘아비투스(Habitus)’, 계층이나 계급적 ‘구별짓기(distinction)’ 전략에 동원되어 그러한 구별을 정당화하고 지배를 고착시키는 문화권력의 기능으로서 ‘상징적 폭력(violence symbolique)’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문화연구의 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푸코의 지적 작업들, 즉 감옥, 병원 등 근대적 주체를 훈육해내는 규율권력의 제도화 과정, 이와 공모관계를 형성하는 지식체계, 나/타자, 정상/비정상, 규범/일탈 등의 차별적 대립을 정당화하는 담론

2) J. Galtung, "Cultural Violence," p. 291.

3) 평화학이 학문분과로 등장한 것은 2차대전 직후지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적극적 평화’ 개념을 중심으로 평화연구가 현재와 같은 외연을 확보하게 된 것은 갈통이 그 개념을 처음으로 제안한 1964년 이후다. 문화연구의 경우, 문화 개념의 포괄성으로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칸트, 맑스, 베버, 뒤르켐 등에 이르기까지 그 경계를 넓히자면 한이 없지만, 독립적 학문분과로서 문화연구의 출현은 통상적으로 1964년 영국 <버밍엄현대문화연구소>의 설립을 그 기점으로 삼는다. 한편 잘 알려져 있듯이 여성학, 지역학과 더불어 평화학과 문화연구는 가장 대표적인 학제적 연구다. 근대적 구획의 대표적 사례이자 자본주의적 분업 시스템의 반영인 분과구조가 정착되었던 당시 학계에서 학제적 연구방법론의 채택은 매우 혁신적인 것이었다.

4) 레이몬드 윌리엄즈, 『이념과 문화』, 이일환 옮김 (서울: 문학과지성사, 1982), p. 138.

5) 안토니오 그람시, 『대중문화론』, 박상진 해제 (서울: 책세상, 2003), p. 151.

의 구조화 등에 대한 그의 탐구는 권력과 문화의 상호연루와 그 폭력성을 계보학적 방법으로 치밀하게 재현해낸 사례다. 약간의 과장이 허락된다면 현대문화연구의 주요한 흐름 대부분이 사실상 ‘문화적 폭력’의 사회/역사적 기원, 그 다양한 작동 메카니즘의 해명과 대안적 해결가능성, 즉 ‘문화적 평화’의 구현을 위한 탐색에 바쳐졌다고도 말할 수 있다.

평화연구와 문화연구 사이의 이러한 광범위한 접점을 허락한 것은 본질적으로 양자 모두, 앞서 거론한 바 있는 다양한 근대적 구획과 배타적 경계인식을 궁극적인 성찰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일 것이다. 더 나아가 국가/민족/인종/젠더/계급 등의 구획만큼이나 문화연구에 있어 중요한 것은, 문화적 근대의 시작이 삶과 문화의 분리라는 가장 근원적인 경계 확정으로부터 출발했다는 사실이다. 삶의 총체성으로부터 문화의 분리, 더 나아가 문화 내부, 즉 진/선/미(과학/윤리/예술)의 근대적 분화 과정에서 발생한 세 영역간의 다양한 갈등과 모순에 대한 성찰은, 버밍엄 학파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문화의, 삶으로의 경계확장), 현대문화연구의 출발에서부터 제기되어 현재까지 유효한 화두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평화연구와 문화연구의 관계에 대한 이 장의 논의는 앞장에서 제기된 문제, 즉 윤리와 미학, 평화를 지향하는 ‘삶’의 원칙과 자율성을 요구하는 ‘문화’의 법칙 사이의 공존가능성에 대한 문제와 유기적으로 맞물린다.

사실 가장 최근의 탈근대 문화이론의 형성과정, 특히 구조주의에서 포스트구조주의로의 탈근대적 전이 자체가 삶과 문화, 주체와 구조의 관계성에 대한 물음으로 이루어진다. 잘 알려져 있듯이 삶과 구별되는 문화의 자율적 본성을 해명하는데 바쳐진 구조주의는 그 독자성을 기호적 구성(구조)에서 찾았다. 반복적이고 불변적인 규칙들의 체계로서의 구조는 일회적이고 변화무쌍하며 무정형인 삶으로부터 문화를 변별해주는 가장 주요한 특성으로 간주되었다. 반면 구조주의에서 포스트구조주의로의 이행은 이러한 이항대립, 다시 말해 기호/대상, 표상/실재, 문화/삶 사이의 적대적 대치, 구조와 구조 밖, 체계와 체계 외부의 엄격한 구별을 통해서만 의미를 산출하는 구조주의의 해석적 모델이 해체, 재구성되는 과정을 뜻한다. 이를 통해 새로이 정의되는 구조는 더 이상 반복적이고 불변적인 규칙들의 안정되고 균질적인 체계가 아니라, 우연적이고 가변적인 요소와의 접촉과 충돌을 자신의 본질로 이미 포괄하는 비균질적이고 자기모순적인 공간이 된다. 다시 말해 비(非)구조, 또는 반(反)구조와의 연루로부터 순결한 구조란 존재하지 않으며, 체계적 구성을 훼손하는 공백이나, 합리적 구획을 교란하는 잉여는 그 자체 구조의 필수적인 구성요소가 된다.

이와 같은 ‘탈구조’의 문제의식은 앞서 거론한 바 있는 탈근대적 사유의 핵심, 즉 근대적으로 구획된 경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탈경계의 상상력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이는 “뒷걸음

치고 훌뜨리고 그 존재를 지워버림으로써 그 텅 빈 자리를 나타나게” 하는 경계(구조) “바깥의 사유”이자,⁶⁾ 구조의 공백으로, 그 잉여로 기각되고 배제되었던 경계 바깥의 타자에 대한 사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는 근대적 구조화의 과정에서 강제로 삭제된 타자들의 목소리를 복원하려는 시도로 이어진다. 버밍엄 학파의 후기 연구가 페미니즘, 퀴어 이론, 소수자 문화연구로 심화, 확장되고, 탈구조주의적 문화이론이 서구중심성을 근거로부터 해체하는 탈식민주의적 해방의 서사와 긴밀히 결합된 것은 따라서 우연이 아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확정된 경계를 부정하는 문화이론이 다른 삶에 대한 윤리적 요구와 결합하는 순간을 비유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는 랑시에르(J. Ranciere), 바디우(A. Badiou), 아감벤(G. Agamben) 등, 가장 최근의 비판적 탈근대 문화이론에서 보다 직접적으로 가시화된다. 랑시에르의 논의를 통해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감성의 분할: 미학과 정치』, 『문학의 정치』와 같은 대표작의 제목에서 명시적으로 드러나듯이 랑시에르가 천착한 화두 자체가 미학과 윤리 등 문화 내부의 분화된 영역들 사이의 관계의 문제다. 그는 이를 특히 ‘미학’과 ‘정치’를 키워드로 고찰한다. 그에게 ‘문학의 정치’란 작가가 정치적, 사회적 투쟁을 몸소 실천하거나, 작품을 통해 그런 입장을 표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학이 그 자체로 정치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함축한다.”⁷⁾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라는 그의 또 다른 저서의 제목이 함축하는 바, 경계의 고착된 구조화에 대한 랑시에르의 비판적 성찰이다. 그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것(le politique)’은 구조를 구성하는 부분들에 몫과 기능과 자리를 나누고 배분하는 행위이다. 랑시에르는 이러한 나눔의 방식으로서의 ‘정치적인 것’을 ‘치안(la police)’과 ‘정치(la politique)’로 구별하고, 정치적인 것을 치안의 논리와 정치의 논리가 격렬하게 투쟁하는 장으로 상정한다. 치안이 하나의 합의된 정체성에 근거해 구조 속에 현전(現前)하는 것, 그 부분으로 썸하여진 것들에 자리를 배분하는 통치 행위라면, 정치는 구조의 공백이나 잉여로 존재하는 자들, 따라서 치안적 ‘썸-바깥’에 존재하는 “몫 없는 자들의 어떤 몫을 보충”하는 평등의 행위이자, 치안의 합의를 교란하고, 구조의 틈을 현시하는 행위이다. 이런 의미에서 치안의 본질이 “공백과 보충의 부재”라면, 정치의 본질은 구조의 “공백과 잉여를 해석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⁸⁾

이렇게 치안적 질서에서는 보이지 않는 자를 보이게 하고, 들리지 않는 자를 들리게 하고,

6) 미셸 푸코, 『바깥의 사유』, 심재상 옮김, 김현 편, 『미셸 푸코의 문학비평』 (서울: 문학과지성사, 1989), p. 189.

7) 자크 랑시에르, 『문학의 정치: 문학이 정치와 일치할 수 있을까?』, 유재홍 옮김 (서울: 인간사랑, 2007), p. 9.

8) 자크 랑시에르,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 양창렬 옮김 (서울: 길, 2008), pp. 233-261.

말없는 자를 말하게 한다는 점에서 정치는 ‘감각적인 것’의 ‘새로운’ 분배를 의미하며, 바로 이것이 ‘정치의 미학’을 구성한다. 한편 미학적 실천은 정치적인 영역에서와 같이 비유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그 본성 상 보다 직접적으로 감각적인 것의 분배에 개입한다. 미학적 실천의 영역에서도 치안과 정치를 구별할 수 있다. 만일 하나의 미학적 실천이 치안 행위와 같이 기존의 배치를 반복, 공고화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미학적 배치와 혁신적 재구성으로 결과 지워진다면 바로 이것이 ‘미학의 정치’다. 랑시에르의 논의에서 미학과 정치는 이렇게 만나며 “미학과 정치 사이의 관계는 보다 정확히는 이 ‘정치의 미학’과 ‘미학의 정치’ 사이의 관계”⁹⁾에 다름 아니다. 구체적으로 미학의 정치란, 문학의 예를 들자면, “사물들에 다시 이름을 붙이고, 단어들과 사물들 사이의 틈을 만들고, 단어들과 정체성 사이의 틈을 만듦으로써 결국 탈정체화(de-identification), 즉 주체화의 형태, 해방 가능성, 어떤 조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내는데 개입한다는 의미”다. 결국 기존의 관습적인 미학적 체제를 파열시켜 전적으로 새로운 감각적 배치를 이루어내는 이러한 미학적 탈정체화는, 기성의 관점에서 부재로, 잉여로, 초과로 규정되던 자들을 구조 속에 기입함으로써 치안의 합의된 정체성을 교란하고 새로운 배치를 만들어내는 정치적 탈정체화와 긴밀하게 얽혀있는 것이다. 앞서 문학의 정치가 작가의 현실참여나 참여예술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문학이 그 자체로 정치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함축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다.

결국 예술의 가치는 정치적 탈정체화, 또는 미학적 탈정체화만이 아닌, 서로를 재현하며 얽혀있는 양자의 유기적 관계성 속에서만 확보될 수 있는 것이다. 어쩌면 진부할 수도 있는 이러한 결론이 새로움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그것이 선형적이거나 규범적인 전제로서가 아니라, 문화의 근대적 분화 과정과 그것이 초래한 (생산적인) 갈등과 불화의 전 역사를 통과하면서, 그 교훈과 대면하여 얻어진 ‘맥락적’ 인식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구조주의의 탈구조주의적 자기극복 과정이 선명하게 보여주듯이, 근대적으로 분화된 문화적 구조의 본성에 대한 물음, 그 구조의 자율성에 대한 집요한 탐색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 탐색 과정에서 얻어진 성과 자체에 기반해, 구조의 배타적 완결의 불가능성에 대한 인식으로 전복되는 것, 이러한 전복이야말로 삶과 문화 사이의 근대적 분리를 상호침투와 상호연루 속에 재배치하는, 가장 근원적인 차원의 탈정체화 행위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구조를 고착된 경계로부터 해방시키고, 미학과 윤리를, 문화와 삶을 다시 조우시키는 탈정체화의 가장 중요한 계기인 구조의 공백, 구조의 잉여란 무엇인가. 탈근대 문화이론이

9) 자크 랑시에르, 『미학 안의 불편함』, p. 55.

가장 첨예하게 겨냥하는 지점, 즉 구조 속에 명확히 존재함에도, 부재로, 잉여로, 초과로 규정되어 구조 바깥의 존재인 양 내쳐진 자들, 그래서 구조의 어떤 부분으로도 셈하여지지 않는 몫 없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떠올리는 순간, 탈구조의 문화이론과 평화연구의 접점은 확연해진다. 특히 지구화 시대의 현실을 감안할 때 더욱 그러하다.

사회주의의 몰락과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로 헤겔식 역사 발전의 종결이 선언되고, 자본주의의 전지구적 확장으로 ‘자본주의의 외부는 없다’는 선고가 내려진 현재, 후쿠야마식의 ‘역사의 종말’과 ‘외부 없는 자본주의’란 시공간적 차원 모두에서의 전일적(全一的) 구조의 완결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구화 시대가 표면적인 차원에서는 정보혁명과 소통기술의 비약적 발전, 자본/노동/정보의 탈경계적 이동과 교차로 인하여 배타적 구조에 대한 표상이 그 어느 때보다 약화된 듯 보일 수도 있지만, 심층의 차원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거대하고 완결된 초구조(ultra-structure)를 전제로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초구조의 주요 작동기제라 할 수 있는 글로벌 자본의 동질화 과정을 통해 구조를 구성하는 부분들 간의 상호연관성이 고도로 강화되는 한편, 각자의 부분들에게는 다문화주의적 공존이라는 이름으로 차이가 배분된다. 이러한 나눔과 배분의 기술, 즉 통치와 경영이 정치를 대신한다는 주장들, 역사의 종말이 정치의 종식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이 그럴듯하게 횡행하는 지금이야말로, 그러한 통치행위, 즉 랑시에르의 용어를 빌면 치안의 논리를 파열시킬 정치의 부활이 절실한 때다. 이러한 정치의 부활을 필연화하는 것이 바로 전자본주의적 구조의 공백으로, 잉여로, 초과로, 그 전일한 지배에 틈과 균열을 내며 그 기반을 잠식하는 존재들이다. 말할 수 없는 자인 ‘섭알탄’, ‘지구화가 만들어낸 인간 쓰레기’, 배제되거나 포함되고, 포함되거나 배제되는 잉여적 실존으로서 ‘호모 사케르’ 등 다양한 이름으로 탈근대 담론 속에 등장하는 이들은 빈민이나 장애인, 소수종족, 난민, 불법체류자, 무국적자 등의 다른 이름이자, 언제든 같은 운명에 처해질 수 있는 우리 자신이기도 하며, 평화문화의 전지구적 실현을 위한 다양한 실천 프로그램이 향하는(또는 향해야 할) 대상도 다름 아닌 바로 그들이다.

3. 평화문화의 실천: <유네스코 평화문화 프로그램>

마지막으로 평화와 문화의 일반적 관계, 평화연구와 문화연구의 이론적 관련성을 <유네스코 평화문화 프로그램>의 실천적 차원과 관련지워 간략히 검토해보자.

<평화문화>의 개념은 1989년 야무수크로에서 열린 <인간 마음의 평화에 대한 국제회의

(International Congress on Peace in the Minds of Men)에서 평화학자 보울딩(E. Boulding)이 처음으로 제안했다. 그녀는 평화문화를 “사회가 차이와 갈등에 평화롭고 창조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주는 관계적, 제도적 특성들의 총체”로 정의하고, 폭력과 전쟁의 문화에서 평화문화로의 이행의 필요성을 호소하였다. 이 제안이 광범위한 호응을 얻은 이후, 1992년-1993년 사이 평화문화의 개념화 과정을 거쳐, 1994년 2월 유네스코에 <평화문화 분과(Unit for the Culture of Peace)>가 설립된다. 1995년 유네스코 제29차 총회에서 평화문화 결의안이 채택되는 한편, 평화문화 건설을 위한 초학제적 성장기 프로젝트(1996-2001)가 계획된다. 1997년 유엔 총회에서 평화문화 결의안이 채택되면서 2000년이 <국제평화문화의 해(The International Year for the Culture of Peace)>로 선포되는 한편, 이에 대한 글로벌 캠페인을 시작한 1999년 9월 14일이 <국제평화의 날(The International Day of Peace)>로, 2001-2010년이 <평화문화와 세계 어린이에 대한 비폭력을 위한 십년(The Decade for a Culture of Peace and Nonviolence for the Children of the World)>으로 선포된다. 이후 유네스코 평화문화 프로그램은 전지구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국가/국가간/비국가 단위 평화운동의 주요한 갈래이자 중심으로 자리잡았다.

주목해야 할 점은 애초 평화문화 프로그램은 당시 심각한 종족분쟁과 내전을 겪던 엘살바도르, 모잠비크, 부룬디를 지원하기 위한 개별국가 프로그램으로 출발했다는 사실이다. “종족주의, 이민족혐오주의, 소수그룹에 대한 인종차별주의... 이민족, 난민, 망명요청자, 외국인 노동자에게 향해지는 폭력”¹⁰⁾을 지양하고자 하는 평화문화의 구상 자체가 환기하듯이, 이 프로그램은 전지구적 질서의 틈과 균열로 현전하는 명백한 폭력의 현실에 대한 인식에 확고히 기반한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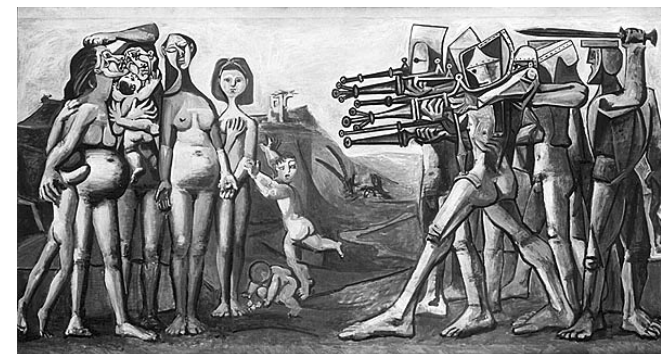
하지만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평화문화는 그 개념의 공식화 과정에서부터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야 했고, 그 결과 애초 제기된 구상의 많은 부분이 수정, 변경되었다. 아홉 달이 소모된 평화문화 개념 규정의 과정은, 현재 인류가 전쟁문화 속에 살고 있다는 견해에 반대하는 EU 소속국가들과, 전쟁문화의 존재와 평화문화로의 전환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보울딩, 아담스(D. Adams) 등의 비판적 평화학자들 사이의 힘겨루기 과정이었다. 아담스에 따르면 이러한 갈등의 핵심은 “강대국들이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전쟁문화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길 거부한” 데 있다.¹¹⁾ 이는 비판적 평화학의 전통이 반세기 가까이 이어진 현재에조차 국가를

평화의 기초로, 더 나아가 강대국을 세계 평화의 보증자로 세우려는 현실 정치의 논리가 얼마나 강건하게 관철되는지를 잘 보여준다. 그 결과 이런 논란이 진행되던 같은 시기, 예를 들어 NATO가 개입한 보스니아 내전의 그 끔찍한 인종청소가 자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평화문화 개념에 대한 유네스코 최종안에서 전쟁문화에 대한 거의 모든 언급이 삭제, 또는 수정되었다. 평화문화의 실천 프로그램조차 피해갈 수 없는 이런 왜곡은, 국민국가 단위의 확장에 불과한 유엔이나 유네스코 같은 국제기구의 한계와 더불어, 그런 식의 폭력적 추상화를 통해서만 글로벌한 차원으로 적용이 허락되는 평화문화 프로그램이란 것이 진정한 평화문화 실현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자아내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뿌리깊이 제도화되고 내면화된 다양한 폭력을 극복하기 위한 평화문화의 실현은 지난한 과제일 수밖에 없지만, 그 실현을 향한 노력이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그림 1> 게르니카(Guernica), (1937)



<그림 2> 한국에서의 학살(Massacre in Korea), (1951)



10) J. Symonides & K. Singh, "Constructing a Culture of Peace," p. 9.
 11) D. Adams, "Toward a Global Movement for a Culture of Peace," p. 260.

〈그림 3〉 스탈린의 초상 (Portrait of Stalin), (1953)



평화현장과의 만남

- 동북아 평화를 위한 유네스코의 기여: 역사대화를 중심으로
임현묵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평화발전연구소)
- 인권 현장에서 본 평화
오창익 (인권연대)
- 칠원 비전과 남북한 평화 통일 운동
정지석 (평화의 씨앗, 국경선평화학교)

동북아 평화를 위한 유네스코의 기여: 역사대화를 중심으로

임 현 목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평화발전연구소)

서론: 유네스코는 왜 역사(교과서)에 주목하는가

유네스코는 창립 당시부터 독선적 민족주의와 배타적 편견에 사로잡힌 역사인식과 역사교육의 위험을 경고하고 역사교과서에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제거함으로써 역사교육이 국가간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한 평화로운 미래 건설의 초석이 되게 하자고 호소해왔다. 오늘날 동북아 상황에서 이러한 유네스코의 요청은 더없이 절실하게 들린다. 이 글의 목적은 역사갈등에 초점을 맞춰 동북아 평화를 위해 유네스코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탐색하는 데에 있다.

역사와 역사교육은 근대 이전에도 정치권력의 정통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지만, 근대 국민국가에서는 더욱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았다. 신분, 지역, 종교 등에 따른 정체성을 부차적인 것으로 만들면서 이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국민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에서 역사교육이 핵심적 기능을 하게 된 것이다. 그것은 흔히 자국의 과거는 미화하고 타국의 과거는 부정적으로 기술하는 것과 같이 국민의 집단기억을 특정 방향으로 구성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이와 같은 민족주의적 역사인식이나 역사교육은 협력보다는 전쟁을 통해 국가간의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했던 시대에 국민들 간의 증오와 적대감을 증폭시키고, 이는 다시 배타적 역사인식을 강화하는 악순환을 가져왔다. 물론 일부 선각자들은 이러한 역사교육이 각국의 국민들에게 미칠 파괴적 영향을 경고하면서 평화와 상호이해를 위한 역사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하곤 하였지만, 이러한 비전은 2차대전이 끝나서야 비로소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전후 유네스코의 창설과 활동도 한몫을 했다.

유네스코는 국가간 정치군사 내지 경제적 협력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른 집단, 민족, 국가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키울 때 비로소 진정한 세계 평화가 가능하다는 깨달음 아래 국제적으로 학문과 문화의 교류와 협력을 진작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는다. 그리고 이렇게 민족과 국가간 불신과 편견을 씻어내고 상호이해와 신뢰를 키워나가는 데에서 교과서, 특히 역사교과서가 중대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역사교과서의 양국간 또는 다국간 검토 및 수정과 더불어 공동편찬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지원해왔다.

이 글에서는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협력을 포함해서 국가간 역사인식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역사대화’¹⁾ 활동에 유네스코가 공헌한 점을 살펴보고, 오늘날 역사대화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꼽히는 유럽의 경험이 주는 교훈을 성찰한 다음, 이러한 고찰을 토대로 민족주의가 고조되는 가운데 역사 갈등이 영토문제와 얽히면서 어려운 상황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동북아시아에서 역사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유네스코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모색해보려고 한다.

1. 전간기 유럽의 역사교과서 협의활동

전간기에 유럽의 지식인들은 인간 정신의 고양과 자유로운 표출에 이바지하기는커녕 독선적 민족주의의 광풍에 휘말리고 심지어 그것을 부채질한 자신들의 과오를 반성하며 1921년 국제연맹 산하에 국제지적협력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1926년 역사교육의 문제에 주목하여 교과서에서 다른 나라에 대해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내용들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것을 요구하는 카사레스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 결의안은 1937년에 국제연맹의 ‘역사교육에 관한 선언’으로 이어지지만 그 실효성은 미미했다. 국제연맹이나 국제지적협력위원회의 역사교과서 관련 활동에 대해서 주요 국가들이 내정간섭이라는 이유를 들어 반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입장과 달리 일부 역사학자와 역사교사들은 국제협력을 통해 역사교과서의 내용을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또 가능하다고 믿었다. 일례로 1935년 독일과 프랑스 역사교사들의 파리 협의는 쌍방 역사교과서의 근대 양국관계사 기술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권고안을 작성하는 데 성공했고, 이는 훗날 독일-프랑스의 역사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1) 이 글에서 쓰는 역사대화란 말은 역사인식상의 충돌로 인한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역사 연구자, 교육자, 교과서 필자 및 출판사,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객관적이며 공정한 이해에 도달하는 것을 지향하는 활동을 뜻한다. 이는 곤도 다카히로, 박경희 옮김, 《역사교과서의 대화》, 역사비평사, 2006, 27쪽의 ‘국제 역사교과서 대화’ 정의를 약간 변형한 것이다.

2. 유네스코의 역사교과서 개선 활동

유네스코의 창설자들은 이 새로운 국제기구가 국제연맹의 활동을 계승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리하여 1946년 유네스코 제1차 총회는 ‘국제이해 발전 촉진을 위한 교과서 및 교수자료 개선 사업’을 공식적으로 채택했고, 1949년에는 《교과서 및 부교재 개선 안내서》를 발간하였다. 유네스코는 또 교과서 개선에 관한 회원국간의 쌍무협정을 장려하였고, 해당국의 유네스코 국가위원회는 교과서 집필자, 역사교사, 교육당국자 등을 한데 모으는 데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다.²⁾ 잘 알려진 것처럼 독일과 폴란드의 역사대화는 1970년 파리에서 열린 제16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서독과 폴란드의 유네스코국가위원회 대표들이 양국 역사교과서를 상호 검토하는 공동위원회 구성에 합의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당시 서독 외교부는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과 관계망을 구축하고 있는 유네스코에 관심을 갖고 있었고(동서독은 1973년에야 유엔에 동시가입했다), 폴란드의 서부 국경을 인정하고 양국간 경제, 과학기술, 문화 분야의 협력 확대를 합의한 바르샤바 조약(1970년) 이후 실질적인 교류가 없는 상황에서 역사교과서 대화를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로 보아 유네스코서독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는 데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서독 외교부는 양국 교과서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협의 내용에는 간섭하지 않았다. 연구자들의 평가에 따르면, 유네스코는 독-폴 교과서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훌륭한 외피 역할을 했다.

이처럼 유네스코의 후원 하에 많은 나라들이 양자간 대화에 나서 많은 성과를 달성했다. 그런데 이러한 양자간 협의는 소중한 성과임에는 틀림없으나 그 폭은 양국 위주의 시야로 한정될 수밖에 없어, 보편적 가치에 입각하여 전지구적 문제를 비판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역사교육을 신장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위해서서는 다자간 협의라는 새로운 방식이 필요했다. 다시 말해서 양자간 협의가 특정 나라의 상(像)이나 정보에 집중하는 것이라면, 다자간 협의는 한걸음 더 나아가 전지구적 문제들을 교과서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포함한다고 하겠다. 이에 유네스코는 1974년 ‘국제이해교육 권고안’ 채택 이후 유럽,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에서 새로운 다자간 교과서 협의에 착수, 1988년 유네스코서독위원회와 공동으로 인류의 주요 문제 학습 및 교과서 기술 개선 기준 권고를 위한 국제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1992년에는 독일 게오르그 에커트 연구소와 공동으로 국제교과서연구네트워크를 결성하기에 이른다.

2) 유네스코 국가위원회(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란 유네스코 헌장 제7조에 의거하여 유네스코 회원국 정부가 자국의 유네스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및 교육, 과학, 문화계 인사로 구성하는 기구를 말한다. 1950년 유네스코에 가입한 한국은 한국전쟁 직후인 1954년에 유네스코한국위원회를 설립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유네스코는 교과서 개정 지침을 제정하려고 노력했으며, 그 최근 성과인 《교과서 연구 및 개정에 관한 유네스코 안내서 UNESCO Guidebook on Textbook Research and Textbook Revision》(1999)는 교과서 분석과 개정에 필요한 구체적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2000년대 들어 유네스코의 역사교과서 관련 활동은 소강상태에 들어간다. 이는 일본인 마츠우라 고이치로 사무총장 취임과도 무관치 않아 보이며, 아울러 마츠우라 사무총장 부임 이후 대대적으로 전개된 사무국 조직개편의 와중에서 역사교과서 개선사업을 추진해온 국제이해교육 부서가 양질교육국(Division for the Promotion of Quality Education)에 흡수 통합되어 약화된 사정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유네스코의 선도적 활동에 대한 회원국의 지속적인 요구를 외면할 수만은 없었던지, 지난 2006년 양질교육국은 〈Fostering Peaceful Co-Existence through Analysis and Revision of History Curricula and Textbooks in Southeast Europe〉이라는 제목으로 Preliminary Stocktaking Report를 작성했다. 이 잠정보고서 준비에는 알바니아, 보스니아,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등 동남유럽 10개국 이 참가했으며, 그것은 이 지역 유네스코 회원국의 역사교육 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활동의 첫걸음으로서 해당 나라들의 필요와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3. 유럽 역사대화의 교훈

역사대화의 전범으로 여겨지는 유럽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몇 가지 중요한 교훈과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독일의 역사학자 게오르그 에커트처럼 역사 대화의 중요성과 실현가능성을 확신하면서 현실의 높은 벽을 넘고자 했던 지식인들의 비전과 선구적 노력, 그리고 여기에 동참한 많은 역사학자와 역사교사들의 활동이 있어서 정치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교과서 개정을 통한 국제이해와 평화 증진이라는 이상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둘째, 해당국간의 정치적 관계와 전반적 분위기가 매우 중요하다. 연구자나 교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양국의 정치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그 성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독일-프랑스의 경우 1947-8년에 프랑스가 대독일 정책을 전환하여 양국간 문화협력의 장을 확장함으로써 전간기 이후 중단된 교과서 협의가 재개될 수 있었고, 독일-폴란드의 경우도 브란트 정부의 신동방정책에 따른 동구권과의 관계개선 노력이 역사교과서 공동위원회 탄생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정치지도자들의 비전과 철학이 중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겠지만, 국민이 그러한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여론을 선도하고 확산하는 지식인, 시민단체, 노동조합, 종교인, 언론인의 역할 또한 그에 못지않았다. 셋째, 정부 정책이 중요하다고 해서 역사대화에 정부가 간섭해야 된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오히려 교과서 협의에 참여한 연구자들이 자율성을 보장 받았을 때 성공할 확률이 높았다. 독일-폴란드 공동위원회에 참여한 서독측 위원 선정 기준은 폴란드사와 독일사에 정통하며 양쪽 학계에서 인정받은 학자로서 폴란드와 화해할 준비가 되어 있고 민족주의에 대해 비판적이며, 특정 정당이나 단체를 대변하지 않고 개인적 양심에 따라 활동할 인사였다. 성공한 역사대화의 사례에서는 모두 정부가 대화를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관철되었다. 그리고 역사교과서 공동위원회가 정치적 기준에 따르기보다 학문적 양심을 바탕으로 자유로운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데에는 유네스코라는 틀이 적잖은 도움이 되었다. 넷째, 편협한 민족주의에서 벗어나 인권, 민주주의, 관용과 같은 원칙을 고양하고자 하는 어떤 공동의 가치지향이 있을 때 역사교과서 협의는 좀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고, 유네스코나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같은 다자간기구의 이념이 그러한 증거를 제공할 수 있었다.

4. 동북아 역사대화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럽에서는 역사대화가 1920년대부터 시작해 80년 이상 지속되어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동북아에서도 주로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1970년대 말부터 개별 연구자 중심의 역사대화 활동이 진행되어, 부분적이기는 해도 이 지역에는 30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지속된 협력의 소중한 경험이 살아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정부 차원의 한-일 역사연구공동위원회와 중-일 공동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어 동북아 역사대화의 수준이 한 차원 높아지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걸게 한다. 물론 탈냉전 상황 속에서 최근 동북아 각국 내부의 민족주의가 고조되고 역사 갈등이 영토문제와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등 어려운 상황이 엄존하고 있어 쉽사리 낙관할 수만은 없으나,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역사대화를 통한 상호이해와 공동의 미래 건설을 위한 노력을 늦출 수 없는 것이다.

최근 한국과 일본 연구자들의 노력으로 《마주보는 한일사》, 《한일 교류의 역사》와 같은 공동 역사교재들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한중일 3국 연구자들에 의한 《미래를 여는 역사》는 동북아에서도 양자간 대화만이 아니라 다자간 대화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동북아 역사대화를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대화 상대와 어깨를 겨룰 수 있을 만큼 학문 수준과 연구역량을 높이고, 역사연구공동위원회를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동북아 공동의 미래를 위한 정치지도자와 시민사회조직들의 비전과 실천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그러면 유네스코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여기에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돌이켜보면 한국과 일본 양국 유네스코위원회는 지난 1965년 역사교육에 관한 공동협의를 하라는 유네스코의 권고를 받아들여 같은 해 말 서울에서 제1차 협의회를 개최기로 합의한 적이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때마침 일본에서 터진 이에나가 사부로(家永三郎) 역사교과서 소송으로 인해 대표단 구성이 어려워진 일본측이 협의회 연기를 요청하였고, 결국엔 협의회가 무산되고 말았다. 역사학자인 이에나가는 자신이 쓴 고등학교용 역사교과서 《新日本史》에 대해 문부성이 검정을 하면서 일본의 대외침략 서술 부분들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라고 요구하자 65년 교과서 검정제도가 위헌이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소송을 일으켰던 것이다(소송은 97년까지 무려 32년 동안 진행되었고 이에나가의 패소로 최종 판결이 나왔다). 이런 일본 내부의 사정 때문에 유네스코 차원의 한일간 역사대화는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1997년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30여 년 전에 무산된 양국 유네스코위원회간 역사대화 시도를 되살린다는 뜻과 함께 당시 고조된 한일간 역사교과서 갈등을 미래지향적인 정신으로 풀어보고자 유네스코일본위원회에 '21세기 역사교육과 역사교과서'라는 주제로 국제포럼을 공동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일본측은 검정제도 하에서 정부가 교과서 문제에 개입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는 수 없이 국제포럼은 몇몇 개별적으로 초청한 일본 학자들과 함께 진행했으나 결실이 없지는 않았다. 가장 중요하게는 한-일 양국이 역사대화를 진행해 나감에 있어 유네스코가 제시한 역사교육의 방향, 곧 상호이해와 평화에 이바지하는 역사교육을 지향해야 함을 재확인하고, 어렵고 오래 걸리더라도 대화를 계속해나갈 것을 다짐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한편 고구려사를 둘러싸고 중국과 역사 갈등이 고조되자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여러 차례 유네스코중국위원회에 유네스코 틀 안에서 한-중간 역사대화를 공동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역사 문제는 연구자들의 연구와 교류를 통해 학문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며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답변을 듣고 있다.

2007년 10월 초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동북아역사재단과 함께 서울에서 동아시아 역사화해 국제포럼을 열었다. 동북아의 기존 역사대화 노력들을 점검하고 한 단계 진전을 모색하는 취지였다. 또한 동북아 나라들의 역사교육 현황에 대해 유네스코가 지향하는 국제이해와

평화를 위한 역사교육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기회로 삼고자 했다. 이러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유네스코중국위원회와 일본위원회에 포럼 계획과 그 진행 상황을 알리고 관심을 촉구하면서 더 나아가 가능하면 지지를 표명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유네스코 베이징사무소에도 포럼에 관한 관심과 참여를 요청하였다. 우선 유네스코 베이징사무소는 역사화해 포럼을 한국위원회가 주도하는 것이 인상적이라는 평가 함께 다른 일정 때문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회신을 보내왔다. 여전히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회피하려는 기존 태도에 변화가 없음을 보여준 것이다. 한편 유네스코 중국위원회와 일본위원회는 모두 아무런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무응답). 그런데 일본측은 다른 경로를 통해 유네스코 차원의 역사화해 노력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한국 외교부는 일본 외교부에서 포럼에 관한 연락을 받고 동북아역사재단에 포럼 개최에 관해 확인하면서 정부 차원의 공동위원회가 가동 중인데 이와 별도로 포럼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밝혔다는 것이다. 추측컨대 유네스코일본위원회는 일본 외교부에 포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고, 일본 외교부는 한국 외교부에 항의성 연락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면 동북아에서 유네스코를 통한 역사대화를 시도하는 일이 시기상조일지도 모른다. 사실 유럽의 경우 유네스코가 표방하는 인권, 민주주의, 관용 같은 이념들은 여러 나라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일종의 인식공동체로서 역사대화를 촉진하는 데 이바지했지만, 동북아 나라들에서 유네스코의 이념이 당장 그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 무리가 아닐까 싶다. 그렇다고 해서 유네스코라는 다자간 협력의 틀이 전혀 쓸모없는 것은 아니다. 현재 유네스코는 한국, 북한, 일본, 중국, 몽골 5개국의 유네스코국가위원회 사무총장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어, 동북아 유네스코국가위원회 사이에서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력의 창은 어느 정도 열려 있는 셈이다. 다만 그 협력이 아직은 서로 부담이 적은 분야에 머물고 있어, 이를 한층 더 높이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역사인식과 역사교육을 둘러싼 갈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그 한 계기로 만들기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몇 가지 제안

지금까지 동북아시아에서 역사대화를 위한 유네스코 차원의 활동은 아직 첫걸음조차 떼지 못하고 있다. 유네스코를 통한 역사 문제 논의를 일본과 중국이 반대하고, 유네스코 또한 적극

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독일이 유네스코를 통해 폴란드에 역사대화의 손을 내민 것처럼, 한국이 유네스코를 통해 동북아시아 역사대화를 이끌어나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독일은 당시 동유럽으로 관계를 확대하는 데에 관심이 있었고, 이러한 동방정책을 추구하는 수단 하나로 폴란드와 역사대화에 주목하게 되었다. 동북아에서도 머지않아 이런 일이 일어나길 바라면서 몇 가지 제안을 해본다.

1) 유네스코 차원의 역사공동위원회 운영

앞서 언급한 것처럼 유네스코 차원의 동북아 지역협력 사업은 민감하지 않고 부담 없는 활동 위주에서 좀더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하여 한단계 성숙한 협력사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에 얽매어 있는 중국위원회나 일본위원회보다 한국위원회가 선도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

현재 한-일이나 일-중 역사연구공동위원회가 모두 외교정책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다. 각국 외교부가 공동위원회 운영을 관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 공동위원회가 국제이해, 인권, 평화와 같은 유네스코의 이념을 공통지반으로 삼아 좀더 학술적으로 활동하고 또 활동 방향에서도 공동연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역사교과서 대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담당기관을 각국 유네스코위원회로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동연구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일반인의 역사인식을 바꾸는 일에 있어서는 역사교과서만큼 강력한 것이 없고,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유네스코라는 지붕이 역사교과서 공동위원회에 자율성과 공동의 가치지향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은 유네스코중국위원회나 유네스코일본위원회 모두가 취지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우리의 노력과 상황변화에 따라서 실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2) 교사교류 사업

현재 일본 문부과학성은 해마다 한국의 교원들을 대규모로 초청하여 양국 교원간 교류와 상호이해를 증진하려고 힘쓰고 있고, 규모면에서는 작지만 한국 교육부도 일본 교원들을 맞이하고 있다. 이 교원 교류사업을 양국의 유네스코위원회들이 담당하고 있어서 이를 유네스코 역사대화의 기회로 만드는 것이 가능하고 또 필요하다. 양국의 교원들이 만나 유네스코의 이념과 그에 따른 역사대화의 의의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공동역사교재로 시범수업을 하는 것과 같은 활동을 하면 좋을 것이다. 이런 경험이 쌓이고 또 널리 퍼질수록 동북아 역사대화의 지평은 넓어질 것이다. 때마침 일본 정부는 교원 교류사업을 중국하고도 개시했다고 하니 3국간

교원교류 사업을 역사화해를 주제로 계속 이어나간다면 역사교과서 협의의 성과를 교육현장에 반영시키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3) Youth and History: e-Twinning Project

역사화해를 위한 노력에서 주목해야 할 집단이 청소년이다. 동아시아 대학생과 중고등학생 집단은 기성세대와 달리 이웃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소통하는 데 거부감이 덜하고 좀 더 자유롭다. 이들의 생활세계는 이미 과거사를 뛰어넘고 국경을 초월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³⁾ 따라서 역사화해를 위해 이들 집단에 주목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들이 성인들이 구축한 역사인식의 틀을 깨고 좀더 허심탄회한 역사의 상호이해에 도달할 때 동아시아 역사화해는 한걸음 전진할 수 있을 것이다.

동아시아 청소년들의 상호이해를 촉진하기 위한 유네스코의 창조적인 역할을 구상하기 위해 유럽의 경험을 들여다보자. 유럽의 청소년들은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교사의 도움을 받아 유럽의 다른 나라 학생들과 함께 공동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이 의무로 되어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유럽인으로서의 자각을 키워나가고 이웃나라의 언어를 배우며 문화간 대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교사들도 다른 나라 교사들의 교수법과 교수자료 등을 통해 자신의 수업방식과 자료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학교간 e-Twinning 네트워크는 이러한 공동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사이버연결망이다.⁴⁾ 이 네트워크를 통해 2개 이상 학급이 '가상학급'을 구성하여 똑같은 과목에 대한 노트필기를 비교하기도 하고 이메일과 채팅, 데이터 교환 등의 방식으로 의견을 주고받는다. 그리고 그 결과는 공동홈페이지에 게시되어 모든 사람에게 공개된다.

한중일 3국은 인터넷 인프라가 상당히 잘 구축되어 있고, 또 유네스코협동학교 네트워크도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유리한 조건을 고려할 때, 유럽처럼 모든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이웃나라 학생들과 공동프로젝트 수행을 의무화하는 것은 당장 어렵겠으나, 유네스코협동학교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e-Twinning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역사, 지리, 영어 교과 등에서 학생들의 공동프로젝트 수행을 권장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공동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학생들의 역사인식에 커다란 변화가 발생할 것은 확실하며,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공동프로젝트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교사들의 인식도 크게 변화할 것이다.

3) 한국의 서점에는 일본 문화가 깔려 있고, 연말연시 선물의 90퍼센트가 중국 제품이다. 이렇게 실생활에서는 동아시아인들이 서로 가까워질 대로 가까워진 반면, 지식인들의 담론세계는 여전히 이전의 국민국가, 민족 단위의 틀에 갇혀 있는 경우가 많다. "동아시아의 오늘과 내일: 왜 동아시아인가, 최원석 백영서 교수 대담", 『경향신문』, 2007년 1월 5일, 박노자, 『우리가 몰랐던 동아시아』 (한겨레출판, 2007), 21쪽에서 재인용.

4) 유럽 e-Twinning 네트워크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www.etwinning.net 사이트를 참조.

아울러 동아시아 대학생들의 e-Twinning 프로젝트를 권장하는 유네스코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유네스코의 UNITWIN 프로그램은 선진국과 개도국 대학간 협력에 초점이 있지만, 이를 창조적으로 변용하여 동아시아 대학생간 상호이해 증진을 위한 e-Twinning 프로그램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곤도 다카히로, 박경희 옮김, 《역사교과서의 대화》, 역사비평사, 2006.
- 김승렬, “숙적관계에서 협력관계로: 독일-프랑스 역사교과서 협의”, 《역사와 경계》 49, 2003.
- 박노자, 《우리가 몰랐던 동아시아》, 한겨레출판, 2007.
- 신주백, “동아시아 역사대화의 역사와 모델 찾기: 교과서대화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역사인식 공유를 위한 심포지엄 III 발표문 (2006).
- 이승환 외, “유네스코를 활용한 고구려 역사, 문화의 국제 이해 진흥 방안 연구” 《2005년 고구려연구재단 정책과제 보고서: 중국의 동북공정 대응정책 연구》, 고구려연구재단, 2005.
- 정재정, “서문: 포럼 소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편, 《21세기 역사교육과 역사교과서: 한·일 역사교과서 문제해결의 새로운 대안》, 오름, 1998.
- 한운석, “역사교과서 수정을 통한 독일-폴란드간의 화해 노력”, 《서양사론》 75, 2002.
- Pingel, Falk, UNESCO Guidebook on Textbook Research and Textbook Revision, Georg Eckert Institute for International Textbook Research and UNESCO, 1999.
- UNESCO, “Fostering Peaceful Co-Existence through Analysis and Revision of History Curricula and Textbooks in Southeast Europe-Preliminary Stocktaking Report”, 2006.

인권 현장에서 본 평화

오 창 익 (인권연대)

세계인권선언(1948. 12. 10)은 전문에서 모든 사람들이 존엄하고, 평등하며 저마다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세계 평화의 기초가 되고,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은 인류의 양심을 짓밟는 야만적 행위를 가져왔다고 천명하고 있다.

굳이 세계인권선언의 권위를 빌려오지 않더라도 인권과 평화, 평화와 인권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동전의 한쪽 면에만 구멍을 내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밀접한 관계에 있다. 곧, 인권이 없으면 평화도 없고, 평화가 없으면 인권도 없다.

이런 차원에서 한국의 인권현실을 짚어보며 평화를 그려보는 작업은 언제나 유의미할 것이다. ‘평화캠프’를 위해 쓰인 이 글은 구체적인 인권현실과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 인권의 기초적인 측면, 즉 보편성의 측면마저 ‘차별’에 직면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카넬 바삭(Karel Vasak)이 인권을 3세대로 구분한 이후, 시민적, 정치적 권리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보다 선취한 권리라는 의미로 다가오게 되었다. 즉, 유엔의 B규약은 1세대 권리로, A규약은 2세대로 권리로 여겨졌으며, 바삭이 ‘연대의 권리’라 이름붙인 3세대 권리는 평화권, 환경권 등을 포함하는 권리로 여겨져 왔다.

1세대부터 3세대까지 이르는 인권의 여러 목록들은 세계인권선언의 경우 전문, 대한민국 헌법의 경우 제10조에 규정된 “모든 인간은 존엄하고 가치있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어떤 권리든 인권의 목록에서 언급되는 권리들은 모두 인권의 제1원칙인 보편성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자연권으로 해석하든, 또는 피조물이 받은 은총으로 여기든 간에 인권은 모두 여기서 시작하고 있다.

나는 너와 다르지만, 같은 인류로서 서로 존엄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인정하자는 것이 인권의

시작이다. 다름, 곧 차이는 인간 존엄성의 가장 중요한 근거이기도 하다. 사람이 모두 같다면 귀할 까닭도 존엄하거나 가치 있을 까닭도 없다. 하지만 이 ‘차이’는 곧잘 차별, 때론 심각한 차별로 이어지기도 한다.

한 수구언론에 나온 보도물을 보자. 지난달 경기도 가평의 한 펜션에서 군인권센터 주최로 ‘게이 예비 입영자 인권캠프’ 라는 행사가 열렸다. 중앙일보가 이 행사를 알리는 포스터를 문제 삼아 야당 국회의원들을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

남자 둘 키스하는 포스터에 내 이름이 ‘화들짝’



[중앙일보]
입력 2013.01.11 03:00 / 수정 2013.01.11 10:03

‘게이 예비 입영자’ 캠프 공동주최자로 소개되자 해당 의원들 “금시초문”

야당 의원들이 동성애자 캠프에서 간담회를 공동 주최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군인권센터’라는 시민단체는 ‘Military Gay(게이 예비 입영자) party’라는 이름의 캠프를 18-20일 연다. 군인권센터는 캠프의 내용을 소개하는 포스터(사진)를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동 주최자로 민주통합당 김재윤·전순옥·장하나 의원실, 진보정의당 노회찬·박원석 의원실이 적혀 있다.

남성 2명이 키스하는 배경 그림과 함께 군 인권 영화 상영, 동성애자 강연 및 ‘국회의원과 함께하는 간담회’ 등의 행사 일정도 소개됐다.

이번 행사는 군인권센터가 평소 안면이 있던 의원실에 연락해 잡혔다고 한다. 이 단체의 임태훈(36) 소장은 지난해 4월 민주당에 청년비례대표 후보를 신청했다가 탈락했었다. 그는 10일 “입대를 준비하는 동성애자들에게 군내에서 발생하는 차별에 대비해 사전 교육을 하려는 것”이라며 “포스터가 자극적이란 지적도 있지만 동성애자의 애정 표현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성적 소수자 문제는 진보진영에서도 민감한 문제다. 특히 민주당엔 내부에 보수적 시선이 강하다. 종교계를 의식해서라도 내놓고 옹호하기를 꺼리는 분위기다.

대선을 앞둔 12월 13일, 민주당 김진표 종교특위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동성애·동성혼의 법제화에 반대하는 기독교계의 주장에 깊이 공감하며 동성애·동성혼을 허용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포스터가 알려지자 민주당의 한 당직자는 “왜 우리 의원들의 이름이 저런 포스터에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논란이 일자 해당 의원들은 발을 빼는 분위기다. 김재윤 의원은 “의원실 실무자가 참여하는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2박3일 캠프까지 연다는 얘기는 금시초문”이라고 했다. 김 의원 측은 이날 군인권센터 측에 실무진의 참석도 곤란하다고 알렸다고 한다. 장하나 의원은 “당초 행사 참석은 어려웠다”며 “포스터가 동성애자를 폄훼하는 듯이 비춰져 해당 단체에 항의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노회찬·박원석 의원 측은 의원 본인이 참여하려는 행사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성적 소수자에 대한 공격에다, 야당 의원들에 대한 공격까지를 하나의 기사를 통해 노리고 있다. 일타이피다. 그리고 전형적으로 악랄한 기사다. 조중동 등 수구언론에서 이런 식의 기사를 찾는 것은 너무도 쉬운 일이다. 짧은 머리를 한 극우청소년들이 아니라,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제도 언론이 차별을 조장하고, 소수자를 배제하고 있다. 인권의 기본, 인권의 기초가 언론에 의해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중앙일보의 보도 이후 이 행사를 주최한 단체에는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고 한다. 주로 5-60대 여성들인데, 어떻게 전화했냐고 물으니, 교회 목사님이 시켰다고 순순히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았단다. “불쌍한 사람들, 미워해선 안 되고 사랑해야 하나, 치료해줘야 할 사람들”을 오히려 부추기는 단체의 행태를 비판하기 위해서였단다. 하긴 WCC 세계대회를 앞두고, 성공적 대회 개최를 위해 보수와 진보가 결집해 ‘동성애 반대’ 등의 강령을 채택했고, 많은 개신교회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가르치기까지 하는 상황이니 이런 식의 반응은 한국사회에서는 어쩌면 자연

스러운 일일 수도 있다.

보통의 경우, 이런 테러에 가까운 봉변을 당하면, 지지자들은 결집하고, 단체의 경우 회원 가입이 늘어난다. 하지만 균인권센터에는 그런 일도 없었다. 성소수자들은 조직화되어 있지 못했고, 자신을 드러내 구체적인 지지의사를 밝히는 것도 정말이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문제의 캠프에 강사로 초대받았다. 토요일 아침, 서른 몇 명쯤 되는 스무 살 남짓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다. 듣자하니, 주최 측을 비롯해 참석자 전원이 게이라고 했다. 인권운동은 하는 덕분에 게이나 레즈비언 같은 성소수자를 만나는 일이 많았지만, 어떤 모임에서 나만 빼고 모두가 성소수자였던 것은 아마 처음이었을 거다. 그렇다고 특별한 감흥은 없었지만, 성적 지향에 있어 늘 다수자의 지위에 있던 나도 어떤 모임에서는 거꾸로 성적 소수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신선한 발견이었다.

강의 말미에 질문을 받았다. 어떤 젊은이가 당신의 자녀가 성소수자라고 밝힌다면 어떻게 하겠냐고 물었다. 이런 식의 질문은 물론 처음이 아니다. 그래서 답변도 늘 준비되어 있다. “애들은 애들 인생을 사는 건데, 내가 뭐라 할 게 뭐 있나.” 그러자 다른 한 젊은이가 나더러 “아빠!”라고 불렀다. 다들 웃었다.

얼마 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이 병사도 마찬가지다. 수십 장의 유서를 썼지만, 결국 하고 싶었던 말은 단 한마디였다.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달라. 성소수자들의 가장 큰 고통은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달라는 절규는 성소수자들만의 것은 아니다. 외국인들, 지역차별에 시달리는 특정 지역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비정규직, 학교에서도 지역에서 심지어 가정에서도 내몰린 어린 청소년들, 외모로 차별을 받는 사람들….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인 차별과 배제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의 인권현실은 이렇게 고약하기만 하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나이, 성별, 성적 지향, 장애 여부, 학력, 학벌, 출신지역, 직업, 종교, 기타 뭐든 근거가 될 만한 온갖 것들이 모두 사람과 사람을 차별하는 기제가 되고 있다. 차별은 인권과 헌법의 원칙을 허물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암적 존재지만, 차별 때문에 처벌받거나 혹은 사회적 비난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차별받는 사람들의 목숨마저 앗아갈 정도로 치명적이지만, 차별을 범죄로 처벌하거나, 그게 아니라도 최소한 문제시하는 인식도 별로 없다.

내가 일하는 단체가 상반기에 역점을 기울여 진행하려는 캠페인 <기억하라! 34,361!>도 그런 차원에서의 문제제기다. 34,361은 2011년 한 해 동안 벌금을 내지 못해 교도소에 갇힌 노역수

들의 숫자이다. 일 년 동안 3만4천3백6십1명이 단지 돈이 없어서 감옥에 갇히는 것이 한국사회의 현실이다. 벌금형은 애초 징역 같은 자유형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이다.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은 가족과 생이별을 해야 하고, 직장을 잃게 만들어 생업에 종사하는 것도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늘 비인간적인 형벌, 야만적인 형벌로 꼽히고 있다. 경미한 범죄의 경우에는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선고해, 범법행위에 대한 경중을 올리는 대신, 감옥에까지 가지는 않도록 하자는 거다. 그렇지만 벌금을 내지 않으면, 하루에 5만원씩 쳐주는 감옥행이 기다리고 있다. 죄의 경중이나 범죄자의 상태 따위가 아니라, 오로지 가난 때문에 매년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감옥을 가는 나라는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다. 이런 나라는 차라리 망하는 게 낫다고 말하는 것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엉망진창인 상황이다.

벌금은 한꺼번에 일시불로 내야 한다. 할부도 없고, 나중에 낼 수도 없다. 카드 납부도 당연히 받아주지 않는다. 당장 목돈으로 100만원을 마련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10개월 할부나 최소한 6개월 할부만 해줘도 벌금을 낼 수 있을텐데, 이런 제도는 도입조차 되지 않고 있다. <검찰 징수사무규칙>에 벌금 유예나 일부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그런 규정은 검찰청 징수계 직원의 사무실 책상 서랍 안에만 처박혀 있을 뿐이다.

벌금액수를 똑같이 매기는 것도 문제다. 소득 차이가 1만 배 차이가 나도, 매기는 벌금액수는 똑같다. 똑같은 수백만 원의 벌금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껌값이지만,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는 감옥에 가서 고스란히 몸으로 떼워야 할 무거운 형벌이 된다. 이렇게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헌법의 기초가 오로지 돈 때문에 흔들리고 왜곡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이런 고약한 한국의 인권현실에서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만약 평화가 한때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답답했던 시절에 생각했던 것처럼,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만을 의미한다면 또 모를까. 평화를 위한 인권, 인권을 위한 평화는 상호 밀접한 연관 속에서 존재하기에, 기본적인 차별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평화란 어림도 없는 일이다.

앞의 중앙일보 기사도 마찬가지다. 이 기사를 쓴 기자는 정말 기본적인 부끄러움도 없나 보다. 기사를 데스크하는 선배들이나, 기사 게재를 결정한 부장, 국장 등의 고위 간부들도 마찬가지다. 차별을 조장하면서 정적 그게 아니라면 정치적으로 타격하고 싶은 야당 의원들을 공격할 빌미로 쓴다는 것이 얼마나 파렴치한 일인지,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에 기대든, 자신이 몸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이념에 기대든, 또는 오로지 자기 가족만을 챙기고 보살피고 싶은 마음에 기대든 간에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조차 없다. 아마 이 기사를

쓴 다음 제대로 된 욕도 한번 먹어보지 못했을 수도 있다. 만약 비판적인 댓글이 달렸다면, '호모의 농간' 정도로 치부하고 넘어갈 지도 모를 일이다.

검사들도 마찬가지다. 그저 형집행력만 높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지, 단지 돈이 없어 감옥에 가는 수만 명의 사람들의 절규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표현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나라,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극도로 위축되어 집회와 시위가 사실상의 허가제가 된 나라,
종교, 학문, 거주이전, 신체의 자유 등이 극심한 왜곡 현상을 보이는 나라,
일제와 박정희조차 극복하지 못한 나라,
세계에서 가장 노골적인 시민 통제시스템을 갖춘 나라,
그리고 이웃의 고통에 아파하고 연대하는 시민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나라,
이런 식의 표현을 끝도 없이 이어갈 수 있는 나라에서
평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제목처럼 “인권 현장에서 본 평화”는 거의 볼 수 없는 상태, 보이지 않는 상태에 머물러 있다. 공화국의 기본 이념마저 외면당하는 상황, 차별이 노골화되고 일상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공허하다.

다시 카넬 바삭의 분류에 따르면 인권은 1-2-3세대에 걸쳐 발전해 왔다(꼭 시간 순서대로 정밀하게 맞는 것은 아니지만). 평화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까지 제대로 보장하고 난 다음에 만날 수 있는 권리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아직 시민적, 정치적 권리, 곧 제1세대 인권에서도 술한 문제에 직면해있다. 차별 문제에서 보듯이 많은 경우는 아직 1세대 인권을 시작조차 못한 상황도 적지 않다.

그렇다고 평화를 위한 노력을 포기하거나 중단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인권 그리고 평화운동은 더욱 촉진되어야 하며,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운동만이 현실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세상을 바꿀 수 없으면 더 망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래야 한다.

끊임없이 학습하고 조직하고, 역량을 비축하고, 19세기 파리의 어느 골목에서처럼 인권과 평화의 적들이 함부로 넘어설 수 없는 바리케이드를 쌓아 튼실한 진지를 구축해야 한다.

평화에 관심 있는 연구자들이 우리 사회의 상식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은 어쩌면 튼실한 진지를 위한 작지만 구체적인 시작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해본다.

철원 비전과 남북한 평화 통일 운동

정 지 석 (평화의 씨앗, 국경선평화학교)

1. 평화의 씨앗들(Seeds of Peace) 운동

〈평화의 씨앗들〉은 '내가 평화의 씨앗이다'는 각성을 하고, 남북한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평화의 씨앗들〉은
첫째, 남북한 평화통일을 기도합니다.
둘째, 평화통일의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셋째, 평화통일과 그 이후 사회를 위해 일할 피스메이커를 키우는 일에 동참합니다.

철원은 국경선 마을입니다. 분단과 갈등의 현장 마을 철원에서 우리는 남북한 평화통일을 기도하고, 그 날을 준비하고, 피스메이커를 양육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155마일 국경 마을과 전국 방방곡곡에 〈평화의 씨앗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기도합니다.

2. 철원은?

- 궁예의 태봉국 수도
- 한반도의 중심지역
- 남북한-강원도-철원의 분단: 남철원 북철원
- DMZ-한국전쟁 격전지(백마고지, 피의능선)

- 49,463(2010년)
- 유치원 14개(공립 11/사립 3)
- 초등학교(16)
- 중학교(5)
- 고등학교(5)
- 대학(UN 평화대학의 꿈)

3. 철원-작은 팔레스타인

- 남북한 분단-휴전-국경선 마을
- 4개 읍, 농민과 군인-군사지역
- 3.8선 이북-남 철원과 북 철원
- 경원선(서울-원산-함흥-러시아-유럽)
- 내금강 전기철도

4. 평화의 씨앗들-철원 비전 VISION

- 평화통일의 꿈
- 한국전쟁 → 평화의 나라
- 분단 대립 → 일치와 협력

평화의 나라를 향한 준비를 하자

“해방이 아무 준비없이 왔다. 싸워 얻은 것도 아니요, 미리 예측하고 기다렸던 것도 아니요, 물자도 없이, 기술도 없이, 국민적 정치 훈련도 없이, 문화 창조의 정신력을 기른 것도 없이 도둑같이 왔다. 말하자면 아무 준비도 못한 채 무대 위로 올라가라는 명령을 받은 배우가 된 셈이다. 그 배우는 화 있을진저”

(함석헌의 <뜻으로 본 한국역사>)

5. 철원 남북 평화 통일 운동-세가지 소명

- <평화의 씨앗들> 운동 (Seeds of Peace)
- 국경선 평화학교 (Border Peace School: BPS)
- 소이산 평화기도순례 (Peace Prayer Pilgrim: PPP)

6. <평화의 씨앗들> 운동

“내가 평화의 씨앗이다”

- 씨알 각성 운동
 - 남북한 평화통일을 기도
 - 평화통일의 날을 맞이할 준비
 - 피스메이커 양육에 동참, 지원
- 전국 방방곡곡과 해외 교포 사회
- 현재, 평화의 씨앗들-강화, 뉴욕 모임...

7. 국경선 평화학교 BORDER PEACE SCHOOL(BPS)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마태복음 5:9)

- 피스메이커들을 길러내는 학교
- 남북한을 잇는 대화-화해의 공동체
- 세계 평화 연구, 운동, 교육 센터

8. BPS 8개 트랙의 커리큘럼

- 평화학: 평화학 입문, 평화 영상, 인권평화, 평화교육, 화통(비폭력) 대화법, 갈등해결과 중재법, 남북한-국제평화론
- 평화봉사 실기: 집짓기, 환경유기농업, 건강과 보건
- 영어Peace English(기초회화, 영어공문작성, 국제회의)
- 치유 요가 (요가지도자 1급, 2급, 3급)
- 평화순례: 국내-해외 평화 현장 순례
- 평화인문학: 동서양 고전 읽기(논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노장...)
- 문화 예술: 다큐멘터리 제작, 한국춤, 택견, 도자기, 사진
- 특강 & 석학 초청 한주간 대화: 마을 주민 공개

9. BPS 개교일정

- 일시: 2013년 3월 1일 오후 3시-5시
- 장소: DMZ 평화문화 광장
- 교수진: 22명(국내) / 7명(해외)

10. BPS 중장기 계획

- 평화교육 공동체 마을-교실과 도서관, 집과 게스트 하우스
- 평화운동가 명상 휴식 재충전 리트릿 센터
- 155마일 국경선 마을 10곳에 형성

11. 운영 계획

- 교회 민족 미래 (평화통일) 장학금
- 피스메이커 육성 장학금
(현재: 뉴욕 우리교회, 새길교회, 기장 경기북노회, 평화의 씨앗-철원교회, 강화모임)
 - 자체 기금 사업: 농사(쌀, 과일, 축산), 사업
 - 후원금

12. 소이산 평화기도순례(Peace Prayer Pilgrim)

- 안보관광 → 평화관광 → 평화순례
- 민족분단 DMZ는 관광길이 아닌 순례길
- 기도의길
- “평화통일 - 민족 치유”
- “친구 치유”
- “믿음 회복”

한국 사람에게도 세계적 사명이 있느냐고 물으면 사람들은 어떤 대답을 할까? 더구나 그 지도적 지위에 섰다는 사람들은 한국을 위해 생각하고, 이 사회를 사람사는 것다운 사회로 만들려고 힘을 쓰는 사람들은 어떤 대답을 할까? 저들은 거기 대하여 아무 생각도, 세워놓은 의견도 없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일찍이 그런 것을 들은 일이 없다. 생활 개선도 말하고 사회 개량도 부르짖고 국민운동도 요새 와서는 많이 말하지만, 우리가 세계를 위하여, 인류를 위해서 이것을 해야 한다고 힘있게 믿는 바를 주장하는 것을 들은 일이 없다. ...

그 생활에서 생각하면 당장의 목숨을 이어가는 것도 문제인데 어느 겨를에 인류의 일을 결정할 여유가 있을까? 세계적이니 뭐니 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일종의 사치요, 주제넘은 생각같다.

그러나 그래서 안된다. 살았다 함은 할 일이 있다는 말이다. 생(生)은 명(命)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것이 삶이다. 삶은 함이다.



평화학워크숍

- 디터 쟁하스의 평화론: 복합구성과 문명화 이동기 (IPUS)
 - 민주평화론에 대한 이해
송영훈 (IPUS)
-

디터 쟁하스의 평화론: 복합구성과 문명화

이 동 기 (IPUS)

1. 관심과 전제

지난 40년 동안 독일 내지 독일어권 유럽에서 평화학의 학문적 이론적 발전에서 가장 주목할 인물은 단연 디터 쟁하스(Dieter Senghaas)다. 그는 요한 갈통과 더불어 유럽 내 ‘비판적 평화연구(Kritische Friedensforschung)’ 조류의 가장 독창적이고 열정적인 학자의 한명으로 간주된다. 1960년대 후반부터 등장한 이 ‘비판적 평화연구’의 조류는 안보 문제나 전쟁방지에 초점을 맞춘 기왕의 ‘전통적인’ 평화연구 경향과 꾸준히 비판적 대결을 벌이면서 폭력과 전쟁의 구조적 원인과 사회적 근원을 문제 삼았다. ‘비판적’ 평화연구는, 지배적 권력관계의 안정화에 복무하는 ‘평정연구(Befriedungsforschung)’에 불과한 ‘인습적’ 평화연구와는 달리, 현존 사회 체제의 자기파괴에 대항하는 근본적 체제 ‘비판’의 성격을 지녔다. 바로 그와 같은 관점에서 쟁하스는 무엇보다 미국의 선구적 평화학자 칼 도이취(Karl Deutsch)의 영향과 갈통의 지적 자극을 받아들여, 수많은 저작과 논문들로 다양한 방법론적 논의와 현실 비판적 연구를 선보이며 독일 내지 독일어권 유럽의 ‘비판적 평화연구’를 선도했다. 특히 그가 1990년 초반부터 적극 초들고 있는 ‘문명화프로젝트로서의 평화’론은 최근 유럽 평화학의 가장 의미 있는 지적 성과로 간주된다. 전쟁과 폭력 및 적대적 갈등의 해결책을 ‘문명화’에서 찾는 쟁하스의 평화론은 ‘시민적(zivil, civil) 갈등 조정’이라는 구체적인 실천적 대안으로 연결되기에 단연 눈길을 끈다.

그런데 비판적 평화연구의 다양한 조류 내에서 갈통의 구조적 폭력론이나 에른스트-오토 첼필(Ernst-Otto Czempiel)의 민주평화론, 또는 여성주의적 관점의 평화연구가 아니라 특별히 쟁하스의 평화론이 관심을 끄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보다 그가 평화를 ‘복합구성(Konfiguration:’

configuration)의 문제로 보았다는 점이다. 한국에서 평화학은 지금까지 주로 분단문제의 극복이나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한 정치적 분석의 자장 또는 현실 평화운동이나 화급한 평화요구적 주제의 환기를 위한 지적 관심의 제고 차원에 제한되었다. 평화연구가 실천적 요구에 조응하면서도 학문 제도적으로 자기정립하려면 그것에 걸맞은 이론적 방법론적 숙고와 지평을 확대해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특정 정치적 문화적 갈등 요인들의 단선적이고 병렬적인 해결이 아니라 다양한 '비평화(peacelessness; Friedlosigkeit, 평화부재)'의 구조와 문화의 다층적 연관관계를 해명하고 평화 형성의 '다층적 복합 강령(mehrfaches Komplexprogramm)' (쟁하스)을 찾는 것일 테다.

1990년대 초반 쟁하스는 오랫동안 현실적 정치의 준칙으로 간주되었던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 Si vis pacem, para bellum> (원평비전 願平備戰)을 비판하며 그것에 대비되는 <평화를 원하면 평화를 준비하라 Si vis pacem, para pacem> (원평비평 願平備平) 원칙을 평화론의 전제로 내세웠다. 쟁하스는 '민주주의를 원한다면 독재를 준비할 수 없'는 것처럼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할 수는 없고 평화를 가능케 하는 요인들을 구상하는 논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쟁하스는 '인과적 평화주의(ursächlicher Pazifismus)'를 내걸었다. "어떤 결과를 제거하려면 먼저 그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다른 어떤 결과가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앞의 그 원인 대신에 그 결과를 낳을 다른 원인들을 정착시켜야 한다." '원평비전' 식의 안보론적 평화사유를 극복하며 '적극적 평화'의 사회내적 전제 조건들을 전면적으로 주제화했다. 안정적인 평화를 가능케 할 조건들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것, 즉 '건설적 평화구상'이 이제 쟁하스의 연구 과제가 되었다.

2. 문명육모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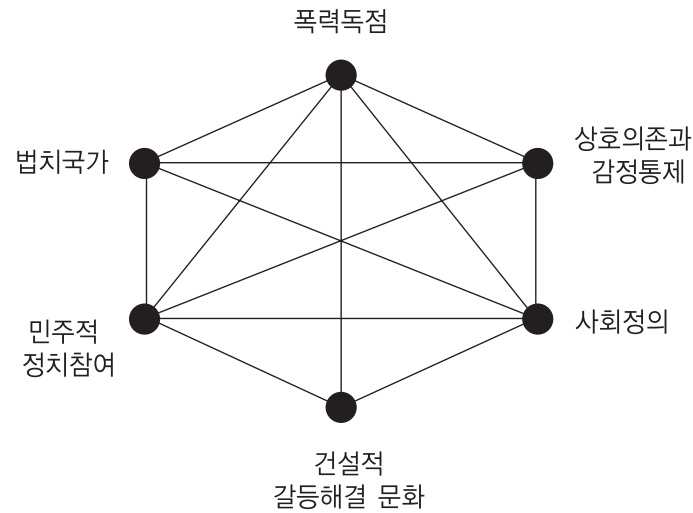
앞선 평화학자들의 모델들을 적극적으로 끌어와 복합강령이라고 종합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제외하면, 1990년대 초반부터 쟁하스가 적극적으로 설파하고 있는 갈등해결과 평화 정착의 모델은 '문명 육모(Das zivilisatorische Hexagon)'론이다. 먼저 유념해야 할 것은 쟁하스가 이 모델을 "추상적인 이론"으로 간주하지 않았고 오히려 "경험과학적 발견의 정리"라고 강조한다는 사실이다. 쟁하스는 한 사회의 평화 보장의 문제를 '문명화 프로젝트'로 간주했으며 유럽에서 그 프로젝트가 성공한 경험에 근거해 "문명화되고 지속적인 비폭력적 갈등 해결"을

위한 여섯 가지 초석(꼭지점)을 잡았다. 이 때 쟁하스는 자신의 문명육모론이 "좋은 사회" 내지 "좋은 국제사회"론이 아니라 애초부터 평화론으로 구상되었다고 명료하게 밝혔다. 다시 말해, 쟁하스의 문명육모론은 흔히 사회철학이나 정치사상의 영역에서 추상적으로 구상되는 이상사회론류의 논의가 아니라 역사-경험적 관찰에 근거해 '어떻게 하면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지'의 문제에 초점을 맞춘 모델이라는 것이다. 그렇기에 쟁하스는 비록 '문명(Zivilisation)'이라는 개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노베르트 엘리아스의 문명화론에 큰 영향을 받기도 했지만 '좋은 문명' 그 자체에 대한 구상을 목표로 하지도 않았다.

아울러 쟁하스가 평화를 '문명화프로젝트'라고 말할 때 그것은 시공간을 초월한 "추상적이고-보편적인"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철저히 "근대화가 진행 중인 또는 근대화한 사회 내부와 그 근대 사회들 간의 평화 문제"를 지시한다. 쟁하스는 '근대' 사회의 특징을 강조하며 전근대 전통사회와 근대사회를 구분한다. 그가 보기에 전통사회는 신분에 따라 사람의 지위가 이미 정해지는 정적인 사회인데 비해 근대사회는 지속적인 세속적 해방 과정의 결과로서 전국적으로 확대된 교통망과 도시화, 문맹극복과 정치적 공동결정의 확대 등을 특징으로 갖고 있다. 그 결과로 근대사회는 성격 자체로 보면 과거보다 더욱 더 갈등과 폭력의 잠재력을 많이 가진 사회가 되었다. 다시 말해, 근대사회는 전통사회와는 구분되는 새로운 변화로 인해 다원주의가 지배한다. 다원주의는 무엇보다 자아상과 세계상의 차이나 서로 다른 정의관을 전제로 한 정체성의 다원주의고 이익의 다원성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쟁하스가 보기에 갈등 잠재력이 높은 다원적 근대 사회가 장기적인 폭력 갈등 또는 유사 내전 상태 내지 실제 전쟁으로 치닫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존을 위한 협정 내지 합의가 필요하다. 그것은 그 자체로는 극복하기 쉽지 않은 견해와 이익의 차이들 때문에 더욱 절실해지는 것이다. 결국 근대 사회에서 이 공존의 형식과 규칙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결정적인 문명적 과제라는 것이 쟁하스가 내세우는 평화론의 출발점이다. 쟁하스는 이 공존의 성패에 평화가 달린 것으로 보았고 그렇기에 근대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비폭력적이고 건설적인 갈등해결의 지속적인 형식을 발견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적 협약을 통해서 공동체 내부 및 공동체들 간에 사람들의 공동생활을 '문명화' 하는 것이 평화였다. 그렇기에 쟁하스의 사유에서는 문명화의 성공과 평화란 사실상 동일한 현상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런데 쟁하스의 문명화프로젝트로서의 평화론은 먼저 근대 사회 내부에서 내적 평화가 달성되는 과정에 대한 분석에 집중한다. 쟁하스에 따르면 '복합구성으로서의 평화'는 아래 여섯 요소들에 의해 역사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림 1〉 복합구성으로서의 평화



첫째, 시민의 무장해제와 폭력의 탈사유화를 의미하는 국가의 폭력 독점. 쟁하스가 보기에 폭력독점을 통해서만 공적 갈등들의 평화 내지 신뢰할만한 비폭력적 해결이 가능해진다. 사회구성원이 폭력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을 공적 권위와 권력이 모든 비폭력 사회의 출발점이라는 것이다. 이 때 물론 공권력의 정당한 독점 내지 법공동체의 확보가 관건이다.

둘째, 폭력의 공적 독점이 전제적으로 오용되는 것을 막을 법치국가. 쟁하스에 의하면, 폭력 독점의 법치국가적 통제가 전제되어야 폭력독점이 용납 가능해진다. 법의 지배를 말한다. 법치국가적 헌법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치 질서들은 폭력독점의 틀을 잡으며 정당성을 제공하는 것이다. 기본권 보호, 법률을 통한 인권보장, 법 앞에서의 평등, 권력분립, 자유선거, 정치참여의 권리 보장, 검찰과 재판관의 독립성, 법정에서 공정한 심리와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 그 법치국가의 구성요소를 이룬다.

그렇게 보면, 평화사회의 형성에서 폭력독점과 법치국가는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논리적으로 보나 역사적으로 보나 폭력독점이 이루어지 않은 민주적 법치국가의 정착을 상상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법치국가는 일단 형성되고 나면 폭력독점을 통제하는 구현체가 된다. 역사발전 과정을 보면 먼저 폭력의 거친 독점화가 이루어지고 난 뒤 장기간에 걸쳐 폭력독점의 통제 기관과 방식들이 획득되고 인정되었다.

셋째, 갈등상황에서의 감정 통제 및 사회구성원 사이의 상호의존과 그것의 영향을 통한 갈등

통제.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로의 변화는 다양한 기능 분화를 초래했다. 그것은 예측가능성과 안전에 대한 기대를 요구하고 경제적 연루를 낳으며 기능적 역할 세분화의 긴 연쇄를 통해 작동된다. 그리고 그와 같은 연루와 연쇄는 다시 감정 통제를 강제한다. 자기통제와 자기지배는 공격성 제어와 폭력 단념에만 중요한 게 아니고 관용과 타협 능력을 위해서 중요하다. 폭력독점과 법치국가는 감정통제가 없으면 허약한 골조에 불과할 것이다.

넷째, 선거 및 정치결정 과정에의 민주적 참여. 사회변혁과 광범한 사회이동의 결과로 새로운 사회 계층은 항상 민주적 참여 권리를 요구하게 된다. 다원적 이익발현 그리고 상승과 하강으로의 사회이동은 정치체제의 지속적인 민주화를 필요로 한다. 지속가능한 문명화를 위해 필수적인 것은 다양한 이익들의 광범한 발현 능력과 유연하고 개방적인 민주 체제로의 통합이다.

다섯째, 모든 시민의 기본권, 특히 사회적 인권까지도 보장해줄 사회 정의. 사회정의는 분배 정의와 기회균등을 포함한다. 사회이동이 심하고 정치화된 근대 사회에서 사회정의와 공정성을 둘러싼 대결은 질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 근대 사회가 기본적으로 사회적 불평등에 기초해 있기 때문에 사회정의의 실현은 문명화된 사회생활의 광범한 수용의 구성적 조건이다. 그렇지 않다면 민주주의는 물질적 토대와 그것을 통한 충분한 적법성 없이 존재하는 셈이다.

여섯째, 갈등을 타협과 관용에 기초해 해결할 수 만드는 건설적인 정치적 갈등문화. 앞의 모든 요소가 갖추어진다면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비폭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갈등에 대한 생산적인 대결과 타협 지향적 해결 능력이 정치행위의 자명한 정향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역으로 이 건설적 갈등해결의 정치문화와 민주적 논쟁 문화의 기초 하에서만 법치국가와 폭력독점이 제대로 작용할 수 있다.

쟁하스는 이 여섯 가지 문명 구성의 기본 요소가 서로 어떤 작용을 하는가에 따라 평화 보장 또는 폭력 확산이 달려있다고 보았다. 요컨대, 쟁하스의 핵심 주장은 평화란 위에서 언급한 그 문명화 요소들의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정치적 사회적 정착의 결과라는 것이다. 쟁하스는 “한편의 정치와 사회의 문명화, 다른 한편의 평화란 동일한 상황이다”라고 전제하면서, “일국 내부 및 국가 간 차원 둘 모두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의 문명화 내지 평화는 폭력사용의 방지를 지향하는 비폭력적인 정치적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고, 바로 그 과정에서 사회집단 내지 국가나 민족 간 그들의 존재를 위기에 빠트리지 않고 그들 개개인 내지 일부의 삶의 이해관계나 정의감이 심각하게 손상되지 않도록 만들 조건들이 합의와 타협을 통해 형성된다”고 강조했다. 위의 문명육묘론은 원평비평(Si vis pacem, para pacem)의 규준으로서 헌법정치, 민주제도, 물질적 복리 및 정서적 전제조건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복합구성’의 관점은 다시금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비판적-반성적 문명화론적 관점의 이 문명육모론은 특정한 이상적 근대의 ‘구성’(figuration)이 아니라 서구 사회에서 발생한 기형화된 문명발전의 경험에서 출발해 문명의 오도된 발전경로들에 대한 사회비판을 가능케 하고 그것을 통해 평화를 위한 이론적 분석을 시도하는 것이다. ‘평화를 복합구성으로 생각하는’ 관점이야말로 기능적으로 다분화된 근대 사회의 복합체를 모두 포괄하면서 상호의존적 기제의 작동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문명육모의 여섯 가지 초석들이 자가 발전한 피드백 기제를 통해 일종의 재생산의 틀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문명화 구성 요소인 이 여섯 가지 초석들은 긍정적 피드백 기제나 부정적 피드백 기제 속에서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보아야한다는 말이다. 그렇기에 문명육모는 그 자체로 완결된 이상 상태가 아니라 여러 요소들의 상호의존 속에서 자칫 부서지기 쉬운 ‘허약한 구조’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게다가 인식 내적 논리로 본다면 문명육모는 이미 역사적-발생적 패러다임이다. 그렇기에 각각의 구성요소들이 점점 더 명료하게 자리잡아갈수록 그것은 단순히 각각의 개별 구성요소들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그것들의 ‘복합구성’을 특징으로 갖게 된다. ‘복합구성’이란 엄밀하게 말한다면 무엇보다 “구조적 인과성”을 지시한다. 전체로서의 문명육모는 점점 더 다양한 피드백 과정을 통해 인과적 연관과 상호작용의 구조를 만들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역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 문명육모는 일종의 발전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쟁하스는 이 문명화 기준들의 형성을 유럽사 발전의 산물이라고 보고 있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유럽 경험에서 나온 그 기준들이 여타 지역에도 적용 가능한 보편성을 지닌다고 내세웠다. 쟁하스가 보기에 애초 서유럽 그리고 현재 OECD국가들에서는 이 여섯 개의 초석이 하나씩 쌓여서 놓여졌다.

덧붙여, 쟁하스는 일국 내의 문명화 갈등 해결 모델을 국제 관계에도 옮겨 적용하고자 한다. 이 때 그는 하나의 세계국가를 통한 평화구축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 그것은 현실에서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세계의 동종성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복합구성으로서의 평화’론은 세계의 구조적 이종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한다. 문명육모론에 근거한 세계평화질서는 지역평화 지대와 “지역의 유사-국가연합적 질서”로서의 국제체제가 서로 보충하며 상호 안정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쟁하스는 바로 유럽연합이 그 모델이고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그와 같은 발전 과정이 재현될 것이라고 희망했다.

3. 평가와 함의

쟁하스가 제시한 ‘복합구성적’ 관점의 평화론은 평화 구성의 다양한 원인과 조건들을 연관시키고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평화론의 중요한 이론적 성취다. ‘원평비평’의 준칙에 기초한 ‘인과적 평화주의’의 관점은 평화학이 단순히 비평화 현실에 대한 비판을 넘어 적극적으로 평화의 조건을 구상하는 데까지 나아가야함을 제대로 시사했고, 문명육모론은 그와 같은 ‘건설적 평화구상’의 인식지평과 사유 양상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예시했다. 그러나 유럽과 역사적, 정치적 배경이 다른 한반도 내지 동아시아에서 ‘문명육모 평화론’의 맹목적 수용은 현명하지 못하다. 다양한 맥락의 차이를 고려해야 하고 동아시아가 고유하게 지니고 있는 (비)평화의 조건들을 더 살피고 논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일본제국주의의 국가폭력을 둘러싼 과거청산의 과제와 연결된 화해와 기억의 문제는 쟁하스에게는 독자적 의미가 없었지만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서는 상당한 역사적 무게와 현실적 중요성이 있다.

한편, 오랫동안 남북 간 냉전적 대결과 분단의 지속으로 한국에서 평화연구는 분단문제나 남북한의 대결 극복에 대한 논의에 집중 내지 제한되었다. 분단문제 내지 남북한 관계에 대한 인식 관심과 논의가 평화 연구를 과도하게 지배해 결국 평화와 관련한 독자적 연구 주제와 관점을 축소해 온 것은 아닌지 검토해 보아야할 것이다. 물론, 한반도 ‘평화의 복합구성’에 대한 탐구 과정에서 분단 문제를 중심에 세우는 것은 필수불가결하다. 그런데 그것이 한반도 분단 현실에 대한 인식의 보조로 축소, 환원(‘분단체제론’, ‘평화국가론’ 등등) 되기 보다는 오히려 평화 그 자체에 대한 이론적 개념적 논의의 정립과 확산으로 상승하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의 분단이 한반도와 동아시아가 겪는 ‘평화부재’의 유일무이한 요인이라면 그것의 극복 자체가 바로 평화 구성(figuration)으로 현시하겠지만, 분단이 한반도 ‘비평화’의 단일한 규정 요소가 아닌 바에야, 비민주적 정치문화의 지속과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불관용 및 ‘자폐적 적대성’의 재생산 등과의 연관성에 대해 더 세밀한 분석, 특히 ‘복합구성적(configurative)’인 관점의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게다가 쟁하스의 평화론은 어떤 영속적인 평화 ‘상태’가 아니라 지속적인 평화의 ‘조건’과 ‘과정’을 탐구했다는 점에서 특별한 함의가 있다. 결국 ‘한반도 발 평화이론’도 남북한 분단에 대한 더 나은 이해에 달려 있다기보다는 분단 ‘갈등’의 해결을 비롯한, 더 많은 평화의 조건들의 ‘복합구성’ 과정을 얼마나 정밀하게 분석하고 상상하는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 이동기, '디터 쟁하스의 평화론: 문명화의 복합구성', <평화학연구> 2013, 봄호.
- Senghaas, Dieter. Pioneer of Peace and Development Research, Bremen: Springer, 2013
- Dieter Senghaas, 2001: Civilizing Conflict: Constructive Pacifism as a Guiding Notion for Conflict Transformation, in Berghof Handbook for Conflict Transformation, Berghof Research Center for Constructive Conflict Management, Berlin, pp. 1-18.

민주평화론에 대한 이해^{†)}

송영훈 (IPUS)

I. 평화 시대 vs. 전쟁 시대

제2차 세계대전 후 지난 약 70여 년 동안 부유한 산업국가들에서 다른 어떤 시기보다 많은 것들이 이뤄졌다. 경제적 공황과 인플레이션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경제적 부의 확산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수준으로 이뤄졌다. 부유한 이들 국가에서도 부의 불평등과 절대빈곤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적 부는 단지 지배계급(ruling class)만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다양한 계층이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제2차 세계대전 초래한 대규모 인명손실과 물리적 파괴 등에 따른 많은 국가들의 경제적 폐허를 딛고 나타난 것이다. 오늘날 모든 국가들, 특히 선진 산업국가들은 무역, 투자, 통신과 여행 등으로 인하여 서로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 대부분의 유럽과 북아메리카의 시민들은 항공교통을 이용한 여행을 즐기고 있다. 그리고 이들 국가들 간의 경제는 더욱 상호의존적으로 되고 있다. 성장과 인플레이션, 공황 등은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전이되기 쉽다. 그렇지만 이들 나라들은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관리하는데 상호 협조를 하는 경향이 있다.

경제적 성과에 대한 이해와 평가 못지않게 부유한 산업국가들 간의 평화로운 관계 유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시각의 이해와 평가가 있어왔다. OECD 회원국들은 1945년 이후 상호 간에

^{†)} 이 원고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HK 평화인문학연구단의 <제1회 평화캠프>의 발제를 위해 작성된 것이다. 원고를 인용하려면 저자에게 email(yhsong@snu.ac.kr)을 통해 사전허락이 있어야만 한다.

군사적 분쟁을 경험하지 않았다. 물리적 군사적 충돌이 없었을 뿐만아니라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전쟁을 준비하는 것도 없었다고 볼 수 있다.¹⁾ 역사적으로 오랜 라이벌인 프랑스인들과 독일인들은 서로를 사랑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상대 국가가 자국에 대한 무력도발을 자행할 것이라 기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역사적 앙금이 남아 있지만 양국이 설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것으로 전망하는 한국인과 일본인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OECD 회원국들은 평화지향적인가? 이에 대한 대답은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회원국들은 회원국이 아닌 국가들로부터 안보의 위협을 느낄 수 있고 그러한 국가와 전쟁을 할 수도 있다. OECD 회원국들은 작고 가난한 국가들을 상대로 그들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폭력을 행사하거나 폭력의 행사로 위협을 하기도 한다. 1956 수에즈 운하에서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정치적 군사적 긴장이 발생하였을 때 미국은 양국이 평화롭게 해결할 것을 강조하면 양국에 대하여 경제적 제재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 사이에 무역수지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호 정치적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였지만 군사적 긴장으로 이어지는 않았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나타나는 국제관계의 특징은 부유한 산업국가들 사이의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회원국들 간의 긴장요소가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들 국가들은 서로를 자국의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요인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나폴레옹 전쟁부터 시작된 유럽에서의 많은 전쟁들은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을 수행할 의지가 있는 국가들에 의해 국제평화는 취약하였다. 그렇지만 소위 이 평화지대(a zone of peace)의 국가들은 서로의 평화를 깰 의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1945년 이후 국제관계에서 전쟁은 저개발국가(less developed countries)에서 발생하였다. 그리고 대부분의 전쟁은 저개발국가들 간에 발생하였다. 폭력적 전쟁이 OECD국가의 영토에서 발생한 사례는 없었다. 냉전기 NATO에 의해 이뤄진 안전보장체제가 작동하여 OECD국가내에서의 전쟁이 없었던 측면도 강하며, 냉전체제의 해체 후 NATO의 역할이 강화되고 보호대상국가들이 확대되면서 회원국가 내에서의 무력분쟁은 발발하지 않고 있다. 반면

1) 사이프러스를 둘러싼 1974년의 그리스와 터키의 물리적 충돌은 예외적이라 하겠다. 하지만 양국은 당시 OECD국가들 중 가장 발전이 더딘 국가들이며, 그리스는 비민주적 군사정부가 통치를 하고 있었다. 또한 바르샤바 조약의 가입국가들은 서방선진국가들을 상대로 전쟁을 준비하기도 하였기 때문이 이 명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거의 모든 내전은 저개발국가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을 상기할 때 세계는 평화지대와 혼돈지대(a zone of turmoil)로 나뉠 수 있다.²⁾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는가? 이에 대한 대답을 구하는 일은 지난한 작업이다. 그렇지만 왜 어떤 사람들은 평화지대에서 그들의 삶을 영위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혼돈의 지대에서 생존을 모색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다면 전쟁과 평화에 대한 인식의 지평은 넓어질 것이다. 이러한 탐구의 과정에서 “전쟁의 원인은 무엇인가?”와 “평화의 원인은 무엇인가?”는 상호배타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질문들이다. 다음 절부터는 왜 부유한 개발국가들 사이에는 전쟁이 없었는지를 이해하려는 국제정치학의 한 주류인 민주평화론(democratic peace theory)이 설명하는 전쟁과 평화의 원인에 대한 잠정적 해답을 검토하고자 한다.

II. 평화: stable peace vs. unstable peace

민주평화론이 이론적 구조를 분석하기에 앞서 ‘평화’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평화는 가장 간단하게는 ‘전쟁 혹은 조직적인 폭력의 사용이 없는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최소주의적 접근은 전쟁과 평화라는 현상을 설명하는데 충분하지 않다. 호전적 개인들이 존재하지 않고 극단적 평화주의자들만 있는 세상을 평화로운 세상이라고 상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안정적인 평화 즉, ‘전쟁을 준비하지 않는 상태’를 평화의 개념으로 채택하기도 한다. 보울딩은 전쟁의 가능성이 아주 낮아서 전쟁이라는 것이 정책적 대안으로 인식되지 않는 상태를 안정적 평화(stable peace), 전쟁이 개연성이 있고 그러한 가능성을 무력으로 통제하는 상태를 불안정적 평화(unstable peace)라고 주장하였다.³⁾ 갈통의 표현을 빌리면 이는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와 소극적 평화(negative peace)로 분류될 수도 있는 개념이다.⁴⁾ 불안정적 평화 혹은 소극적 평화는 억제에 의해서 유지될 수 있는 전쟁부재의 상태라면 각 국가는 항상 억제가 실패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전쟁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2) Max Singer and Aaron Wildavsky, *The Real World Order: Zones of Peace/Zones of Turmoil* (Chatham, NJ: Chatham House, 1993).

3) Kenneth Boulding, *Stable Peace* (Austin, TX: University of Texas Press, 1979).

4) Johan Galtung, “Violence, Peace, and Peace Research,” *Journal of Peace Research* 6:3 (1969), pp. 167–91; *Peace by Peaceful Means: Peace and Conflict, Development and Civilization* (Thousand Oaks, CA: SAGE, 1996).

억제에 의한 평화가 불안정한 이유는 그 작동메커니즘이 일방적이기 때문이다. 즉 억제는 한 국가가 상대 국가에 자신의 행동의지를 설득시키는 과정으로 해당 정책이 상대방에 의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라는 인정을 받고 행위로 이어지는 과정이 있어야 성공적이다. 이러한 상태의 평화를 옹호하는 이들은 억압에 의해 유지되는 평화도 전쟁의 발발보다는 훨씬 나은 상태라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억제에 의한 평화는 강대국과 약소국과의 관계에서 나타나기도 하지만, 국내에서 강자와 약자 사이의 관계에서 나타나기도 한다. 약소국 혹은 약자의 입장에서 물리적 직접적 폭력의 위협의 없이도 정책적 선택 수단이 제한되거나 아예 박탈된 상태가 갈등이 말하는 구조적 폭력(structural violence)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최대주의적 입장의 평화는 이와 같은 구조적 폭력까지 제거되는 상황이라고 해석된다.

OECD 회원국가들의 관계는 안정적 평화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들 국가에서 구조적 폭력이 완전히 부재한다고 할 수는 없다. 북아일랜드의 분리주의 운동, 스페인의 바스크 분리주의 운동은 영국과 스페인 사회의 구조적 비평화구조가 존재함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러한 분리주의 운동마저도 폭력적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공식적으로 폭력혁명을 포기하고 사회통합을 위한 다층적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즉 구조적 폭력을 포함한 비평화구조는 국가 내에서 나타나기는 하지만, 국가 간의 관계에서는 군사적 갈등으로 이어질 정도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III. 민주주의와 평화

민주주의와 평화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최근에 발생한 것은 아니다. 다만 민주평화론의 확산은 소련의 몰락과 사회주의체제의 연쇄적 해체 과정에서 더 이상 서구자유주의와 경쟁하는 이념적 대항체는 없다는 결론에 다다르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특히 자유시장 자본주의와 정치적 민주주의의 우월성에 대하여 후쿠야마의 다음과 같은 주장이 냉전 후 미국 외교정책의 근간이 되면서 민주평화론과 민주주의의 확산은 더 많은 조명을 받게 되었다.

오늘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냉전의 종결 혹은 세계대전 이후 한 시대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종언을 의미한다. 즉 인류의 이념적 발전과 인류의 최종적 정부형태로서 서구의 자유민주주의의 보편화를 의미한다.⁵⁾

후쿠야마의 서구 민주주의의 승리와 역사의 종언과 관련된 тезис는 냉전기 국가 간 전쟁의 감소에 대한 역사적 관찰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렇다고 후쿠야마가 냉전의 해체가 국제분쟁의 완전한 종식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앞으로 전쟁이 발생한다면 서구 자유민주주의를 수용하지 않는 정치체제들 사이의 관계에서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논리적으로 비자유적 국가들끼리의 전쟁이 가능하고 또한 비자유주의적 국가와 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의 전쟁도 가능하다. 그렇지만 민주주의 국가 간의 전쟁은 상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을 것으로 예측되고 널리 수용되었다. 이러한 논리적 추론이 민주평화론의 근거가 되었다.

1990년대 중반부터 10년 동안 민주평화론을 둘러싼 사회과학연구는 엄청난 관심을 받았고, 방대한 분량의 경험연구들이 쏟아졌다. 일부 연구들이 역사적 반증사례를 제시하거나 논리적 추론의 일부 결함을 지적하기도 하였지만, 대부분의 경험적 사회과학연구들은 안정적 민주주의 국가들은 서로를 대상으로 군사적 분쟁을 할 가능성이 매우 낮고 혹은 정치적 긴장이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일부 연구자들은 민주평화론을 법칙에 가까운 이론(law-like theory)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민주평화이론의 주장들은 국가 간의 거리, 동맹의 여부, 경제적 상호의존성 등을 통제변수로 고려했을 때도 통계적 유의미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각 국가가 더 민주적일수록, 양국이 평화적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달리 말하면, 양국이 서로 전쟁을 하거나 군사적 충돌을 외교정책의 수단으로 삼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는 양국 관계에서 서로의 협력적 행위에 대하여 호혜적 행위를 보이기 쉬우며, 이러한 호혜적 협력 행위는 양국 간 상호존중의 관계를 보다 공고화하는데 기여를 하기 때문에 보다 평화적 관계가 유지된다는 것이다. 이렇듯 민주평화론의 경험적 발견들은 양자관계에 해당하는 주장이다. 민주주의 국가가 더 평화로운 정치체제라는 주장은 민주평화론의 핵심적 논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최근의 연구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비민주적 국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정치적 군사적 문제들을 더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함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의 정치체제가 민주주의냐 아니냐는 분쟁의 평화적 관리와 해결에 중요한 요소임에

5) Francis Fukuyama, "The End of History?" The National Interest 16 (Summer 1989), p. 4.

틀림이 없다. 단순히 정치체제의 유사성만이 중요하다면 권위주의체제 혹은 독재체제들 사이에도 평화적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견되어야만 한다. 즉 <그림 1>의 우측 하단의 셀(AA)에서 발견되는 관계가 좌측 상단의 셀(DD)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것처럼 평화적 관계가 발견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중소 국경분쟁, 소련의 동유럽에 대한 무력사용, 중국과 베트남의 영토분쟁을 둘러싼 무력충돌, 에티오피아와 에리트리아의 독립전쟁과 영토분쟁 등은 AA 관계에서 빈번하게 발견되는 전쟁 수행 혹은 무력사용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다. 하지만 DD의 관계는 AA의 관계와 질적으로 달라 보인다. 1917년 우드로 윌슨은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회에서 연설에서 “민주주의 국가들의 파트너십에 의해서만 평화로운 국제체제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하였으며 이는 약 80년이 지난 후 빌 클린턴 대통령의 “민주주의 국가들은 서로 공격하지 않는다”는 연두연설에서 국제사회의 반향을 일으켰다.

<그림 1> 양국 정치체제의 관계

		국가 A	
		민주주의 (D)	권위주의 (A)
국가 B	민주주의 (D)	DD	DA
	권위주의 (A)	AD	AA

부유한 산업국가에서 발견되는 평화지대는 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에서도 발견된다. 즉 현재 모든 OECD국가들은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물론 각국이 유지하고 있는 정치체제는 서로 다른 점도 많이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체제이다. 즉 선거제도의 유지와 견제와 균형의 원칙, 대의제의 원칙 등 원칙에 있어서는 공통적이지만, 실제 제도의 적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많은 회원국들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비민주적 권위주의체제를 유지하기도 하였다. 특히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한국 등은 대표적 독재국가였다. 부유한 개발국가의 정치체제는 저개발국가의 정치체제보다 훨씬 덜 억압적이면서도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1) 문화적, 구조적 이해

민주평화론은 주로 문화적, 구조적 요인을 통해 설명되어진다. 첫째 문화적 설명은 인권에 대한 의식, 작은 정부에 대한 기대, 지배연합의 변화, 정치적 반대에 대한 관용 등과 같은 민주

주의의 특성을 강조한다. 경쟁하고 갈등하는 이해관계의 상충을 폭력에 의존하지 않고 해결하려는 민주주의체제 내의 관행을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에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들은 자신들을 자율적이면서도 자기결정권을 지닌 사람으로 인식하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할 줄 아는 시민으로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국내적 관행은 다른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들에게 적용되어 그들도 자신과 다르지 않게 정치적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가정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사회의 개방성과 외부정보의 자유로운 유입은 다른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여 줄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설명 양국 간에 경제적, 정치적 긴장관계가 형성이 되더라도 서로를 악마적 적 이미지(demonic enemy image)로 바라보는 것을 막아 준다. 정치지도자들이 외부세력을 악마화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치적 결정을 정당화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정치적 긴장이 군사적 충돌로 악화되는 것 또한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도 자신들과 유사한 결정메커니즘에 따라서 행동할 것이라는 기대감 또한 집단적으로 호전적 행동을 취하는 것을 억제해 준다. 이것이 민주주의에 대한 신화이건 현실이건, 경험적 사실들은 이러한 문화적 특성이 민주주의 국가들 간의 폭력의 사용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두 개의 국가가 서로 다른 규범에 근거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을 때 이와 같은 논리적 관계를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비민주적 정치체제하에서 정치권력자는 국민들에 대한 폭력을 일상적으로 행사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곤 한다. 미소 냉전기의 미국의 외교정책은 소련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소련의 지배엘리트들을 대상으로 경쟁하고 투쟁하는 것으로 여겨졌고, 미국인들은 폭력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대소 외교정책을 용인하기도 하였다. 이는 남북관계에서도 적용된다. 북한주민과 북한정권을 분리해서 접근한다는 대북정책의 논리는 대북정책에 폭력적 수단이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며 북한정권은 이러한 주장을 체제의 위협으로 받아들여 호전적 대남정책을 펴게 된다. 즉 서로 다른 규범체제를 가진 두 나라는 상호정책결정과정이 투명성을 의심하게 되어 상호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다.

다른 한편으로 정기적인 선거, 정부의 권력분립, 견제와 균형이 원칙 등과 같은 제도적 장치들은 민주주의 지도자들이 국가를 전쟁으로 이끄는 것을 억제하는 기능을 해 준다.⁶⁾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지도자들은 폭력의 사용이 국가이익을 위해 필수적인 것임을 의회나 물론 행정부와 다양한 이해집단을 상대로 설득을 해야 하는 정치적 부담을 지고 있다. 북핵실험준비에 대한 대북억제 정책으로 한국정부와 관련국가들은 철저한 응징을 할 것임을 주장하지만, 실제 이러한 것들은 정치적 수사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정밀타격이나 전면전과 같은 정책을 수행하려면 국민들을 설득해야 하는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책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민주적 지도자들은 시간이 필요로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설득을 위해 필요한 시간에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도 높아진다. 따라서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들은 다른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들과의 협상을 포기할 가능성이 낮아지고 평화적 해결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구조적 설명의 가장 중요한 주장은 모든 국가의 지도자들은 권력유지하고자 한다는 것이다.⁷⁾ 권력을 유지하는 것은 지도자 본인이 재선에 성공하거나 혹은 자신의 후계자가 권력을 이양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 정치지도자는 권력유지에 필요한 지배연합(winning coalition)을 형성하여야 한다. 즉 충분한 수의 투표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명시적 지지자들의 이해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잠재적 지지자들의 투표를 얻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공공재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가 전쟁을 결정하고 전쟁에서 패배를 한다면 이는 일반적 대중들의 이익실현에 반하기 때문에 선거의 패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영국의 윈스턴 처칠은 전쟁 책임론으로 인하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재선에 실패를 하였다. 반면 국민들의 지지가 수반되는 민주주의 국가의 전쟁은 국가자원의 전폭적 활용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파괴적인 전쟁을 수행할 수 있어진다. 따라서 민주주의 국가는 80퍼센트 이상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으며, 다른 민주주의 국가를 상대로 전면전을 수행하는 것을 꺼릴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이라크의 후세인, 리비아의 카다피 등은 권좌에서 축출되기가 어려웠다. 시리아와 베네수엘라의 지도자들도 권력에서 쫓겨나기 어렵다. 북한의 3대세습 권력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정치에서 찾아볼 수 없는 강고한 독재권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이 전쟁을 수행한다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고통에 신음할 수밖에 없지만, 국민들은 자신들의 지도자를 선거

6) Kenneth A. Schultz, "Do Domestic Institutions Constrain or Inform? Contrasting Two Institutional Perspectives on Democracy and War," *International Organization* 53:2 (Spring 1999), pp. 233-66; Bruce Bueno de Mesquita, James Morrow, Randolph Siverson, and Alastair Smith, "An Institutional Explanation of the Democratic Peac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3:4 (December 1999), pp. 791-807; Daniel Reiter and Allan C. Stam, *Democracies at War*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2).

7) Bruce Bueno de Mesquita, James Morrow, Randolph Siverson, and Alastair Smith, *The Logic of Political Survival* (Cambridge, MA: MIT Press, 2003).

혹은 다른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교체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들의 정치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총복들, 비밀경찰, 군대조직의 지지를 공고히 하기 위한 정책을 선호한다. 그들이 전쟁을 수행하는 것을 꺼릴 수 있는 상황은 자신의 독재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지배연합의 지지를 상실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이다.

문화적 설명과 구조적 설명은 상호 경쟁적 주장이라기보다는 상호 보완적 주장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양한 요인들이 정책결정자들의 전쟁과 관련된 구조적 조건과 정책적 의지에 영향을 미친다. 규범적 문화적 설명은 민주적 규범을 공유하고 있는 정치지도자들이 서로를 대상으로 전쟁을 수행할 정책적 의지를 줄여주며, 국내의 제도적 장치들은 정치지도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위협에 빠뜨리는 전쟁을 선택할 가능성을 줄여준다. 따라서 민주평화론은 국내정치와 국제정치를 연결시키는 시각에서 이해되어야만 한다.

IV. Kantian Peace?

역사적 맥락에 대한 해석은 달라질 수 있지만, 칸트의 영구평화론의 기본테제는 민주평화론의 확산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칸트의 영구평화론의 "definitive articles for perpetual peace among states"는 다음과 같다:

- 1) The civil constitution of every state should be republican.
- 2) The law of nations shall be founded on a federation of free states.
- 3) The law of world citizenship shall be limited to conditions of universal hospitality.⁸⁾

칸트에게 공화정은 개인적 자유와 평등을 법으로 보장하고 정부 내 입법부와 행정부의 분리를 보장하는 헌법적 질서를 의미한다. 칸트는 민주적 형태의 정부를 다수의 정치적 의지가 소수에게 투영되는 전제정이라고 비판을 하였다. 칸트가 비판하는 민주정을 직접민주주의에 해당하며 칸트의 공화정은 오늘날의 대의제 민주주의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 공화정 하에서 전쟁은 시민들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지도자들은 전쟁의 참화에 대한 모든

8) Immanuel Kant, *Perpetual Peace, and Other Essays on Politics, History, and Morals*, translated and with an introduction by Ted Humphrey (Indianapolis, IN: Hackett, 1992).

책임을 고려해야 하는 아주 신중한 결정이기 때문에 평화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칸트는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앞서 논의한 민주평화론의 구조적 설명과 유사하다.

칸트가 주장하는 자유국가들의 연합(a federation of free states)은 국제법에 의해 보장되는 느슨한 형태의 국가연합으로서 미국과 같은 연방제도 아니고 세계정부를 의미하지도 않는다. 칸트는 모든 국가들이 대표를 파견하는 평화연합(pacific union)이 형성된다면 참여국가들이 국가 간의 법치라는 아이디어에 동의할 하게 되고 이는 국가들이 보다 평화적인 정책을 결정하게 되는 이유라고 생각하였다. 오늘날 가장 큰 규모의 국가연합은 UN이지만 UN의 구조는 칸트가 생각한 국가연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OECD 혹은 EU가 칸트의 국가연합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칸트는 세 번째 테제에서 개인들은 다른 나라에서도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하며 자국에서도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동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칸트는 유럽의 상업주의가 경제적 활동을 구실로 원주민들을 상대로 착취하는 것을 비판하였다. 동시에 그는 지중해와 대서양 국가들과의 자유무역을 방해하는 바바리 해안지역의 토착민들도 비판을 하였다. 그가 세계시민을 주장하는 많은 이유 중 하나는 사람들 간의 자유로운 무역이 국가가 평화적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는 오늘날 국가 간 경제적 상호의존성의 증가가 평화적 관계를 증진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1) 경제적 상호의존성

경제적 상호의존성은 한 국가에는 경제적 부를 위한 물적자원을 제공하고 다른 국가에는 경제적 안정을 제공한다. 교역상대 국가가 재화 혹은 서비스를 구매할 충분한 능력이 없다면 국가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다. 대규모 경제력을 지닌 국가는 자국내 생산과 소비로 경제를 운영해나갈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국가들은 다른 나라의 경제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OECD국가들 간의 무역량은 회원국들의 국제무역량의 약 80%를 차지한다. 또한 OECD국가들의 총무역량은 평균적으로 회원국들 GNP의 1/3 이상을 차지한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당시의 경제적 상호의존은 지금의 경제적 상호의존보다 훨씬 약했다. 경제공황이 발생했을 때 현재만큼 무력사용에 따른 무역관계의 단절이 국가경제에 주는 타격은 크지 않았던 것이다. 즉 무역 상대국에 대한 폭력의 사용은 상업적 교역의 중단을 야기

하며, 수입업자의 상품과 서비스의 반입을 어렵게 하며 수출업자의 시장을 위협에 빠트리려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자국의 자본과 시설을 투자한 교역국과 전쟁을 한다는 것은 그 자본과 시설에 대한 파괴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선택하기 전에 정부 간 대화만이 아니라 각국의 기업들도 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사회적 의사통로의 채널을 활용한다.

특히 정치학과 사회학을 중심으로 전개된 무역과 전쟁을 둘러싼 연구들은 양국 간 무역이 증가할수록 전쟁을 할 확률이 떨어진다고 주장을 하였다. 무역의 이러한 영향은 국가 간 거리, 상대적 힘, 동맹 등과 함께 민주적 거버넌스의 평화적 정책지향성을 높여주는 요인임이 밝혀지기도 하였다.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높은 민주주의의 국가 간에도 분쟁이 발생한다. 미국과 일본 간에 무역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며, 한-일, 한-미 사이에도 무역분쟁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분쟁이 무역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찾아보기 힘들다.⁹⁾

양국관계에 의해 유도되는 평화적 관계만이 아니라 한 국가의 성격에 따른 경제의 평화적 효과를 설명하는 이도 있다. 슈페터(Joseph Schumpeter)는 산업이 발전한 사회의 시민들일수록 상업적 활동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고, 상업활동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이해도 다른 국가의 시민들의 그것과 비교하여 상당히 높다.¹⁰⁾ 따라서 이들은 심지어 제국주의시대 중상주의 정책에 의한 전쟁도 국민전체의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기보다는 일부 특정계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하게 되고 이에 따라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수 있다. 즉 슈페터의 주장에 의하면 산업화되고 부유한 국가일수록 평화지향적이며 국제평화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경제적 상호의존성 이외에도 중요한 경제적 평화요인은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등이 있다. 1920년대와 30년대의 경제공황에 따른 경제저성장은 제2차 세계대전의 한 원인으로 지적된다. 경제저성장 위기에 직면하여 산업국가들은 보호무역정책을 취하게 되고 그 결과 이웃나라의 경제적 자원을 탐하게 되어 전쟁을 감행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경제적 성장률이 높은

9) Bruce Russett and John Oneal, *Triangulating Peace: Democracy, Interdependence,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New York: Norton, 2001); Edward Mansfield and Brian Pollins, eds, *Economic Interdependence and International Conflict: New Perspectives on an Enduring Debate* (Ann Arbor, MI: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3).

10) Joseph Schumpeter,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New York: Harper Torchbooks, 1950).

OECD국가들에서는 이웃의 물건을 탐하는 beggar-thy-neighbor 정책을 취하는 경향이 낮다. OECD 회원국들 사이의 경제성장률과 국민총수입의 차이는 OECD회원국들과 비회원국들 사이의 차이보다 훨씬 작다.

국가 부의 분배도 OECD국가들에서 상대적으로 더 평등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1>에서 나타나듯이 상위 20%의 수입을 버는 사람들은 OECD회원국에서는 39%의 국부를 나눠 가지나 다른 국가들에서는 49%의 국부를 나눠 가진다. 그리고 하위 20%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OECD국가들에서 상대적으로 2% 더 많은 8%의 국부를 나눠 가지고 있다.

<표 1> 국가 부의 분배도

소득계층	OECD 국가들	비회원국들
상위 20%	39%	49%
	23%	21%
	17%	14%
	13%	10%
하위 20%	8%	6%

즉 많은 규모의 국부와 국부의 균등한 분배는 많은 시민들이 전쟁에서 잃을 것이 얻을 것보다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산업국가들 사이에서 대규모 전쟁은 승자나 패자에게 모두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밖에 없으며 지배엘리트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 이를 이해하기 때문에 전쟁을 정책의 수단으로 삼기가 어렵게 된다. 전쟁으로 인하여 경제적 성장은 중단될 것이며, 건물과 사회 경제적 간접시설도 파괴될 것이며, 국민들의 생활을 위해 활용되어야 할 국부는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부유하고 경제적으로 성장을 거듭하는 국가들일수록 서로를 상대로 심각한 전쟁을 벌일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이다.¹¹⁾

2) 국제기구 공동가입

국제기구의 역할에 대한 대부분의 설명은 민주평화론의 문화적 설명과 구조적 설명과 유사하다. 민주주의 국가들 간의 평화는 국내의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외현화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조직과 규범, 그리고 규칙들은 사회에서 분쟁과 갈등을 관리하고 조정하는데 정책결정자들의 비용을 줄여 준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등은 이와 같이 다양한 수준에서의 갈등의 관리와 조정을 위한 의사소통의 공간을 마련해 주며, 시민들을 사회화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사회적 규범을 준수케 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즉 개인들 간의 거래비용(transaction costs)을 줄여 준다.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지도자들은 국제기구와 국제법을 국내의 사회조직과 국내법을 활용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기대된다. 국제기구와 국제법은 국가안보의 문제와 관련된 이슈를 다룰 때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이유는 대부분의 국제기구들이 각국 정부의 행위를 강제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는 국내기구가 하는 것과 유사한 기능을 하기도 한다. 국제기구들도 공공재를 제공하기도 하며 국제규범을 준수하지 않는 국가들을 상대로 제재를 가하기도 한다.

일단 국제기구는 국제규범을 준수하지 않는 국가들을 지정하고 그에 대하여 제재를 가한다. 냉전시대에 나토의 연례보고서는 회원국들이 각 상황에서 어떻게 협력적으로 행위할 것인가를 예상할 수 있도록 각국이 나토 동맹에 기여하는 바들을 상세히 기술하였다. 이러한 보고서의 내용들은 각국의 특성을 파악하고 향후 위기 시 대응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특히 민주주의 국가들은 정부 간 국제기구를 분쟁의 방지 수단만이 아니라 분쟁의 관리 및 해결수단으로 활용한다.¹²⁾

국제제도 역시 집단적 결정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국제적으로 합의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 간 국제기구에서 발전된 규범과 규칙들은 군비통제의 효과를 가져오기도 하고 무력의 사용을 부당한 것으로 여기는 근거가 된다. The Agency for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은 이 지역의 비핵무기지대화의 실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국제기구를 통해 공유된 규범과 가치는 각 국가들의 협력적 행위를 증대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하게 된다.¹³⁾

11) Stephen Brooks, "The Globalization of Production and the Changing Benefits of Conquest,"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43:5 (October 1999), pp. 646-70.

12) Gregory A. Raymond, "Democracies, Disputes, and Third Party Intermediarie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38:1 (March 1994), pp. 24-42; William J. Dixon, "Democracy and the Peaceful Settlement of International Conflict,"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8:1 (March 1994), pp. 14-32.

13) Michael N. Barnett and Martha Finnemore, "The Politics, Power, and Pathologie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 53:4 (Autumn 1999), pp. 699-732.

일부 연구들은 복잡한 국제정부 간 기구의 멤버십들의 확산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의 발발을 감소시켰음을 밝히고 있다.¹⁴⁾ 그렇지만 더 많은 이론적 경험적 연구가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동맹이 국제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적 기능과 관련된 국제제도가 국가 행위에 미치는 방식을 다룰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설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21세기에 들어서서 냉전기에 주목을 받았던 국제통합과 안보공동체에 대한 개념은 새로운 안보의 위협과 국제기구의 역할에 대한 기대로 인하여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지만, 새롭게 등장하는 이슈와 기존의 이론과의 논리적 연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더욱 발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V. 민주화와 평화

민주평화론에서 추가로 중요하게 다뤄지는 개념은 민주화(democratization) 혹은 민주주의의 안정화(stabilization of democracy)이다. 왜 민주화 혹은 정치적 변화가 국가의 외교적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가는 어렵지 않아 보인다. 새롭게 등장한 정치체제가 민주주의이건 권위주의이건 그 체제는 불안정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불안정한 국가일수록 주변국가들로부터 다양한 이유로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예를 들면 1980년에 이란에서 새로운 혁명 정부가 들어섰을 때 이라크의 후세인 대통령은 이란의 경제적 자원을 확보하고 자국의 안보위협요인을 제거한다는 명목으로 이란과 전쟁을 하였다. 민주화의 과정에서도 정치체제의 불안정은 주변국들로 하여금 민주화를 꾀고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군사력을 사용할 가능성을 높여준다.

그런데 민주화가 일단 안정화단계에 이르면 분쟁의 확산효과는 사라질 수 있다. 민주화 이후 안정단계에 접어든 일부 국가들은 인종과 종교의 문제로 인해 정치적 긴장상태에 놓이기는 하지만 대규모 살상을 피하면서 긴장상태를 관리하거나 해결하는 경향이 강하다. 민주주의는 대량살상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때문에 전국적 규모의 대량살상은 발생하기 어렵다. 다만 소수그룹에 의한 다른 소수 그룹에 대한 대량살상의 발생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규범적 기대에 불과하다. 따라서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14) Russett and Oneal, *Triangulating Peace*, ch. 5.

전국적 내전의 발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소극적 평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쟁의 영구적 해결은 아닌 것이다.

정치적 불안정만이 아니라 민주화를 경험하는 국가들은 경제적 불안정을 경험하곤 한다. 탈냉전기 초반 동유럽 국가들은 갑작스런 경제적 지표의 하락을 경험하여야만 하였으며 많은 시민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상실감 때문에 고통을 받아야만 했다. 일부 국가들은 자유시장경제에 안정적으로 합류하였지만 일부 국가들은 민주화의 과정에서 역행하여 권위주의적 정권이 선거를 통하여 재집권하였다.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이 이에 해당하는 국가들이다. 즉 민주화는 비가역적 단선적 발전과정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권위주의적 정치체제로 역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민주주의가 안정화되던지 안정되지 못하였던지 민주화의 과정 자체가 국제평화에 위협요인이 되기도 한다. 민주화를 경험하는 국가들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충족시켜야 하고 다양한 인종들의 이해관계도 충족시켜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떠안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족주의의 등장과 국내적 문제의 국제화를 통하여 국내 도전세력을 억압하려는 정치적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그리고 주변의 권위주의적 국가들은 민주화를 경험하는 국가들을 약한 국가로 생각하고 침략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그런데 군사적 분쟁에 관련되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아직까지 민주화를 경험하고 있지만 완전히 민주주의 제도를 정착시키지 못한 국가들이다. 민주주의 제도를 정착시키는 국가들이 전쟁을 수행할 확률은 급감한다.¹⁵⁾ 따라서 가장 위협적인 국가들의 쌍은 민주화를 경험하고 있는 국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

VI. 결론

민주평화론은 국제관계에서 최소한 양국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서로 규범을 공유하고 있는 국가들끼리 그리고 민주적 통치원리가 작동하는 국가들끼리는 서로 전쟁을 할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전쟁과 평화의 원리를 인간의 본성이나 국내정치적 요인, 혹은 국제정치의 구조적 요인에서만 찾던 논의에서 벗어나 국내정치와 국제정치의 연계를 강조하는

15) Jack Snyder, *From Voting to Violence: Democratization and Nationalist Conflict* (New York: Norton, 2000).

이론이다. 민주주의의 제도화와 안정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국제적 소통구조의 마련 또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 국가 혹은 그룹에 의해 다른 국가의 정치 체제를 일방적으로 바꾸는 것은 불안과 갈등요소를 온전하게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전쟁보다는 평화를 국제관계의 일반적인 모습으로 상정하는 것이 민주평화론의 기본적 가정임은 적극적으로 논의되지 않아 왔다. 전쟁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평화개념보다는 평화 그 자체를 확립하기 위한 규범적 문화적 구조적 조건들을 탐구하는 것이 민주평화론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물론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민주주의를 어떻게 평가하고 측정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떤 평화인가?’ ‘어떻게 민주주의를 안정화할 것인가?’ ‘모든 국가들이 민주주의 국가가 된다면 전쟁을 사리질 것인가?’ 라는 근본적 질문들이 아직 해결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부유하고 산업이 발전한 민주주의 국가들은 서로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тезис는 경험적으로 타당하다. 일부 연구자들은 사실적 법칙이라고까지 주장하지만 아직까지 민주평화론은 미완의 질문들이 남아있는 잠정적 가설로 수용되어야 할 것이다.

제1회 IPUS 평화캠프 참가자 명단

번호	이름	남녀	소속
1	임현묵	남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	오창익	남	인권연대
3	정지석	남	“평화의 씨앗, 국경선평화학교”
4	김성철	남	통일평화연구원
5	송영훈	남	통일평화연구원
6	이동기	남	통일평화연구원
7	이문영	여	통일평화연구원
8	이찬수	남	통일평화연구원
9	노영지	여	통일평화연구원
10	임수진	여	통일평화연구원
11	서정기	남	연세대학교 교육연구소
12	오명원	남	인권연대
13	박용석	남	인권연대
14	최아람	여	인권연대
15	이현아	여	국경선평화학교
16	김태훈	남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17	조흥주	남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8	박지호	남	Eastern Mennonite University
19	지민주	여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20	문정원	남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1	정찬형	남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22	최수지	여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23	최원준	남	인하대학교 사학과
24	장윤석	남	백신고등학교
25	한준성	남	통일평화연구원
26	이숙현	여	통일평화연구원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